

#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예산안분석시리즈 V

#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20. 11.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10. 23.)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3.0조원, 총지출 5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선도형 국가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NewDeal)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43.5조원 (8.5%)을 증액하는 한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일자리사업·정책금융사업·한국판 뉴딜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 일 권



## 제 1 부

## 총괄 분석

### I. 2021년도 예산안 개관 / 1

|                        |   |
|------------------------|---|
| 1. 2021년도 예산안 개요 ..... | 1 |
|------------------------|---|

### II. 2021년도 예산안 총평 / 2

|                  |   |
|------------------|---|
| 1. 재정총량 분석 ..... | 2 |
|------------------|---|

### III. 재정 총괄 분석 / 4

|                                                   |    |
|---------------------------------------------------|----|
|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 4  |
| 2. 예산총칙안 분석 .....                                 | 5  |
| 3. 12대 분야별 분석 .....                               | 9  |
| 4.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                           | 10 |
| 5. 세입예산안 분석 .....                                 | 11 |
| 6.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                          | 12 |
| 6-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                          | 12 |
| 6-2.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                | 12 |
| 6-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            | 12 |
| 6-4. 복권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                  | 13 |
| 6-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               | 14 |
| 6-6. 기타 사항 .....                                  | 14 |
| 6-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 | 14 |



|                                     |    |
|-------------------------------------|----|
|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         | 15 |
|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        | 15 |
|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      | 16 |
| 7-3.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와 예산안 연계 .....   | 17 |
| 7-4. 기금준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           | 17 |
| 8.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       | 19 |
| 9.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 20 |
| 10.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 | 21 |

#### IV. 유형별 분석 / 22

|                                   |    |
|-----------------------------------|----|
| 1.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과제 .....     | 22 |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             | 24 |
|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            | 25 |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          | 26 |
| 5.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       | 27 |
| 6.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          | 28 |
| 7.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              | 30 |
| 8. 법령·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         | 31 |
| 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 | 32 |

#### V. 정책별 분석 / 33

|                                        |    |
|----------------------------------------|----|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             | 33 |
| 2. 소비활력제고 사업 예산안 분석 .....              | 35 |
| 3.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 | 36 |



|                                      |    |
|--------------------------------------|----|
| 4.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         | 37 |
| 5. 한국판뉴딜 예산안 분석 .....                | 38 |
| 6.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       | 40 |
| 7. 8대 사회보험 운용계획안 분석 .....            | 41 |
| 8. 복지분야 현금성 지원사업 분석 .....            | 43 |
| 9.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예산안 분석 .....          | 44 |
| 10. 재난안전 사업 예산안 분석 .....             | 45 |
| 11.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지원 예산안 분석 ..... | 47 |
| 12. 국방분야 예산안 부문별 분석 .....            | 48 |



## 제 2 부

## 위원회별 분석

### 제1장 | 국회운영위원회

#### I.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53

#####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 예산 면밀한 검토 필요 ..... 53

#### II. 대통령경호처 / 54

##### 【개별 사업 분석】

1. 경호업무전산화 사업 일반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 54

#### III. 국회 / 55

##### 【개별 사업 분석】

1. 방문자센터 운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필요 ..... 55
2. 자료보존관 근무직원 주택보조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 ..... 55



#### IV. 국가인권위원회 / 56

##### 【개별 사업 분석】

- 1. 직원역량강화 교육 급식비를 국내여비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 ..... 56
- 2. 북한이탈여성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유사사업과 차별화 필요 ..... 56

### 제2장 | 법제사법위원회

#### I. 법무부 / 59

##### 【주요 현안 분석】

- 1.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관련 법무부 역할 강화 필요 등 ..... 59
- 2.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편성의 문제점 ..... 60
  - 2-1. 일반회계: 벌금 및 과료 수납액 감소 추이에 따른 세입예산 적정수준 편성 필요 .... 60
  - 2-2.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소 수입의 적정예산 편성으로 특별회계 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괴리 최소화 필요 ..... 60
  - 2-3. 범피해자보호기금: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 정확성 제고 필요 ... 61
- 3.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재설정 또는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업 ..... 62
  - 3-1.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 62
  - 3-2. 법률구조 사업: ‘임대차분쟁조정 수혜자 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 62
  - 3-3. 전자감독 사업: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추가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63



### 【개별 사업 분석】

1. 공증사무대행청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필요 ..... 64
2.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65
  - 2-1.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 65
  - 2-2.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숙박업자 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 ..... 65
3. 검찰운영 단위사업의 ‘구호 및 교정비’ 집행을 부진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 ..... 66
4. 검찰국외훈련 연례적 예산편성과 집행 불일치 개선 필요 ..... 66
5.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관련 예산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67
6. 대체복무 시설의 완공시기를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필요 ..... 67
7.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교도소운영기본경비 사업의 포상금 집행실적 제고 및 적정소요 반영 필요 ..... 68

## II. 법제처 / 69

### 【개별 사업 분석】

1. 행정기본법안 심의경과를 고려하여 예산규모 조정 필요 ..... 69
2. 법령용어 발굴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 반영 필요 ..... 69

## III. 감사원 / 70

### 【개별 사업 분석】

1.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연수 계획 수립 필요 ..... 70



#### IV. 대법원 / 71

##### 【개별 사업 분석】

- 1. 법관 보수 등 편성 규모 검토 필요 ..... 71
-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주요 정보화사업 면밀한 추진 필요 ..... 71
- 3.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분리 편성 검토 필요 ..... 72
- 4.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조정 검토 필요 ..... 72

#### V. 헌법재판소 / 73

##### 【개별 사업 분석】

- 1. 헌법재판소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 73

### 제3장 | 정무위원회

####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77

##### 【주요 현안 분석】

- 1.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개선 필요 ..... 77

##### 【개별 사업 분석】

- 1.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 대상의 대표성 확보 필요 ..... 78
- 2.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예산의 자의적 이월 시정 필요 ..... 78



## II. 국민권익위원회 / 79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고충민원 처리 관련 분석 ..... | 79 |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민원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 | 80 |
| 2.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   | 80 |
| 3.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필요 .....    | 81 |

## III. 국가보훈처 / 82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보훈급여금 체계 개선 필요 .....                   | 82 |
| 2.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              | 82 |
| 2-1.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 82 |
| 2-2. 일자리 두드림 사업 내실화 필요 .....              | 83 |
| 2-3. 구직급여 인상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적정 지급 수준 검토 ..... | 83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및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재검토 .....                | 84 |
| 1-1. 유엔사 근무장병 등 초청 사업과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사업 통합 편성 필요 ..... | 84 |
| 1-2.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                  | 84 |
|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관리 강화 .....                    | 85 |
| 3. 월남전참전자회 기념사업 지원 예산 중복 편성 문제 .....                  | 85 |



|                                     |    |
|-------------------------------------|----|
| 4. 보훈기금 수입에 88골프장 매각 대금 제외 필요 ..... | 86 |
|-------------------------------------|----|

#### IV. 공정거래위원회 / 87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분석 .....                          | 87 |
| 1-1. 과징금 환급 관리 필요 .....                             | 87 |
| 1-2. 과징금 미수납률 축소 노력 필요 .....                        | 87 |
| 2. 기업집단 사익편취 금지제도 관련 분석 .....                       | 88 |
| 2-1.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88 |
| 2-2.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제고 등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유도 필요 ..... | 88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위반행위 적발 강화 필요 .....   | 89 |
| 2. 통계·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 89 |
| 3. 공정거래지원 사업 관련 고려사항 .....                | 90 |

#### V. 금융위원회 / 91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효과적인 뉴딜펀드 조성 및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 91 |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투자실적을 고려한 출자예산 조정 가능성 논의 필요 .....                      | 92 |
| 1-1. 증권시장안정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실적 부진에 따른 출자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 | 92 |
| 1-2. 산업은행 BIS비율 수준을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                     | 92 |
| 2. 공공부문의 출자비중 축소 검토 필요 .....                              | 93 |
|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집행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 93 |
| 4. 효과적인 코넥스 신규상장 기업 지원방안 강구 필요 .....                      | 94 |
| 5. 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논의 필요 .....                     | 94 |
| 6.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축소 조정 필요 .....                         | 95 |
| 7.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노력 필요 .....                          | 95 |
| 8.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 96 |

## V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7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사업 예산안 재검토 필요 .....             | 97 |
| 1-1.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 양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재검토 필요 ..... | 97 |
| 1-2.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전문교육 운영의 적정 예산 검토 필요 .....   | 97 |



## 제4장 | 기획재정위원회

### I. 기획재정부 / 101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분석 .....                                                 | 101 |
| 1-1.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정보 공개 필요 등 .....                                | 101 |
| 1-2.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일부 항목의 면밀한 검토 필요 .....                                 | 101 |
| 2. 국유재산관리 제도 개선사항 제언 .....                                               | 102 |
| 2-1.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세입예산간 정합성 확보 필요 .....                                     | 102 |
| 2-2. 국유재산특례지출 신설 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                                      | 102 |
| 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개선 필요 .....                                              | 103 |
| 3-1. 청관사 취득사업 계획액 편성시 집행가능성 검토 강화 필요 .....                               | 103 |
| 3-2.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의 재검토 필요 .....                                   | 103 |
| 4. 정부출자수입 관리 강화 필요 .....                                                 | 104 |
| 4-1. 정부배당대상기관 배당규모 결정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br>제시한 중기목표 등 고려 필요 ..... | 104 |
| 4-2.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수입 예산 계상의 원칙 준수 필요 .....                                 | 104 |
| 5. 조세지출 증가추세 관리 필요 .....                                                 | 105 |
| 6. 외화표시 외평채 원화 환산액의 정확도 제고 필요 .....                                      | 105 |
| 7.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방안 마련 필요 .....                                 | 106 |
| 8. 공공자금관리기금 회계·기금 예수금 관리 필요 .....                                        | 106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원칙 정립 필요 등 .....        | 107 |
| 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 107 |
| 2-1.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 107 |
| 2-2. 재정증권 발행 대비 일시차입의 비중 최소화 필요 .....     | 108 |
| 3.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분석 .....         | 108 |
| 4.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 109 |
| 5.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 보완방안 .....                | 109 |
|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용역보고서 공개시기 조정 필요 .....   | 110 |
| 7.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        | 110 |

## II. 국세청 / 111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근로장려세제의 결정통지서 발송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 111 |
| 2. 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 법률의 연계 검토 필요 .....   | 111 |
| 3. 국세통계센터 이용 공공기관 확대 노력 필요 등 .....    | 112 |
| 4. 감정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성과 모니터링 필요 .....  | 112 |
| 5.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 혜택 홍보 강화 필요 .....      | 113 |
| 6. 세정홍보 사업 예산의 통합 필요 .....            | 113 |



### Ⅲ. 관세청 / 114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관세 행정과 관련된 분석 .....                     | 114 |
| 1-1. 관세 부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제고 .....             | 114 |
| 1-2.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능력 제고 필요 등 .....          | 114 |
| 1-3. 재조사 결정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노력 필요 .....      | 115 |
| 1-4.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  | 115 |
| 2.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통관 역량 강화 필요 .....          | 116 |
| 2-1. 특송물류센터의 자동화 처리비율 제고 필요 .....          | 116 |
| 2-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의 면밀한 추진 필요 ..... | 116 |
| 3. 관세국경에서의 밀수감사·단속 역량 강화 관련 .....          | 117 |
| 3-1. 밀수 단속을 위한 감시 장비 도입·운영 관련 .....        | 117 |
| 3-2.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 관련 .....      | 117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분석 .....                   | 118 |
| 1-1.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사업의 단계적 확대 필요 .....        | 118 |
| 1-2. 휴대용 화물투시기 및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관련 개선 필요사항 ..... | 118 |

### Ⅳ. 조달청 / 119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 119 |
| 2. 면밀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설계 필요 .....  | 119 |
| 3.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력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 120 |



#### 【개별 사업 분석】

- 1.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사업 진행절차 조속 완료 필요 ..... 121
- 2. 마스크 비축물자 관리 필요 ..... 121

### V. 통계청 / 122

#### 【주요 현안 분석】

- 1. 경제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122
- 2.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내실화 필요 ..... 122

#### 【개별 사업 분석】

- 1. 통계데이터센터 비대면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필요 ..... 123
-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123

## 제5장 | 교육위원회

### I. 교육부 / 127

#### 【주요 현안 분석】

- 1. 지방교육정책 지원 사업의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등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27



|                                                         |     |
|---------------------------------------------------------|-----|
| 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코로나19 및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우선순위 검토 등 ..... | 128 |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                    | 129 |
|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129 |
| 3. EBS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                       | 130 |
| 4.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의 대면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 130 |
| 5.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협력 필요 ..... | 131 |
| 6. 사학혁신 지원 사업 출연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 등 .....                        | 131 |
| 7.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 .....                      | 132 |
| 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                     | 132 |
| 9.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등과 중복 우려 ...           | 133 |
| 1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의 집행 관리 필요 등 .....                        | 133 |

## 제6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7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인공위성·달 탐사 분야 R&D사업 예산안의 현황 및 문제점 ..... | 137 |
|-------------------------------------------|-----|



|                                                                       |     |
|-----------------------------------------------------------------------|-----|
| 1-1. 달 탐사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                             | 137 |
| 1-2.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 예산안 및 3호 개발 일정의 면밀한 검토 필요 .....                    | 137 |
| 2. 바이오의료 분야 R&D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138 |
| 2-1.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기존사업 연계·활용 방안 구체화 필요 .....                            | 138 |
| 2-2.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                                    | 138 |
| 2-3. 산·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규모 적정검 검토 및 수요기관을 고려한<br>기술개발 추진 필요 ..... | 139 |
| 2-4.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 139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국제공동연구 추진<br>방안 마련 필요 등 .....        | 140 |
| 2. 수소 분야 R&D 사업 간 중복 최소화 및 연계 추진 필요 .....                               | 140 |
| 3. 일물관리혁신으로 지정된 STEAM연구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 141 |
| 4.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집행 내용과 상이한 예산안 편성 개선 필요 등 ....                          | 141 |
| 5. 이공계스마트인재양성지원 사업의 기존사업 연계성 강화 및 콘텐츠 활용 확대 방안<br>마련 필요 .....           | 142 |
| 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 기존사업 및 혁신구매목표제 운영<br>성과 점검 후 지원 검토 필요 ..... | 142 |
| 7.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체계를<br>구체화 할 필요 .....          | 143 |
| 8.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예산안의 감액 조정 필요 .....                                  | 143 |
| 9.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의 기금수입을 고려한 세출사업 편성 필요 .....                            | 144 |
|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적정수준 조정 필요 .....                              | 144 |



|                                                          |     |
|----------------------------------------------------------|-----|
| 11.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145 |
| 12.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 수행방식 변경 검토<br>필요 ..... | 145 |
| 13. 지하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사업의 면밀한 ISP 수립 필요 .....               | 146 |
| 14.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개선 필요 .....                  | 146 |
| 15.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기존 미디어센터 지원 사업과 차별화 필요 .....      | 147 |
| 16.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                        | 147 |
| 17.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              | 148 |

## II. 방송통신위원회 / 149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149 |
| 2.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 149 |
| 3.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강화 필요 ..... | 150 |

##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 151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업 세부계획 및 추진체계 고도화<br>필요 등 .....   | 151 |
| 2. 한울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수행주체 명확화 이후<br>추진 필요 ..... | 152 |
| 3.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의 수요발굴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152 |



## 제7장 | 외교통일위원회

### I. 외교부 / 155

#### 【주요 현안 분석】

- 1. 신규 국제행사 사업의 문제점 ..... 155
  - 1-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와 P4G 정상회의 예비계획 마련 필요 ..... 155
  - 1-2.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행사대행 경비 예산안에 편성 필요 ..... 155
  - 1-3. 한-유엔 관계 30주년 기념 세미나 세부계획 마련 필요 ..... 156
  - 1-4. 고용부담금(320-09목)은 일용임금(110-04목)과 별도로 편성할 필요 ..... 156
  - 1-5. 직접 수행 가능한 행사예산 별도 편성 필요 ..... 157
- 2. 구)프랑스문화원 조속한 매각으로 예산 절감 등 필요 ..... 158
- 3. 통일성있게 자문, 컨설팅 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 158

#### 【개별 사업 분석】

- 1. 민간경상보조 증액 부적절 ..... 159
- 2. 신남방 보건협력 강화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간 차별화 필요 ..... 159
- 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응시자격에 전역예정자 포함 필요 ..... 160
- 4. 국민외교센터 운영 예산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할 필요 ..... 160
- 5. 파견직원 임차료, 임차보증금 등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할 필요 ..... 161
- 6.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아제르바이잔(ODA) 예산안 편성 필요 ..... 161



## II. 통일부 / 162

### 【주요 현안 분석】

- 1. 남북협력기금 주요 증액사업 분석 ..... 162
  - 1-1.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 등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 162
  - 1-2. 보건의료협력 및 축산방역협력 사업 계획안의 문제점 ..... 162
  - 1-3.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 사업 추진계획 점검 필요 ..... 163
- 2.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문제점 ..... 164

### 【개별 사업 분석】

- 1. 통일+센터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 165
- 2. 특정 목적 연구사업의 통합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 165
- 3.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추진계획 검토 필요 ..... 166
-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정비 필요 ..... 166
- 5.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167

##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68

### 【개별 사업 분석】

- 1.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제작 비용 등 비목에 맞게 편성할 필요 ..... 168
- 2.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와 해외 우리고장 평화플랜 일정 연계 개최 검토 필요 ... 168



## 제8장 | 국방위원회

### I. 국방부 / 171

#### 【주요 현안 분석】

- 1. 군 공항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시행 관련 예산 분석 ..... 171
  - 1-1.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개선 사항 ..... 171
  - 1-2.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재개 관련 고려사항 ..... 171
  - 1-3.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 조정방안 검토 필요 ..... 172
- 2. 군 경계 강화 관련 예산 분석 ..... 173
  - 2-1. 경계 과학화(CCTV)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3
  - 2-2. 경계시설 사업의 대폭 증액을 고려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173
- 3. 군 인건비 사업 예산 분석 ..... 175
  - 3-1. 당초 계획과 다른 병 봉급 인상 문제 ..... 175
  - 3-2. 부서관 정원 확대를 고려한 운영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175
  - 3-3. 군무원 및 민간인력 증원 시 장애인고용 촉진 노력 필요 ..... 176

#### 【개별 사업 분석】

- 1. 수소차량의 군 활용 적합성 검증 필요 등 ..... 177
- 2. 병사 군 단체보험 사업 계획 미비 문제 ..... 177
- 3.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6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78
- 4. 교육용 탄약 예산 이관을 고려한 확보율 및 자원율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 178
- 5. 추경 감액 시설사업에 대한 연부액 과다 계상 문제 ..... 179
- 6. 1군지사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속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필요 ... 179



|                                          |     |
|------------------------------------------|-----|
| 7.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  | 180 |
| 8. 해군 잠수함 승조원 유출 과다 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 180 |
| 9.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대비한 재원활용 방안 마련 필요 ..... | 181 |
| 10. 국방분야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인사혁신처 이관 필요 .....   | 181 |

## II. 방위사업청( 비공개 ) / 182

## III. 병무청 / 183

|                                                 |     |
|-------------------------------------------------|-----|
| 1.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상사균등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제공노력 필요 등 ... | 183 |
| 2. 대체역 심사 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                 | 184 |
| 3. 사회복무요원 군 이러닝 학위강좌 수강료 지원 관련 적정예산 편성 필요 ....  | 184 |

# 제9장 | 행정안전위원회

## I. 행정안전부 / 187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             | 187 |
| 1-1.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 적정규모 검토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 187 |
| 1-2.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의 구조 및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 187 |
| 2. 지역사랑상품권 면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한 적정 발행규모 검토 필요 등 .....  | 189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의 개선과제 .....                                                   | 190 |
| 1-1.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부세 산정<br>방식·인센티브 체계 검토 필요 ..... | 190 |
| 1-2.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개선과제 .....                                     | 190 |
| 1-3. 지방교부세 교부시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191 |
| 1-4.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검토 필요 .....                                  | 191 |
|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면밀한 실소요 계상에 근거한 예산편성 필요 .....                               | 192 |
| 3.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부처협력 사업으로 추진필요 등 ...                              | 192 |
| 4.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개별비축창고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br>필요 .....                    | 193 |
| 5.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사업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                               | 193 |
| 6.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사업 국가망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                          | 194 |
| 7.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의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등 .....                                       | 194 |
| 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사업 단말기 보급계획 보완 필요 .....                                     | 195 |
| 9.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                               | 195 |
| 10.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개소별 특성 등을 반영한<br>사업계획 보완 필요 .....            | 196 |
| 11. 풍수해보험 적정가입률 확보를 위한 유인재설계 및 제도개선 필요 .....                                | 196 |
| 12.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 197 |



## II. 인사혁신처 / 198

### 【주요 현안 분석】

1.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 198

###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99
2. 공무원 연금대부사업 적정이율 검토 및 관련규정 정비 필요 ..... 199

## III. 경찰청 / 200

### 【주요 현안 분석】

1.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 관련 고려사항 ..... 200
  - 1-1.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를 고려한 협조체계 강화 필요 ..... 200
  - 1-2. 무인단속장비 운영규모 확대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200

### 【개별 사업 분석】

1. 과태료 수납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1
2. 비대면연수 확대 및 국외출장 탄력적 운용 필요 등 ..... 201
3. 경찰대학 증축사업 집행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202
4. 뺑소니 신고포상금 사업 일원화 필요 ..... 202
5.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청사 방호 계획 수립 필요 ..... 203
6.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차질없는 헬기 보험계약 체결 필요 ..... 203



#### 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4

##### 【주요 현안 분석】

1.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데이터개방 포털시스템 별도 운영 필요성 검토 필요 ... 204

##### 【개별 사업 분석】

1.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선거정보시스템 관리경비는 관련 정보화사업으로 이관 필요 ..... 205
2. (재외선거관리 사업) 홍보효과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 홍보예산 편성내역 재검토 필요 ..... 205
3.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외국 선거·정치제도연구사업의 해외연구관 제도 지속필요성 검토 필요 ..... 206
4. (위법행위 예방활동)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예산의 통합 편성·관리 필요 ..... 206

#### V. 소방청 / 207

##### 【주요 현안 분석】

1. 지자체 소방장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 207
  - 1-1. 지방자치단체 장비보강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및 자원 검토 필요 ..... 207
  - 1-2. 소형 사다리차의 경쟁체계 조성 및 안정적인 보급방안 마련 필요 ..... 207
  - 1-3. 산불전문 진화차의 조달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08



### 【개별 사업 분석】

- 1. 소방헬기 통합정비 및 지휘 사업계획 보완 필요 ..... 209
- 2.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 내실화 필요 ..... 209

## 제10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문화체육관광부 / 213

#### 【주요 현안 분석】

- 1. 문화체육관광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 예산안 분석 ..... 213
  - 1-1. 할인쿠폰 사업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필요 ..... 213
  - 1-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 213
  - 1-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214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 215
  - 2-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필요 ..... 215
  - 2-2. 일자리사업 관리 철저 필요 ..... 215
-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구조 개선방안 강구 필요 ..... 216
-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 216

#### 【개별 사업 분석】

- 1.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217



|                                                                                    |     |
|------------------------------------------------------------------------------------|-----|
| 2.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분석 .....                                              | 217 |
| 2-1.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확대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 논의 필요 ...                              | 217 |
| 2-2.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의 단계적 확대 검토 필요 .....                                      | 218 |
| 3.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 219 |
| 4.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 219 |
| 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분석 .....                                            | 220 |
| 5-1. K-컬처 페스티벌,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온라인 개최 가능성에 대비한 사업계획 마련 및 올해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 필요 ..... | 220 |
| 5-2.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추진 시 세심한 계획 마련과 추진체계 확립 필요 .....                                  | 220 |
| 6.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분석 .....                                                    | 221 |
| 6-1.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 논의 필요 .....                                      | 221 |
| 6-2.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221 |
| 7.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제작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                                     | 222 |
| 8.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                                             | 222 |
| 9.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의 타당성 검토 필요 ....                                    | 223 |
| 10.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예산의 감액조정 필요 .....                                           | 223 |

## II. 문화재청 / 224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실집행 관리 철저 필요 .....    | 224 |
| 2. 광화문 월대 등 복원 사업의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   | 224 |
| 3.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225 |

|                                           |     |
|-------------------------------------------|-----|
| 4.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 | 225 |
| 5.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  | 226 |

## 제11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I. 농림축산식품부 / 229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소비활성화 관련 예산안 분석 .....                                         | 229 |
| 1-1.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은 코로나19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229 |
| 1-2.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의 시행경과 및 성과 등을 반영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 229 |
| 1-3.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개선 필요 .....                     | 230 |
| 2.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계획안 분석 .....                                     | 231 |
| 2-1.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선택형직불제 활성화 필요 .....                            | 231 |
| 2-2. 친환경축산을 증진하기 위한 축산직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 231 |
| 3.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 분석 .....                                  | 232 |
| 3-1.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의 특수대학원 설립 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       | 232 |
| 3-2.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사업단 설립을 통한 사업관리 철저 .....   | 232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규모 조정 필요 .....                   | 233 |
|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사업의 계획 수립 철저 .....       | 233 |
| 3. 정부양곡매입비의 체계적인 매입단가 산출 필요 .....                | 234 |
| 4.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장비가동률 제고 필요 .....                 | 234 |
| 5.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 235 |
| 6. 재해대책비(용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235 |
| 7.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은 대출금 상환의 안정성 제고 필요 .....         | 236 |
| 8. 에코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은 기존 사업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 236 |
| 9.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의 ISP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           | 237 |
| 1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237 |
| 11. 유휴농지자원조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 238 |
| 12.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238 |
| 13.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예산액 적정규모 조정 필요 .....          | 239 |

## II. 해양수산부 / 240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사업 관련 분석 .....   | 240 |
| 1-1.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 240 |
| 1-2. 친환경 관공선 건조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240 |
| 2. 수산공익직불제 분석 .....                         | 241 |



### 【개별 사업 분석】

1.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필요 ..... 242
2.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42
3.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안전대책 마련 및 e-Nav 선박단말기 적기 보급 필요 .. 243
4.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개선 필요 ..... 244
5. 항만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은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 필요 .... 245
6.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및 IoT 장비 보급간 상호연계 필요성 ..... 245
7.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은 시행경과 등을 반영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46

## Ⅲ. 농촌진흥청 / 247

### 【개별 사업 분석】

1.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의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247
2.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역할 분담 검토 필요 ..... 247
3. 스마트온실의 건축일정을 고려한 사막형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 추진 필요 ..... 248
4. 농림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은 다부처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 부처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248
5. 북부원예출장소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 249



#### IV. 산림청 / 250

##### 【주요 현안 분석】

- 1.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효과성 규명 필요 ..... 250
  -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모니터링 결과 고려 필요 ..... 250
  -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검토 필요 ..... 250
  - 1-3.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51

##### 【개별 사업 분석】

- 1. 변상금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 징수조치 실행 필요 ..... 252
- 2.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의 성과검증 필요 ..... 252
- 3. 스마트 헬스케어(R&D) 사업의 타부처와 유기적 연계 필요 ..... 253

#### V. 해양경찰청 / 254

##### 【개별 사업 분석】

- 1. 무인헬기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필요 ..... 254
- 2.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 적정 예산규모로 조정 필요 ..... 254
- 3.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55



## 제12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I. 산업통상자원부 / 259

#### 【주요 현안 분석】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59
  - 1-1.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중장기적 효과 제고 필요 ..... 259
  - 1-2. 사업계획 보완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60
  - 1-3. 그린 뉴딜 분야 보급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 260
2.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61
  - 2-1.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 간 차별성 확보 필요 등 ..... 261
  - 2-2.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사업의 DB활용도 제고 및 민간분야와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261
  - 2-3. 철강산업 재도약기술개발 사업의 장비운영비 조정 필요 등 ..... 262

#### 【개별 사업 분석】

1. 전선로지중화지원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운영기준 개선 필요 등 ..... 263
2.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의 과거 성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명확화 필요 ..... 263
3.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의 소형도서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실효성 점검 필요 ... 264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수요를 고려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64
5. 녹색혁신금융 사업의 녹색보증 실효성 제고 필요 ..... 265
6.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국내유전탐사 자원조달 불투명 등 ..... 265



|                                                                       |     |
|-----------------------------------------------------------------------|-----|
| 7.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준비 필요 .....                                  | 266 |
| 8. 신산업진출 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명확화 및 사업재편에 특화된<br>지원방안 마련 필요 .....      | 266 |
| 9.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의 국토부와 연계 강화 필요 등 .....                               | 267 |
| 10.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의 후속사업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 .....                         | 267 |
| 11.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 사업의 후속 사업 연계방안 마련 필요 등 .....                         | 268 |
| 12. 중견기업상생혁신 사업의 상생목적 부합 지원대상 선정 필요 .....                             | 268 |
| 13. 전략제품창출 글로벌K-팝리스육성 기술개발 사업의 차별화된 지원대상 선정<br>필요 .....               | 269 |
| 14. 파워반도체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의 출연 근거 보완 필요 .....                               | 269 |
| 15.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준비 미흡 .....                             | 270 |
| 16.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의 건물DB 간 연계강화 및 수요확인 필요 .....                           | 270 |
| 17.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 271 |
| 1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의 시스템 연계강화 및 국비보조율 적절성<br>검토 필요 .....         | 271 |
| 19.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 중 CO2 포집·활용 기술 개발 사업의 재기회에<br>따른 사업지연 .....      | 272 |
| 20. 클라우드기반 디지털엔지니어링 통합빅데이터구축 사업의 ISP 미수립을 고려한<br>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 272 |
| 21. 무역보험기금의 사고율 추이 및 보험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br>적정성 검토 필요 .....       | 273 |
| 22.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엑스포 효과 감소를 고려한 사업계획<br>재수립 검토 필요 .....     | 273 |



## II. 중소벤처기업부 / 274

### 【주요 현안 분석】

1.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문제점 ..... 274
  - 1-1.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 274
  - 1-2. 신규 조성 및 운용 자펀드의 적절성 검토 ..... 274
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문제점 ..... 275
  - 2-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 275
  - 2-2.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275
3.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신규 R&D사업 편성 부적절 ..... 276

### 【개별 사업 분석】

1.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안 조정 검토 ..... 277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 277
3.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문제점 ..... 278
  - 3-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 278
  - 3-2.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 시범사업 성과 확인 후 본사업 추진여부 등 결정 필요 ..... 278
  - 3-3. 혁신형 소상공인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및 홍보비 적정성 검토 ..... 279
4. 규제자유특구사업 문제점 ..... 280
  - 4-1. 중장기 계획 수립 부재 및 재정사업 효율성 검토 필요 ..... 280
  - 4-2. 규제자유특구사업 목적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 280
  - 4-3. 규제자유특구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성과 저조 우려 ..... 281
5.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82
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계획 미흡 ..... 282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83



|                                                                               |     |
|-------------------------------------------------------------------------------|-----|
| 8.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사업 성과점검 후 예산지원<br>필요성 검토 및 법적 근거 없는 출연 문제 ..... | 283 |
| 9.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등 .....                                     | 284 |
| 10.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순실보전금 순지급률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br>필요 .....                    | 284 |
| 11.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중복보증 검토 .....                                  | 285 |
| 12.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수요 검토 필요 .....                                     | 285 |

### Ⅲ. 특허청 / 286

|                                                               |     |
|---------------------------------------------------------------|-----|
|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적정 예산안 규모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 286 |
| 2.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86 |
| 3. 모태조합 출자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287 |
| 4.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유사사업과의 연계 차별화 방안<br>검토 필요 ..... | 287 |

## 제13장 | 보건복지위원회

### Ⅰ. 보건복지부 / 291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생계급여 사업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 291 |
|----------------------------------------------|-----|



|                                                                      |     |
|----------------------------------------------------------------------|-----|
| 2. 의료급여 재정지출 관리 노력 필요 등 .....                                        | 292 |
| 3.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br>차질없는 수행 필요 ..... | 293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실시 등을 통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 294 |
| 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활동지원기관 관리 강화 필요 .....                                 | 295 |
| 3. 자활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 295 |
| 4.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부처 협업사업 특성에 따른<br>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 296 |
| 5.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유형별 관리 필요 .....                                 | 296 |
| 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활동의 통합적 운영 필요 .....                                  | 297 |
| 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연계기관과의 운영방안 마련 필요 .....                           | 297 |
| 8.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298 |
| 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수혜율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 298 |
| 10. 가정양육수당 단가의 조정 검토 필요 .....                                        | 299 |
| 11.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부적절 .....                               | 299 |
|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br>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 300 |
| 1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운영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                          | 300 |
| 14.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 301 |
| 15.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 301 |
| 16.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운영 사업의 신규 추진 시기 적절성 검토 필요 .....                 | 302 |



|                                                                   |     |
|-------------------------------------------------------------------|-----|
| 17.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br>필요 .....             | 302 |
| 18.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일관성 없는 산출의<br>부적절성 .....         | 303 |
| 19. 유치기관 관리 사업의 차질없는 지방이양 필요 및 관련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 303 |
| 20.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br>필요 .....         | 304 |
| 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유아흡연예방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304 |
| 2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국고보조율의 지역보건법 제24조 준수 필요 ..                     | 305 |
| 23.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특성을<br>고려한 비목 편성 필요 ..... | 305 |
| 24.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                          | 306 |
| 2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안의 사업비 구성 변경 필요 .....                     | 306 |
| 2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에 대한<br>정확한 예측 필요 .....   | 307 |
| 27.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                    | 307 |

## II. 식품의약품안전처 / 308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규모 확대 및 통합 운영 방안 검토 필요 ..... | 308 |
| 2. 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HACCP 적용 준비 필요 .....       | 308 |



|                                            |     |
|--------------------------------------------|-----|
| 3.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준비 철저 필요 .....       | 309 |
| 3-1.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등 대비 필요 .....      | 309 |
| 3-2.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309 |
| 4.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사업 집행 관리 등 철저 필요 ..... | 310 |

## 제14장 | 환경노동위원회

### I. 환경부 / 313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                  | 313 |
| 2.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br>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 | 314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  | 315 |
| 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 315 |
| 3.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 지원 확대방안 강구 필요 .....  | 316 |
| 4.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및 민간 비용분담 강화방안 검토 필요 ...  | 316 |
| 5.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필요 ..... | 317 |
| 6.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대 노력 필요 .....        | 317 |



7.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완료 필요 ..... 318
8.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 규모 제시 필요 등 ..... 318
9.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한 수요 확보 필요 ... 319
10.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연례적인 실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319
1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 320

## II. 고용노동부 / 321

### 【주요 현안 분석】

1.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분석 ..... 321
  - 1-1.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 지원인원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321
  - 1-2. 일경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 필요 ... 321
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322
  - 2-1. 구직급여 지출 증가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수지 관리 필요 ... 322
  - 2-2. 사업 편성 기준 수립 등 근본적인 노력을 통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322

###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디지털일자리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23
2.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설계 필요 등 ..... 324
3. 법률 개정 추이를 반영한 두루누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 심사 필요 ..... 325



|                                                                  |     |
|------------------------------------------------------------------|-----|
|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326 |
| 5. 신규 사업인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 326 |
| 6. 고용창출장려금 각 유형별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                        | 327 |
| 7.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수요 적극 발굴 필요 등 .....                           | 327 |
| 8.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및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의 연내 집행가능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328 |
| 9.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및 하이테크 과정 취업을 개선 필요 .....                        | 328 |
| 10.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 필요 .....                           | 329 |
| 11. 신규 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점진적 사업규모 확대 고려 필요 .....                    | 329 |

### Ⅲ. 기상청 / 330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기상예보 및 태풍예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 | 330 |
| 1-1. 기상예보 관련 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 330 |
| 1-2. 태풍예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 개선 노력 필요 .....        | 330 |

####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                  | 331 |
| 2.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통한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등 ..... | 331 |
| 3. 기상용슈퍼컴퓨터의 추가적인 도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                        | 332 |



## 제15장 | 국토교통위원회

### I. 국토교통부 / 335

#### 【주요 현안 분석】

1. 주거복지로드맵 연차별 공급계획 검토 필요 ..... 335
2. 공공임대주택 중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분석 ..... 336
  - 2-1.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적정규모 조정 필요 ..... 336
  - 2-2. 다가구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유형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36
3.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분석 ..... 337
  - 3-1. 준공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 337
  - 3-2.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 수요예측 적정성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37
  - 3-3. 도시재생지원(출자)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38
4. 신공항 건설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39
  - 4-1.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른 집행 필요 ..... 339
  - 4-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강화 필요 등 ..... 339
  - 4-3.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정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한 사업추진 필요 ..... 340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41
6. 국토교통연구기획(R&D)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 341

#### 【개별 사업 분석】

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정부출자수입 감액조정 필요 ..... 342
2. 주택성능보강 집행가능성 재검토 필요 ..... 342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차질없는 준비 필요 등 ..... 343



|                                                    |     |
|----------------------------------------------------|-----|
| 4.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                  | 344 |
| 5. 확대추진 계획인 수소도시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             | 344 |
| 6.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 345 |
| 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345 |
| 8.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등 .....                | 346 |
| 9.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준비 철저 필요 .....                  | 346 |
| 10.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필요 .....         | 347 |
| 11.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 347 |
| 12.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사업준비 철저 필요 .....             | 348 |
| 13.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 효과 제고방안 모색 필요 .....              | 348 |
| 13-1. 군경 버스운전 자격취득 지원사업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       | 348 |
| 13-2. 버스운전인력 견습비용 지원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 349 |
| 14.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예산배분비율 조정 필요 .....          | 349 |
| 15.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                | 350 |
| 16. 한국형 UAM 그랜드챌린지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350 |
| 17. ISP 용역 중인 국제항공 노선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예산의 조정 검토 필요 .. | 351 |
| 18.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351 |
| 19. 일반국도 건설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 352 |
| 20.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 352 |
| 21.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필요 등 .....        | 353 |
| 22.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필요 .....         | 353 |
| 23.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 개선필요 .....                 | 354 |
| 24. 뽕소니 신고포상금 집행방식 개선 필요 .....                     | 354 |



##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355

### 【개별 사업 분석】

- 1. 지방행정시설 이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355
- 2. 공무원 단기숙소 운영의 지속 여부 검토 필요 ..... 355

## III. 새만금개발청 / 356

### 【개별 사업 분석】

- 1. 새만금 에코슈벨트 조성 사업 방식 면밀한 검토 필요 ..... 356
- 2.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철저 ..... 356
- 3.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연구결과물 활용 필요 ..... 357
- 4. 뉴스스크랩 경비의 비목 변경 필요 ..... 357

## 제16장 | 여성가족위원회

## I. 여성가족부 / 361

### 【개별 사업 분석】

- 1. 여성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361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운용 방안 개선 필요 ..... 361
-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362
- 4.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362
-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돌봄공동체 지원 예산 분리 편성 필요 ..... 363

제 1 부  
총괄 분석





**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총수입·총지출**

-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본예산 기준 0.3%, 추경 기준 2.6% 증가한 483.0조원으로 편성
-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본예산 기준 8.5%, 추경 기준 0.2% 증가한 555.8조원으로 편성

**□ 재정수지**

- 2021년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본예산 기준 △42.3조원(GDP 대비 △2.1%p) 악화, 추경 기준 3.4조원(GDP 대비 0.3%p) 개선된 △72.8조원(GDP 대비 △3.6%)
- 2021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본예산 기준 △38.2조원(GDP 대비 △1.0%p) 악화, 추경 기준 1.8조원(GDP 대비 0.4%p) 개선된 △109.7조원(GDP 대비 △5.4%)

**나. 국가채무**

- 2021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기준 147.3조원(GDP 대비 7.3%p), 추경 기준 105.6조원(GDP 대비 3.2%p) 확대된 952.5조원(GDP 대비 47.1%)

※ 당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1년도 국가채무를 945.0조원(GDP 대비 46.7%)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제출·확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규모는 위와 같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12.

## II

## 2021년도 예산안 총평

### 1

### 재정총량 분석

#### 가. 단기 분석 - 재정의 역할 확대와 여력 확보 간 조화 필요

##### □ 예산안 평가

##### ◦ 규모 측면

-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555.8조원)은 전년도 본예산(512.3조원) 대비 8.5% 증가하여,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증가율 9.1% 보다는 약간 감소
- 다만,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483.0조원)은 전년도 본예산(481.8조원) 대비 0.3% 증가하여, 2014년( $\Delta 0.9\%$ ) 이후 가장 낮은 증가. 이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42.3조원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38.2조원 증가), 국가채무(147.3조원 증가) 모두 역대 가장 큰 증가
- 최근 경제여건 고려시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한 측면. 다만, 최근 위기는 감염병이라는 외생 변수에 기인하여 종결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의 중·장기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

##### ◦ 구성 측면

-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의무지출 비중 감소(2019년 본예산 51.0% → 2020년 본예산 49.9% → 2021년 예산안 48.1%)
- 다만, 이는 의무지출 세부유형 중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2021년 예산안 의무지출의 40.7% 차지)'이 수입여건 악화에 따라 감소한 것( $\Delta 2.6\%$ )에 기인. 실질적으로 '복지분야 법정지출(2021년 예산안 의무지출의 49.2% 차지)'은 9.9%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8.5%)을 상회
- 향후 경제·재정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이전재원' 소요도 다시 증가하면 의무지출 비중도 다시 증가 가능. 의무지출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아 한 번 증가하면 다시 감축 곤란. 표면적인 의무지출 비중 감소뿐 아니라 세부유형별 증가추이에도 관심 필요

## □ 재정효율화 및 건전성 확보 방안

### ◦ 수입 측면

- 조세지출 관리 강화필요: 최근 계획액 급증
- 국유재산특례지출 관리 강화 필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통한 특례지출 신설 최소화 필요
- 정부배당대상기관 배당수입 관리 강화 필요: 배당규모 결정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중기목표 가급적 준수 필요
- 미수납 및 불납결손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실적 지속적 증가 추세

### ◦ 지출 측면

- 편성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추이 검토 및 예산안 첨부서류의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상세기술 필요 등
- 집행 단계: 집행관리 대상사업 구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및 교부성 예산은 실집행 실적 관리 강화 필요
- 환류 단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

## 나. 중기 분석 -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

-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0년 계획에 이어 계획기간 후반부까지 적극적인 재정확대 의지 표명
- 최근 재정역할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계획기간 후반부까지 중기 재정운용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필요

### □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중기재정운용목표의 지속적인 완화 현상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부재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 가능
- 최근 정부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하겠다는 입장 이므로 이를 토대로 도입 필요성 및 시기, 규율형식 및 구체적 기준의 타당성, 구속력 확보방안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1~75.

### Ⅲ 재정 총괄 분석

####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가. 현 황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72.8조원 적자(GDP의 △3.6%)에서 2024년 △88.1조원 적자(△3.9%)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109.7조원 적자(△5.4%)에서 2024년 △127.5조원 적자(△5.6%)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 국가채무(D1)는 2021년 952.5조원(GDP의 47.1%)에서 2024년 1,334.5조원(58.6%)으로 확대

##### 나. 분석의견

- 정부의 중기재정목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
  - '20년 추경 이후 지속적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5%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관리재정수지는 2009년 GDP 대비 △5.0% 적자에서 2013년 △0.5%로 회복하고 2014년 관리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를 살펴보기에는 미흡한 수준
- 인구고령화 등의 경제·재정여건 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국가와 단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안심할 수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 2018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의 40.0%로 일본(235.9%), 미국(136.4%), 프랑스(110.0%), 영국(90.2%), 독일(61.9%)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그러나 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를 직면하고 있지만 일본 및 유럽국가들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있어 장기재정전망 등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85~102.

2

예산총칙안 분석

가. 총수입·총지출

□ 예산총칙은 예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2021년도 예산총칙안은 세입세출예산 총액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

[2021년도 예산총칙안]

| 조문   | 내용                               |
|------|----------------------------------|
| 제1조  | 2021년도 세입·세출 총액                  |
| 제2조  |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                |
| 제3조  | 2021년도 계속비                       |
| 제4조  |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 체결시 연부액 초과 집행 근거 |
| 제5조  | 2021년도 명시이월비                     |
| 제6조  | 202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
| 제7조  |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
| 제8조  |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연도 중 최고한도액  |
| 제9조  |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   |
| 제10조 | 예산의 이용 범위                        |
| 제11조 |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
| 제12조 | 목적예비비                            |
| 제13조 |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       |
| 제14조 |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 제15조 |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 제16조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 합계 한도액              |
| 제17조 | 재해대책비 비목 설치·운영                   |
| 제18조 |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초과 집행 근거            |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내용 분석

(1) 계속비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계속비 총액은 전년 대비 2,001억원이 감소한 2조 4,732억원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3개 사업

- 3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의 원칙적인 편성기간인 5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시작연도에 비해 사업비 총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없이 계획기간인 2021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

## (2)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는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2020년 1.3조원 보다 0.2조원 증가한 1.5조원으로 편성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본예산에 대한 보충적 재정행위(예비비, 추경예산, 국고 채무부담행위) 중 후순위로 선택해야 하는 수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비비나 추경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자체가 생략된 행위이고, 국고채무부담상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재원조달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게 부여되어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도 불리한 행위
- 2021년에 코로나19 수준의 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규모의 재해대책은 평년과 같이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 필요

## (3)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연중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도액 규모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 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억원으로, 통합 계정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10조원이 증가하였고,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기타 기금의 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이 증가할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정부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 및 이자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은행 일시차입 비중을 최소화할 필요
  - 일시차입금 등의 이자 상환액은 2019년까지는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을 통해 충당되었으나, 2020년에는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일반회계)을 통해 충당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5항은 일시차입에 비해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설치 이후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하며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상의 최고한도액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최고한도액 설정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

#### (4)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각각 16조원과 15억달러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74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2조 4,000억원 증가
-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계획함에 따라 국가채무 수준은 2019년 723.2조원에서 2024년 1,327.0조원으로 5년간 603.8조원(83.5%) 증가하게 될 예정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7.7%에서 58.3%로, 20.6%p 상승할 예정
- 경기 침체기에 민간부문에 발생하는 수요의 위축을 적시에 보완하기 위해 평소에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 (5) 목적예비비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3.8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
- 목적예비비 3.8조원 중 2020년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목적의 소요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 2021년도의 사업내용 및 지출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요건 미충족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 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은 근거 법률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부터 시행중이므로 이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예비비 편성요건 미충족
-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위기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고, 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2021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 및 업종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6) 정부기업특별회계 전입·전출금

- 2021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전년 대비 649억원이 증가한 1조 6,459억원
-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자체 세입원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과다하므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03~135.

3

12대 분야별 분석

가. 현 황

- 2021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총 199.9조원으로 2020년 대비 19.4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액 규모를 보였고, 외교·통일 분야(5.7조원)가 가장 낮은 증액 규모(0.2조원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0~2024년 기간 동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1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분석의견

- 16대 분야 중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과학기술 분야·통신 분야의 비 R&D 예산을 12대 분야에 포함시키는 방안 및 12대 분야로 분류시 R&D 분야와 다른 분야에 중복계상되어 있는 R&D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자리사업 예산은 고용상황 개선 속도, 재정지출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 일자리사업 유형별 특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검토할 필요
- 2020년도 R&D예산안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은 지금까지의 국가R&D예산의 중점투자전략과의 연속성은 있으나, 동 분야에 편성된 일부 R&D사업의 경우 경제적 효과 제고 방안, 유사 사업간 통합·연계 및 차별화 방안, 엄밀한 지원 대상 선정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36~188.

4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2021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67.3조원으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 수준
  - 2021년 의무지출 예산안을 의무지출의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 131.5억원, 지방이전재원 108.7조원, 이자지출 19.3조원, 기타 의무지출 7.7조원 순으로 나타남

나. 분석의견

- 복지지출 확대 및 고령화 대응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추세관리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증가, 적자성 채무 증가 등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고려 필요
  - 지방비 매칭이 따르는 의무지출 사업의 규모 증가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및 재정력 등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대상의 확대나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지방비 부담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법률 제정에 따른 신규 의무지출 사업 분류 필요
  -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중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므로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
- 2021년도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적정규모 편성 노력 필요
  - 기획재정부 소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과다계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89~212.

## 5

## 세입예산안 분석

## 가. 2021년도 총수입 전망

- NABO 전망에 따르면 2021년도 총수입은 2020년 전망 대비 10.3조원(2.2%) 증가한 481.0조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483.0조원)보다 2.0조원 낮을 전망
  - 국세수입은 284.7조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수출·입의 증가세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9조원(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282.8조원)을 1.9조원 상회할 전망
    - －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2020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1.1조원)하는 것 등에 기인
  - 국세외수입은 196.3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명목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 기여금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4조원(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의 국세외수입(200.2조원)보다는 3.9조원 낮을 전망
    - － 경상성장률, 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 전망을 NABO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 등에 기인

## 나. 2020~2024 총수입 전망

- NABO 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0년 470.8조원에서 2024년 544.2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2020년 470.8조원에서 552.2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NABO의 총수입 전망은 정부의 전망보다 연도별로 △0.1~△8.0조원, 5년 합계 18.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 정부와 NABO의 총수입 전망의 차이는 주로 거시경제 등 주요 변수의 전제 차이와 세수 전망 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213~219.

6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6-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 「국가재정법」 제12조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허용
  -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내부거래는 327조 84억원으로 총계(1,225조 5,923억원)의 26.7%

6-2.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가. 현황

- 2021년 일반회계는 14개 특별회계 및 25개 기금과 내부거래를 수행

나. 분석의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기금 재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
- 연례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회계(소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조개선 필요

6-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가. 현황

-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운용
  -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37개 기금과 예수·예탁 방식의 내부거래를 수행
  - －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잔액은 40조 9,592억원, 예탁잔액은 864조 3,29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 나. 분석의견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잔액이 급증하고 있고 신규예수보다 예수상환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
- 연례적으로 예수·예탁 대상이 되는 회계와 기금의 경우 재원구조 개선 필요
  - 2019~2021년까지 매년 공자기금으로 잉여재원을 예탁할 계획이 있는 특별회계는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4개 기금
  - 2019~2021년까지 매년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할 계획이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10개 기금

## 6-4. 복권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 가. 현 황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배분
  -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복권기금의 전출금은 2021년 1조 6,761억 2,900만원 편성
- 복권기금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함
  -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복권기금의 전입금은 2021년 312억 6,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중 상당규모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아닌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검토 필요
  -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1,161억 5,900만원 중 약 20%인 219억 8,300만원은 실제 사업소요가 아닌 여유자금으로 활용될 예정

## 6-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 가. 현황

-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개 연금이 있음

### 나. 분석의견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건전성 관리 필요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악화로 인하여 각각 1999년, 1973년부터 양 기금의 수지 적자분을 국가보전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2021년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전금은 2조 4,582억원, 군인연금에 대한 보전금은 1조 6,012억원 편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미수국가부담금 해소 필요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조성에 기여하는 국가부담금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1년은 그 규모가 2,440억 5,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 6-6. 기타 사항

- 기금 근거 법률이 아닌 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금 내 설치된 제정의 경우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어 그 개선이 필요
  - 완성보증계정(문체부)과 매출채권보험계정(중기부)의 경우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국회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문제
- 일부 전출금 세목이 잘못 편성된 사례가 있어 정정할 필요

## 6-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구조의 단순화가 필요
  - 내부거래의 증가는 재정 구조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220~277.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가. 현 황

- 20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45개 부처의 1,183개 사업 중 238개 사업이 '우수', 756개 사업이 '보통', 189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
  - 각 부처는 미흡 사업 189개 중 29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수립, 160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출

나. 분석의견

- 제도의 활용 측면에서는 차년도 예산안과의 연계성 약화 및 환류기능 미흡
  -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비율이 2018년 25.6%, 2019년 17.7%, 2020년 15.3%로 매년 감소, 집행을 부진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개선 대책의 수립을 선호함에 따라 예산안과의 연계성 약화
  - 소요예산 감소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왜곡 발생, 성과관리개선 대책이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기능 미흡
-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미흡
  - 대다수의 사업수행 부처가 지침에 따른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상대평가 비율 (15% 이상)의 준수 권고를 지키지 않는 등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평가, 각 부처별 평가보고서가 내용의 충실성 측면에서 편차가 큼
-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필요
  -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사업의 성과관리개선 대책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대외 공개함으로써 평가지침의 준수 유도 필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제고 필요

##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7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2020년 말 기준 존속기간 3년 도래 사업(24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정상추진’ 24개 사업(10.0%), ‘즉시 폐지’ 2개 사업(0.8%), ‘단계적 폐지’ 12개 사업(5.0%), ‘통폐합’ 5개 사업(2.1%), ‘감축’ 68개 사업(28.2%), ‘사업방식 변경’ 130개 사업(53.9%)

### 나. 분석의견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2021년 예산안 연계 여부 검토
  - 2020년 평가에서 예산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상 감축되지 않거나 예산 규모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외교부의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등
  - 2020년 평가에서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상 사업 편성체계 개선 등 평가결과 미반영
    - －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운영 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등
- 2018년,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2021년 예산안 연계 여부 검토
  - 2018년, 2019년 평가에서 예산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 다시 증액 편성되는 등 평가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
    -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가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유통 정보 실용화 사업 등
  - 2018년, 2019년 평가에서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상 사업 편성체계 개선 등 평가결과 미반영
    -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사업, 통일부의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등

### 7-3.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와 예산안 연계

#### 가. 현 황

- 2020년에는 총 52개 기금, 280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을 평가
  - 53개(20.0%) 사업 ‘우수’, 177개(63.2%) 사업 ‘보통’, 47개(16.8%) 사업 ‘미흡’ 평가

#### 나. 분석의견

- 제도의 활용 측면에서 차년도 예산안과의 연계성 약화 및 환류기능 미흡
  - 연례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환류계획을 수립할 필요
  - 집행률 부진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출구조조정보다는 성과관리 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
  - 소요예산 감소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상대평가 비율 미준수 및 평가결과의 충실성 미흡
  - ‘미흡’ 사업에 대한 상대평가 비율(15%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
  -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체평가 심사위원별 의견을 적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7-4. 기금존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 황

- 2020년에는 총 67개 기금 중 24개 기금에 대해 기금존치평가를 실시
  -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결과 8개 기금의 13개 사업이 개선 권고, 1개 기금의 1개 사업이 폐지 권고
  -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9개 기금에 대해 중기가용자산규모의 부적정성이 지적
  -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22개 기금은 존치, 2개 기금은 통합 판정

#### 나. 분석의견

- 연례적으로 결과가 이행되지 않거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 이행 필요성이 낮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

## 제1부 | 총괄 분석

- 기금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결과 사업개선을 권고 받았으나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립 과정에 환류조치 미흡
- 기금의 재원구조 적정성 평가결과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자체수입원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및 확대를 권고 받았으나 환류조치 미흡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278~339.

## 8

##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 가. 현 황

-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시 1,812건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시 2,06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회계연도 결산 시 1,805건으로 감소하였고, 2017회계연도 결산 시 1,833건으로 다시 증가한 이후 2018회계연도 결산에는 1,356건으로 크게 감소
-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연도(2016회계연도 또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반복 시정요구 사항은 137건으로 확인(이 중 55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
-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2014회계연도 210건에서 2015회계연도 221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6회계연도에는 183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 200건으로 다시 증가한 이후 2018회계연도 결산에는 137건으로 크게 감소

## 나. 분석의견

-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고,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40~366.

## 9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가. 현황

-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 총 37개 부처, 304개 사업, 34.9조원 규모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202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 2020년도와 비교할 때,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 수 2개 증가(35개→37개), 예산규모 3.2조원 증가(31.7조원→34.9조원), 사업 수 20개 증가(284개→304개)
-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관련,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전년도 분류체계 유지
  - 2021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으로, 관계부처상설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7개 부처의 32개 사업 선정. 2020년도와 비교할 때 사업 수 6개 증가(26개→32개)

## 나. 분석의견

- 간접목적 사업 분류 기준의 구체화·객관화 필요
  -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작성하는 방식. 부처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 필요
- 간접목적 사업의 성인지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필요
  - 성인지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결산 등을 통하여 제시된 성과목표와 부처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연계하여 목표치 설정 필요.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후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사이 연계성 미흡.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국가성평등지수 취약 분야를 정하여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67~386.

10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가. 현 황

-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총 101.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555.8조원의 18.3%를 차지
  - 340개 공공기관 중 2021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총 289개 기관으로 집계됨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555.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3.5조원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은 101.7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조원 증가
  -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본예산 기준 17.5%에서 2021년도 예산안 기준 18.3%로 확대

나. 분석의견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예산 규모 및 공공기관의 정부재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결산 15.7%에서 2021년 예산안 18.3%로 증가.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정부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6%에서 2020년 11.4%로 상승
- 실제 집행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 정부가 예산을 교부하여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사업기간과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
    - － 2020년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중 사업비 10억원 이상, 집행을 1% 미만 (2020. 9월 기준)인 사업은 19개 기관, 44개 사업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87~412.

## IV

## 유형별 분석

### 1

###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과제

#### 가. 현 황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29조 5,88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252조 2,743억원
- 2021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은 총 51조 7,64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21억 9,900만원 감액 편성

#### 나. 분석의견

-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2019~2020년)추진 경과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18년, 11%→ '20년, 21%)으로 2019년 지방세 징수액 전년 대비 6.2조원 증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목표(75:25)에 미달한 23.6%수준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 개정('20.02.18.) 으로 2021.1.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
  - 당초 재정분권 2단계에서 지역자율성·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교육 재정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0년 현재까지 구체적 방안 미수립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경과의 주요 개선과제
  - 지방세 비중(국세 대비) 및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는 목표대비 다소 미흡한 반면,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추진계획 재정비 및 자치단체 간 형평화 장치를 보완하여 2단계 재정분권 방안 조속히 수립 필요

-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산정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는 2021년 예산안에 여전히 국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과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

□ 지방재정여건 분석 및 지방교부세의 과제

- 2021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421억원이 감소한 51조 7,646억원 수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감소 및 세수감소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조정률 및 산정지표 설정이 지연되어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설정하여 제시 필요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태적 유인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
-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징수 및 교부과정의 특성 상 재정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415~436.

## 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 가. 현 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고등학교 무상 교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이전재원으로서 넓은 의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
  - 2021년 예산안에서는 국세수입 전망 악화에 따라 전년 본예산 60조 633억원 대비 2조 1,433억원(3.6%) 감소한 57조 9,200억원 편성
    - － 사업별로 보면, 지원대상이 쏠 학년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9,431억원)만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51조 8,335억원)과 특별교부금(1조 4,887억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3조 6,547억원) 등 기타 사업은 전년 본예산 대비 감소

## 나. 분석의견

- 2021년에는 경기둔화로 국세수입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위축이 예상됨
  - 2015~2019년 동안 보통·특별교부금\*은 결산 기준 연평균 11.3% 성장하였으나(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6.9% 증가), 2021년 예산안에서는 국세수입 전망 악화로 크게 감소
    - \* 세제잉여금 정산분 포함
    - － 2021년 예산안에서 보통·특별교부금은 53조 3,221억원으로, 각 교육청이 2020~2024년 중기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58조 5,776억원 대비 5조 2,554억원 부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변경 등 검토 필요
  - 정부는 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여부를 보통교부금 배분의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나, 실제 기금 적립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보이므로 개선 검토 필요
    - \* 교육청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 지방교육재정 관련 의무지출의 추계방식 변경 검토 필요
  - 2023년 이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관련 지출규모 추계 필요
    -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의무지출 사업이나,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2년까지만 추계 중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437~463.

## 3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 가. 현 황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제도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2항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개 유형의 면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sup>1)</sup>,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해당함

## 나. 분석의견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에 따른 면제 비중이 증가함
  -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에서 2020년 9월 기준 30건으로 증가
  - 이 중 국가 정책적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을 사유로 면제된 사업 수는 2015년 1개에서 2020년 9월 기준 17개로 증가
-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액과 총사업비 등의 규모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464~495.

1) 정보화 사업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변경 예정(2020.12.10. 시행)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가. 현 황

-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35개 부처 7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합계는 235조 9,489억원 규모
  - 2021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수는 국토교통부(244개), 경찰청(27개), 환경부(53개), 해양수산부·국방부(48개), 문화체육관광부(44개), 농림축산식품부(30개) 순임
  - 사업비 규모는 국토교통부(172.7조원), 해양수산부(14.4조원), 농림축산식품부(10.5조원) 순
-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될 사업 수는 12개 부처 51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합계는 17.9조원 규모
  -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16개), 환경부·국방부(8개), 경찰청(6개), 해양수산부(4개) 순이며, 2021년 예산안은 2,084억원 규모로 편성됨

나. 분석의견

-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의 경우 첨부서류에 누락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예산안 첨부서류를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신규 편입 예정인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규 편입 대상 사업도 계획기준으로 제출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496~515.

## 5

##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 가. 현 황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말함
  - 2021년 BTO 예산안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편성되었으며, 2020년 1조 1,004억원 대비 754억원(6.85%) 감소한 1조 250억원
  - 2021년 BTL 예산안은 국토교통부 등 11개 부처에 편성되었으며, 2020년 1조 3,565억원 대비 842억원(6.21%) 증가한 1조 4,407억원

## 나. 분석의견

- BTL 한도액은 2011년 이후 1조원 이하로 유지되었으나, 2021년 BTL 한도액은 2조 3,096억원으로 증가
- 정부는 교육부 소관 15개 대학, 6개 BTL 사업에 대하여 KDI 검토보고서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KDI의 검토가 완료된 교육부 2개 사업의 한도액은 리모델링 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정될 필요
-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BTL 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재산정할 필요
  - 철거비 및 내진공사비를 추가하고, 스마트운영설비비는 제외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비용 보상금을 단순한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516~551.

## 6

##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법정부담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 2021년도 법정부담금 예산안은 총수입 기준 16조 4,307억원으로 전년(14조 9,135억원) 대비 1조 5,172억원(10.2%) 증가
  - 특별회계 귀속 3조 5,437억원, 기금 귀속 12조 8,870억원
  - 부처별 부담금 예산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4조 9,357억원, 전체 수입의 30.0%), 보건복지부(2조 9,487억원, 1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조 7,714억원, 16.9%) 순임

## 나. 분석의견

- 부담금 수입 계획액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출국납부금과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징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출국자 수와 영화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입계획안을 일정 부분 감액 편성할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수입계획안 산출 시 전력판매단가 하락 추세 반영 필요
    - 최근 4년 간 부담금 수입계획액 산출 시 2016년 기준 판매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실제 판매단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수입계획안 산출 시 특정물질 감축계획에 따른 소비량 감소 반영 필요
    - 5년 동안 동일금액(11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특정물질 제조·판매·수입량에 따라 부담금의 수납액이 결정되므로 감축계획에 따른 소비량 감소를 반영할 필요
-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위임근거 없는 부담금 면제 규정 정비 필요
    -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위임근거 없는 감면 규정 삭제 등 시정 조치 필요

-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12.27.)을 받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등은 법률개정 및 후속 조치 필요
-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징수실적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폐지 검토 필요
  - － 현재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도 도입 이래 부과·징수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규제개혁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의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폐지 여부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552~568.

7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신규사업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 사업,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등이 해당
  - 2021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사업 수는 전년 대비 9개가 증가한 490개, 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585억원이 감소한 4조 1,188억원으로, 2021년도 총지출(555.8조 원)의 0.7% 수준
    - －사업 수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84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7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70개), 해양수산부(35개), 보건복지부(24개) 등임
    - －사업규모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1조 286억원으로 가장 크고, 산업통상자원부(8,22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67억원), 국토교통부(4,548억원), 경찰청(1,569억원) 등임

나. 분석의견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실효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측면 검토 필요
  -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사전 준비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등
  -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사업’ 등
  -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등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569~582.

## 8

## 법령·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 가. 현 황

- 법률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근거를 제공
  - 법률안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
  - 예산안에는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출의 근거가 될 법령이 미흡한 경우에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근거를 보완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여야 할 것
- 재정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검토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절차 등을 규정
  -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기준·단가 등을 규정

## 나. 분석의견

-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사례
  - 4개 부처 4개 사업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사례
  - 5개 부처 6개 사업
-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령 및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
  - 6개 부처 7개 사업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583~588.

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가. 현 황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16~2019년까지(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9년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의미
  -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토대로 최근 4년간의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9년도 집행률이 70% 미만인 281개 사업을 분석
-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281개의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234개 사업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164개의 사업은 2020년 9월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포함
- 164개 사업 중 80개 사업이 2020년 대비 증액되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80개 사업에 2020년 대비 46.3% 증액된 6조 3,581억 1,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각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2021년도 예산(안)에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80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589~617.

## V

## 정책별 분석

## 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등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의미(「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 202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79개) 예산안 규모는 30.6조원(+5.1조원)
    - － 실업소득 유지·지원 12.5조원(+2.2조원), 고용장려금 8.3조원(+1.8조원), 직접일자리 3.1조원(+0.3조원), 창업지원 2.6조원(+0.3조원), 직업훈련 2.3조원(+0.0조원) 및 고용서비스 1.8조원(+0.6조원) 순

## 나. 분석의견

- (유형별 자원배분) 고용상황 개선 속도, 재정지출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 일자리사업 유형별 특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자원배분 검토 필요
  -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은 빠르게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소요될 수 있고, 직업훈련, 창업지원은 직접적으로 고용상황을 개선하지는 않으나 민간의 자생적 역량을 제고하며 장기적 지속가능성 높음
-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고용장려금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의 규모 증가로 사업의 주요 자원('21년 예산안 기준 60.2%)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바, 각 계정의 재정수지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여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여력 개선 필요
  - 2021년 계획안 기준 2,559억원 적자이나, 2020~2021년 공자기금 예수금 제외시 적립금은 2020년 말 기준 소진 예상 및 2021년 재정수지는 3조 3,215억원 적자 예상

- (직접일자리) 고령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민간일자리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민간일자리 이행을 고려하지 않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별도로 관리하는 등 방안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고용장려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시장 충격과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 청년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청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평가 등급이 차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을 고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 평가등급 등 세부 평가결과 공개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1~32.

## 2

## 소비활력제고 사업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정부는 2021년에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소비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4 바우처·쿠폰을 공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할인·발행을 지원할 계획
  - 4대 바우처는 농산물구매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휴가지원이 있고, 4대 쿠폰은 농수산물 쿠폰, 외식 쿠폰, 숙박 쿠폰, 체육 쿠폰으로 구성됨
- 2021년도 예산안에는 4+4 바우처·쿠폰 공급에 전년 본예산 대비 3,013억원(159%), 전년 추경 대비 1,455억원(42.2%)이 증액된 4,90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237억원(337.4%), 전년 추경 대비 2,590억원(24.2%)이 증액된 1조 3,271억원을 편성함

## 나. 분석의견

- 4대 바우처 사업 중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 대비 이용률이 하락한 상황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안정될 경우 미사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20년 추경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할인쿠폰 사업이 재개될 경우 방역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대규모 재난 시에 소비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할인쿠폰 사업의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최근 발행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엄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하여 국가재정 투입의 적정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사용의 편리성 제고 및 가맹점 소득파악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33~59.

## 3

##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 가. 현황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중소·벤처 기업의 유동성 공급·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 73조원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기업 정책금융 사업’)으로 15개 부처 1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 신성장을 위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021년도 예산안은 34.0조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4.8조원(△12.5%) 감소
    - － 투자지원 2.3조원, 융자지원 29.8조원, 보증지원 1.8조원, 기타 사업 0.1조원 규모

## 나. 분석의견

- 기업 정책금융 프로젝트 사업목록 정비 필요
  - 동 프로젝트의 사업목록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생활 안정 관련 사업, 융자 대상자가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사업이 포함되는 등 기업 정책금융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사업만 포함하도록 정비 필요
- 펀드출자 사업 관련 적극적 집행관리 방안 마련 및 투자분야 다양화 노력 필요
  - 현재 투자 진행 중인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집행실적이 미흡
  - 펀드출자 사업의 투자분야가 민간 벤처투자 공급이 많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IC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분야에 펀드 사업이 중복적으로 계획됨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선정절차 정비 필요
  - 기업자산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우량기업의 선정 비중이 높으므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 정비 필요
- 보증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보증공급 방안 강구 필요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중소기업 비중이 2015년 38.7% → 2019년 48.0%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보증공급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60~86.

## 4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젊은 인구의 지역유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 2021년도 예산안은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22.1%) 증가
    -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의 27개 사업으로 구성

## 나. 분석의견

- 사업 추진체계 명확화 필요
  - 단년도 예산안 및 사업내역만 공개되어 있을 뿐, 근거 법령, 상위계획, 사업기간, 성과목표 등 세부적인 추진체계 미정
    - －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역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령정비→조직정비→상위계획수립→성과목표설정→사업시행 등 체계적으로 추진 중
    - －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은 226개 시군구 중 89개(39%)에 이르는 등 지역소멸의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할 필요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수혜자 등 사업내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따라 프로젝트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등 사업범위의 일관성이 미흡
    - － 귀농귀촌활성화(농식품부)는 포함, 귀어귀촌활성화(해수부)는 제외
    - － 디지털일자리(행안부)는 포함, 청년디지털일자리(고용부)는 제외 등
-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021년도 신규 프로젝트인데 사업수 및 예산규모 등에서 기존사업의 규모가 크고, 기존사업 중에는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존재
    - － 사업수: 기존사업 20개(74%) > 신규사업 7개(26%)
    - － 예산규모: 기존사업 2조 2,330억원(96%) > 신규사업 893억원(4%)
    - －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 도시재생(국토부), 어촌뉴딜 300(해수부) 등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 87~102.

## 5

## 한국판뉴딜 예산안 분석

## 가. 현황

- 한국판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진
  - 2025년까지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계획
- 2021년 한국판뉴딜 예산안은 21조 3,047억원 편성
  - 디지털 뉴딜 7조 8,886억원, 그린뉴딜 7조 9,726억원, 안전망강화 5조 4,435억원 규모
  - 일반사업 14.5조원, R&D사업 2.1조원, 정보화사업 1.4조원, 금융지원 3.3조원 규모
  - 정부직접수행 2.2조원, 민간이전 14.0조원, 지자체보조 5.1조원 규모
  - 2021년 신규추진 사업은 3.0조원 규모

## 나. 분석의견

- 재정투자를 통한 경제혁신과 공공수요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과 수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 필요
  -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수요 창출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장수요 창출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재정투입 효과가 지속되도록 할 필요
  - 한국판 뉴딜 R&D 지원이 기업의 사업화 및 신규투자로 연결되어 재정투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사업별 성과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
-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보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한국판 뉴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 사업별 중기재정소요계획이 미흡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의 안정성이 저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 필요

-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지방재정 여건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한국형 뉴딜펀드에 도입하려는 공공부문 우선 손실부담, 세제지원 방안 등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부담 및 지원수준을 결정할 필요
  - 정부기관의 행사성 사업이나 통상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분류 기준 정비 필요
- 그린뉴딜·디지털뉴딜 분야에서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별 성과를 면밀하게 관리하여 재정투입 효과를 제고할 필요
- 그린뉴딜 분야의 정책목표인 탄소중립화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과제별 성과지표와 목표로 제시할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기술개발과 보급 사업의 연계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 필요
  - 부처별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처 간 중복 투자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한 면밀한 ISP 수립 필요
-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재정소요와 재원에 대한 면밀한 관리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고용·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안착을 뒷받침할 필요
- 단계적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선행 필요
  -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신규 인력의 양성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103~152.

## 6

## 국가연구개발(R&amp;D) 사업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2021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추정 대비 12.0% 증가한 27.2조원 규모로 편성
  - 2021년 R&D 예산안 신규사업은 208개 사업, 1조 3,458억원 규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개 신규사업, 3,72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 나. 분석의견

- 한국판 뉴딜 R&D사업
  - 유사 사업간 통합·연계 및 차별화 방안, 엄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성과관리 방안 등 마련 필요
  - 한국판 뉴딜 R&D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비대면 분야 R&D사업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의 기술개발 수요 반영 및 현장실증 병행 등 필요
- 일자리 창출 R&D사업
  - 유망 신기술 분야 산업기술인력의 수요-공급 mismatch 해소, 중소-대기업/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기술인력 수급 편차 완화 등 인력양성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국가R&D 연구성과의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필요
-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R&D사업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민간기술수요 반영 및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 BIG3 분야 R&D사업 예산 확대에 의해 민간 R&D투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R&D과제 선정 및 성과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소재·부품·장비 R&D사업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여건 개선 및 R&D특허전략 강화 필요
- 기초연구 R&D사업
  - 학문별·지역별 과제지원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기초연구분야 과제배분 및 연구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153~216.

## 7

## 8대 사회보험 운용계획안 분석

## 가. 현 황

- 2021년도 8대 사회보험의 수입 211조원, 지출 174조원, 재정수지 38조원, 적립금 897조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재정수지 적자 예상(4.5조원)

## 나. 분석의견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필요
  - 5개 연금지급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부채에 미지급금 등 단기성 부채만이 포함되며 장래에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는 미포함
  - 2020~2024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를 공자기금 차입(7.9조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차입규모 결정 등에 대한 근거 미비 및 부채상환 계획 미수립
-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및 추계 강화 필요
  - 5년마다 시행되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결과 는 2015년 전망에 비해 분석범위 등이 협소하여 장기적인 재정위험 예측 및 논의에 한계
  - 사회보험 간 추계 기간, 추계 시기 및 방식 등이 상이하여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장기재 정전망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전망 적기 실시 및 전망결과 국회 제출 필요
  - 국고지원 규모가 2020년 10.2조원에서 2024년 15.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나, 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경제·사회적 변화 시 적기 재정전망 미실시, 국회 심사 제한 등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위험 요인 관리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9.)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소진 이후 2070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63.7%로 전망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관리 필요
  -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고갈에 따른 적자보전금 지원, 적자보전금은 2020년 3.3조원에서 2024년 5.9조원으로 증가 전망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217~251.

## 8

## 복지분야 현금성 지원사업 분석

## 가. 현 황

- 사회복지 분야 ‘순수 현금급여 및 현물·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금·바우처 지급 사업(이하 현금성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10조 8,933억원
  - 순수 현금급여 사업 예산안은 101조 9,762억원(전년 대비 10.0% 증가)
    - － 기여형(사회보험)은 71조 2,496억원(전년 대비 10.3% 증가), 비기여형은 30조 7,266억원(전년 대비 9.3% 증가)
  - 현물·서비스 지원 목적의 현금 지원 예산안은 2조 5,896억원(전년 대비 17.0% 증가), 바우처 지원 예산안은 6조 3,275억원(전년 대비 5.8% 증가)

## 나. 분석의견

- 비기여형 현금성 재량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기여형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34조 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 재량지출은 4조 7,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
- 구직·자립·교육 등 생활안정 이외의 목적으로 순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성 검토 및 철저한 성과관리 필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복 대상에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부 간의 협업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부정수급 최소화 및 환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부정수급자 증가 추세
    - －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는 '15년 1만 2,107명 → '19년 3만 716명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부정수급자는 '15년 60명 → '19년 702명
  - 2017년 부정수급 건에 대한 2019년까지의 누적환수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75.2%, 장애인연금 47.2%, 산재보험 급여 12.7%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252~298.

## 9

##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예산안 분석

## 가.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에 전년 대비 13.9% 증액된 20.7조원을 편성하였다고 발표
  - 2020년 8월 기준 25~29세 청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만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67.0%로 가장 낮은 수준
  - 일자리 예산은 3조 9,529억원으로 청년 희망패키지투자 전체 예산안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이 12조 3,274억원으로 59.4%, 교육·복지가 4조 4,564억원으로 21.5%를 차지

## 나. 분석의견

- 청년 대상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재정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의 사업범위는 사업대상이나 내용 측면에서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하고 청년 대상 사업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청년 대상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청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안 검토 및 성과분석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일자리나 주거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연령이 법과 정책, 예산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바, 청년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육,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예산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29세,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34세,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19~34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15~34세, 취업성공패키지 18~34세 등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299~327.

## 10

## 재난안전 사업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재난안전 사업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2021년 재난안전 사업의 예산안(19.8조원) 규모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총지출 555.8조원 대비 3.6% 수준
- 2021년 재난안전 사업 분류체계는 3대 분야(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총 43개 피해유형으로 구성
  - 풍수해(3.3조원) 유형이 가장 큰 규모이며, 도로교통재난사고(2.8조원), 재난 구호 및 복구(2.6조원), 철도교통재난사고(1.8조원) 순

## 나. 분석의견

-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 재난안전 사업 사전협의 결과 상 투자확대 사업의 예산반영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 － 투자확대(‘가’ 등급) 160개 사업 중 23%인 37개 사업은 예산안 규모가 유지 혹은 감소됨
  - 투자축소 사업 중 일부는 예산 자연감소분이 예정된 사업이나 종료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예산안 과정에서 증액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를 반감
- 2021년 핵심사업
  - 2021년 핵심사업의 사전협의 결과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안 반영률(81.6%)은 전체 사업의 예산안 반영률(85.7%)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부 사업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감액됨
  - 재난안전 분야는 지속적인 투자관리가 중요하므로, 단년도 핵심사업 선정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관리에 초점을 두고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
- 재난안전 사업 내 한국판 뉴딜 사업
  - 2021년 재난안전 사업의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일반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예산 검토 기준으로 인해 일반 사업 예산이 구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과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규모로 편성된 사례 존재

#### □ 재난대책비

- 2021년 지자체 시설물 복구 지원사업의 예산안은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은 구조 상 재해발생 시점으로부터 예산 집행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재해 대책비의 편성수준을 최소화하고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농림부의 재해대책비(용자) 사업은 유사 농업자금 사업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해당 유사사업에 비해 금리부담이 높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대책에 관한 용자 사업에 관한 구조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

#### □ 재난안전사업 선정 및 분류체계 개선 사항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사업을 3대 분야, 43개 피해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유형 구분은 일부 누락된 피해유형이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사업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
- 재난안전 사업 선정 과정에서 재난안전 사업 누락, 재난안전 사업 성격이 아닌 사업의 선정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 사업 선정기준을 확립할 필요
- 재난안전사업 분야 내 피해유형은 광범위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어렵고,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는 특성이 다른 분야이므로, 향후 재난관리 분야 피해유형을 중심으로 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재난안전사업 관련 제도 운영 개선사항

- 재난안전 사업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확보 및 부처간 협조 강화를 도모할 필요
- 재난안전 사업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328~375.

## 11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지원 예산안 분석

## 가. 현 황

- 정부는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지원 예산안으로 1조 8,253억원을 편성
  - 방역시스템 보강 등 고도화에 6,307억원, 백신·치료제 개발 등 산업화에 8,506억원, 국제인증 수출지원 및 ODA 등 세계화에 3,440억원

## 나. 분석의견

- 방역시스템 강화,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사업들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보완 또는 종합대책 수립 검토 필요
-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출범하였으나 회계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개선 필요
  - 질병관리청의 재정사업 중 기금사업이 72.8%를 차지하나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 소관 기금이 아니면 예산의 편성이나 계획변경 시 재정당국 뿐 아니라 기금 소관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기금 소관부처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집행기관과 상관없이 기금 소관부처의 재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예산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기금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이나, 동 기금은 매년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총 차입금이 연간 수입보다 큼
- K-방역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검토
  - 코로나19의 질환자를 위한 대응 : 감기환자 진료 보장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국가방역체계 구축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추진 지연 주의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임상 지원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사업의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376~398.

12

국방분야 예산안 부문별 분석

가. 총괄

- 2021년도 예산안의 국방 분야 예산 총계는 2020년도 본예산 50조 1,527억원 대비 2조 7,647억원(5.5%) 증가
- 2021년도 전력운영비 예산안의 신규증액사업 중 인건비 또는 인건비와 연계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국방예산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향후 재원배분의 융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나. 병력운영비 부문

- 부서관 계급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임용연령 상한 완화 및 여군 비중 확대 등 부서관 운영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력운영비의 경직성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다. 전력유지비 부문

- 군 시설 이전 사업은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은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총수명주기비용 연구와 연계하여 비용타당성 검증 필요

라. 방위력개선비 부문

- 국방 R&D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방분야의 기초연구 투자 규모와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필요
- ‘국내투자비중’과 ‘완성장비 국산화율’ 등 현행의 지표들은 핵심요소기술의 국산화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위력개선비 투자가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 및 방위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399~437.

제 2 부  
위원회별 분석





## 제1장

## 국회운영위원회



## I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개별 사업 분석】

## 1

##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 예산 면밀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국정운영관리 사업에는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0-01목)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020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 규모로 재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집행내역 및 내년도 소요와 관련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5~7.

## II

## 대통령경호처

### 【개별 사업 분석】

#### 1

#### 경호업무전산화 사업 일반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경호업무전산화 사업에 정보화 관련 연구사업(2건) 추진을 위하여 일반연구비(260-01목) 2억 3,000만원 편성
  - ‘통합 ERP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1억 3,000만원,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ISP 수립’ 1억원

##### 나. 분석의견

- 경호업무전산화 사업의 정보화 관련 연구사업은 과업수행 기간 확대 등 정부예산안 편성·제출 당시와 다른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연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는 바, 일반연구비(260-01목)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4~16.

## III

## 국회

## 【개별 사업 분석】

## 1

## 방문자센터 운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필요

## 가. 현 황

- 방문자센터 운영 사업은 방문자센터 운영을 통하여 열린 국회 이미지를 제고 하고, 참관서비스 개선으로 국회참관객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

## 나. 분석의견

- 방문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헌정기념관 전면 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변경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23~24.

## 2

## 자료보존관 근무직원 주택보조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자료보존관 기관운영경비는 직원 이주 및 주거지원, 시설방호 업무 및 개관 준비업무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3억 800만원

## 나. 분석의견

- 자료보존관 근무직원에게 지원할 예정인 주택보조비의 지급규정 마련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25~26.

## IV

## 국가인권위원회

### 【개별 사업 분석】

#### 1

#### 직원역량강화 교육 급식비를 국내여비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

##### 가. 현 황

- 직원역량강화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업무 영역별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

##### 나. 분석의견

- 직원역량강화 교육 내역사업에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국내여비에 통합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33~34.

#### 2

#### 북한이탈여성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유사사업과 차별화 필요

##### 가. 현 황

- 북한인권 정책개발은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와 동일한 1억 1,000만원

##### 나. 분석의견

- ‘북한이탈여성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하므로, 차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35~36.

## 제2장

## 법제사법위원회



## I

## 법무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관련 법무부 역할 강화 필요 등

## 가. 현 황

- 2020년 9월말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8건
  - 총 8건 중 3건 종료, 5건 진행 중이며, 중재의향서는 접수되었으나 중재 제기전인 사건 3건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정대비 20억 4,800만원 증액된 48억 8,200만원
  - 쉐들러 사건 16억 100만원, 론스타 사건 12억 2,600만원, 게일 및 중국투자자 사건 19억 2,200만원, 국제법 전문위원(2명) 이관에 따른 상용임금 등 1억 3,3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내외 로펌 법률자문비용에 관한 명확한 예산편성기준 마련 필요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의 집행률은 2019년 24%, 2020년 9월말 기준 25.4%로 매우 저조, 국내외 로펌 법률자문비용의 추계 부정확성이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요인
- ISDS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역할 강화 및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ISDS 사전예방 교육 강화 필요
  - 국제분쟁대응과가 신설됨(20. 8. 5)에 따라 향후 제기되는 ISDS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로펌에 위임하던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법무부 역할 강화 필요
  - ISDS 중재 제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ISDS 관련 교육 강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50~60.

2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편성의 문제점

2-1. 일반회계: 벌금 및 과료 수납액 감소 추이에 따른 세입예산 적정수준 편성 필요

가. 현 황

- 벌금 및 과료는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수납하는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2,539억 6,000만원 증액된 1조 7,157억 6,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벌금 및 과료는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88.8%에 해당하는 주요 재원이거나, 최근 4년간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납률과 수납 감소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 적정수준 편성 필요
  - 2016년 1조 4,095억원에서 2019년 1조 1,375억원으로 최근 4년간 2,721억원 감소

2-2.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소 수입의 적정예산 편성으로 특별회계 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괴리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교도소 수입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교도소 수입은 세입예산안의 64.6%에 해당하는 주요 세입원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5억 7,400만원 증가한 893억 8,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교도소 수입의 수납액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괴리 최소화 필요

##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의 2021년도 수입 계획안은 전년대비 236억 1,400만원 증가한 1,060억 5,400만원

### 나. 분석의견

-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 정확성 제고 필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무부는 벌금 수납액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100분의 8로 산정하여 전년대비 236억 1,400만원 증액된 1,060억 5,400만원을 편성함
  - 그러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100분의 8로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및 과료 수납액 감소 추이를 볼 때 2021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기금에 전입되어야 할 금액은 911억원으로, 법무부가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산정한 1,060억 5,400만원은 그보다 약 15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61~71.

3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재설정 또는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업

3-1.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자공증시스템 운영’은 전자공증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화상공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와 동일한 4억 7,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현행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화상공증 완료처리건수에 공증제도 개선 실적 건수를 더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상공증 완료처리 건수보다는 ‘전자공증으로 처리 가능한 공증건수 대비 전자공증 완료처리 건수’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

3-2. 법률구조 사업: ‘임대차분쟁조정 수혜자 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법률구조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2021년 예산안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7억 2,100만원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3,2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

나. 분석의견

- ‘임대차 분쟁조정 수혜자 수’ 성과지표는 그 측정산식을 ‘접수건수’ 뿐만 아니라 ‘조정개시 건수 대비 조정성립 건수’도 포함하도록 개선 필요

### 3-3. 전자감독 사업: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추가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가. 현 황

- 전자감독 사업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폭력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2,800만원 증액된 222억 1,500만원

#### 나. 분석의견

-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는 사업의 목적을 포괄하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의 재범률은 2017년 1.77%에서 2019년 1.97%로 증가
  - 동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특정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 할 때 현재의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라는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 보기 어려움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72~83.

## 【개별 사업 분석】

### 1

#### 공증사무대행청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필요

##### 가. 현 황

- 법무부는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공증사무대행청’이라 함
  - 2021년도 예산안에 공증감사 수행경비 372만원과 공증사무대행청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1,128만원 등 총 1,5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공증사무대행청은 단순히 공증인의 업무를 정부기관이 대행할 뿐으로 이를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인 ‘조사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액 삭감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84~87.

## 2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2-1.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 가. 현 황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입국 전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 전자여행허가제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2021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1억 4,900만원 증액된 12억 4,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전자여행허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원화 대상국가 선정 및 정보제공 항목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 2-2.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숙박업자 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

## 가. 현 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
  - 법무부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9억 6,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숙박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88~97.

3

검찰운영 단위사업의 '구호 및 교정비' 집행률 부진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 법무부는 수사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성범죄등 사회적약자대상범죄단속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구호 및 교정비(320-06목)를 세출 예산에 편성
  -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2억 4,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구호 및 교정비(320-06목)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1.2~38.8%에 불과한 실정으로,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구호 및 교정비의 집행률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조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98~100.

4

검찰국외훈련 연례적 예산편성과 집행 불일치 개선 필요

가. 현 황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외훈련 지원 사업은 검사 및 수사관의 국외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9억 6,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국외훈련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를 개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01~103.

## 5

##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관련 예산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등을 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1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한편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04~107.

## 6

## 대체복무 시설의 완공시기를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은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역 36개월 복무를 위한 합숙복무 시설을 개선하고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8억 3,400만원 감액된 200억 9,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23개소의 대체복무 시설을 기준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 2021년 5~6월경 또는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08~111.

7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교도소운영기본경비 사업의 포상금 집행실적  
제고 및 적정소요 반영 필요

가. 현 황

- 법무부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교도소운영기본경비 사업에 포상금을 각각 편성하여 집행
  - 2021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포상금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300만원이며, 교도소 운영기본경비 사업의 포상금 예산안은 전년대비 3,400만원 증액된 5억 2,300만원

나. 분석의견

-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직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필요
  - 교도소운영기본경비 사업의 민간인 신고포상금은 연례적으로 교정행정 유공포상금으로 전액 집행되고 있으며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의 포상금도 매년 불용되거나 집행을 부진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12~115.

## II

## 법제처

## 【개별 사업 분석】

## 1

## 행정기본법안 심의경과를 고려하여 예산규모 조정 필요

## 가. 현 황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은 행정법 집행 등에 필요한 원칙적 사항, 개별법상 공통사항 등을 발굴분석하여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억 4,200만원 증액된 6억 5,500만원

## 나. 분석의견

- 행정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백서 및 주석서 발간 등 일부 예산은 제정법안 심의경과를 고려하여 조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22~125.

## 2

## 법령용어 발굴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 반영 필요

## 가. 현 황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되는 법령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3억원

## 나. 분석의견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관련 법령용어 발굴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 반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26~129.

### III

## 감사원

### 【개별 사업 분석】

#### 1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연수 계획 수립 필요

##### 가. 현 황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은 개발도상국 감사원(최고 감사기구)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초청 연수를 병행 실시하여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 관련 시스템 및 감사기법을 전파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억 9,7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감사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종결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37~139.

## IV

## 대법원

## 【개별 사업 분석】

## 1

## 법관 보수 등 편성 규모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일반인건비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의 봉급 등 보수(110-01목) 일부 항목과 연가보상비(110-05목)는 법관 인원수 3,235명을 기준으로 산출

## 나. 분석의견

- 법관 인원수를 3,235명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법관 봉급 등 법관에 대한 일부 보수 항목과 연가보상비는 법관 결원수(2020년 8월말 현재 329명), 법관 인력의 충원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원규모 일부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49~152.

## 2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주요 정보화사업 면밀한 추진 필요

## 가. 현 황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7억 4,700만원 증액된 219억 9,400만원, 대국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76억 3,900만원 증액된 100억 6,600만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4,600만원 감액된 130억 8,4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정보화사업은 2020년 1차 연도 사업 추진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시스템 구축 완료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소요 재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53~157.

3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분리 편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전년 대비 95억 8,700만원 증액된 468억 4,100만원 편성
  - 2021년도에 일반회계의 전문재판운영 사업에 편성되었던 소년아동등 사회적 약자 전문재판 강화 등 6개 내역사업과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내역사업 등 총 7개의 내역사업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법서비스향상 사업으로 이관

나. 분석의견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세부사업으로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제도의 내용, 사업의 대상 및 수행방식 등에 있어 연관성이 크지 않은 다수의 내역사업이 나열적으로 편성되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리 편성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58~162.

4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1994년 등기특별회계가 설치된 이래 매년 편성되어 오고 있으나, 2020년 8월말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등 집행 현황과 향후 소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재원 규모의 조정에 관하여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63~165.

## V

## 헌법재판소

## 【개별 사업 분석】

## 1

## 헌법재판소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 가. 현 황

-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지능형 대국민 헌법재판서비스 구축(1단계) 사업 예산 17억 100만원과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6억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

## 나. 분석의견

- 지능형 대국민 헌법재판서비스 구축 사업의 지능형 사건처리 고도화(2024년 예정)와 같은 심리지원 기능은 실제로 도입하여 운영하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도와 발전단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 도입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활용 방식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구축할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원격 변론 등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72~178.



## 제3장

## 정무위원회



## I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주요 현안 분석】

## 1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개선 필요

## 가. 현 황

-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사각지대를 시정하고 예방하며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2014년에 출범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출범 이후 5번의 규정 개정을 거쳐 2022년 6월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됨

## 나. 분석의견

- 부패예방추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기관과 기능 및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타 부처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역할과 비교하였을 때 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부패예방추진단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5.~13.

## 【개별 사업 분석】

### 1

####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 대상의 대표성 확보 필요

##### 가. 현 황

- 국무조정실은 2020년부터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청년정책 실험실로 구성된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과 동일하게 2021년 예산안에도 10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현재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은 연령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년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책에의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4~19.

### 2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예산의 자의적 이월 시정 필요

##### 가. 현 황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으로 편성되어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부터 국무조정실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고 OECD에 직접 지급하는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

##### 나. 분석의견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출연금 규정을 자의적으로 준용하여 집행 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오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20~23.

## II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 1 고충민원 처리 관련 분석

##### 가. 현 황

- 고충민원은 일반민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2차 민원으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민원처리기관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 권익을 구제하고 관련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동 사업은 16억 2,5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민원처리 만족도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고충민원 처리능력 제고 노력 필요
  - 2016년 접수건수 30,252건, 처리만족도 77.2점 → 2019년 접수건수 56,189건, 처리만족도 75.9점
-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조치사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2016년 수용률 91.7% → 2019년 수용률 91.1%
- 성과지표 중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점수’가 전년에 비하여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
  - 2019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성과목표 72.7점, 실적 60.0점(달성도 82.5%)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30~35.

## 【개별 사업 분석】

### 1

#### 민원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 가. 현 황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수집된 민원 정보 등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4억 3,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웹사이트 응답속도, 부적절한 표현의 민원키워드 표출, 데이터 품질 문제 등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사이트 운영·기능에 미진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36~41.

### 2

####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 가. 현 황

-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은 「청탁금지법」 교육, 법 해석기준 마련, 위반신고 등의 처리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5억 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건수 및 보상금 지급 건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
  - 2018~2020.8. 청탁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2건, 약 1,500만원 집행
-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인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상황으로, 언론인 대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42~45.

## 3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필요

## 가. 현 황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은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홍보,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2021년도 4억 1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행을 강화할 필요
  - 2020년 8월 기준 보상금 및 포상금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46~48.

### III

## 국가보훈처

### 【주요 현안 분석】

#### 1

#### 보훈급여금 체계 개선 필요

##### 가. 현 황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급
  - 2021년도 예산안에서 보훈급여금은 전년 대비 730억 7,100만원 증액된 4조 4,449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9.2%의 비중을 차지

##### 나. 분석의견

- 보훈급여금은 수당 간, 상이등급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상률이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를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보훈급여금 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고 인상률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훈급여금 지급의 안정성·체계성을 확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60~72.

#### 2

####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 2-1.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가. 현 황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취·창업 및 직업능력교육을 지원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나. 분석의견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수’이나, 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

## 2-2. 일자리 두드림 사업 내실화 필요

### 가. 현 황

-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 행사는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을 병행하여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1억 7,000만원 가량을 편성하여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약 200만원을 9회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

## 나. 분석의견

- 일자리 두드림 행사 시 제대군인의 취업수요에 맞는 기업체를 확보하고, 행사를 통한 취업지원 실적을 관리할 필요

## 2-3. 구직급여 인상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적정 지급 수준 검토

### 가. 현 황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비연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원
  - 중기복무제대군인: 25만원×6개월, 장기복무제대군인: 50만원× 6개월

## 나. 분석의견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구직급여는 지급기간 확대·지급수준 상향으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전직지원금은 동결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보장 강화 추세에 맞추어 전직지원금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73~86.

## 【개별 사업 분석】

### 1

####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및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재검토

##### 1-1. 유엔사 근무장병 등 초청 사업과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사업 통합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유엔사 근무장병 등 초청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유엔사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병(유엔사 사령관 등) 등을 대상으로 참전국과의 미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 나. 분석의견

- ‘유엔사 근무장병 등 초청 사업’의 경우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 1-2.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2021년 신규 편성된 미래평화학술회의의 지원사업은 연 3회(미국2회, 한국1회) 개최하며, 한미동맹재단(KUSAF), 주한미군전우회(KDVA), 국방부, 주한무관단, 유엔사령부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참전국과의 미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

###### 나. 분석의견

- 미래평화학술회의는 기존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외에서 개최되는 2회의 세미나는 참석대상이 유사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별화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87~95.

## 2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관리 강화

## 가. 현 황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286억 8,8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료 및 유물구입처를 확대하여 양질의 문화적 자산을 확보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96~101.

## 3

## 월남전참전자회 기념사업 지원 예산 중복 편성 문제

## 가. 현 황

-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은 공법단체의 참전기념행사를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공법단체주관 참전기념행사 지원사업 중 월남전참전자회 참전기념사업은 일반회계와 보훈기금에 각각 편성되어 있으나, 보훈기금 지출 규정, 여유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훈기금으로 일괄하여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02~105.

4

보훈기금 수입에 88골프장 매각 대금 제외 필요

가. 현 황

- 보훈기금 수입 중 기타재산수입은 보훈기금 운용 중의 일시 유희 여유자금이나 중 장기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 등에 예탁하고 수납하는 이자 67억 1,900만원, 88골프장 매각대금 1,227억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분석의견

- 88골프장의 운용수익이 보훈기금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보훈단체의 매각 반대 등을 고려할 때 88골프장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대금을 보훈기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06~110.

## IV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분석

##### 1-1. 과징금 환급 관리 필요

###### 가. 현 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과징금 환급액은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해당연도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서 차감
- 2016~2019년 매년 1,000~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음

###### 나. 분석의견

-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등

##### 1-2. 과징금 미수납률 축소 노력 필요

###### 가. 현 황

- 2020년 8월 기준 과징금 임의체납액은 383억 7,200만원으로 최근 5년 간 임의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

###### 나. 분석의견

-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며 임의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임의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16~123.

2

기업집단 사익편취 금지제도 관련 분석

2-1.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가. 현 황

- 2020년 8월말 기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9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 중 6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음
-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가장 최근에 고법에서 패소한 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

나. 분석의견

-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과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다른 상황으로, 앞으로의 행정소송에서 적극 대응이 요구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필요

2-2.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제고 등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유도 필요

가. 현 황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법률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2015년부터는 거래비중과 거래규모가 등락을 보이는 중이고,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나. 분석의견

-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이 내부거래에 대해 자발적으로 위법성·부당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사익편취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24~133.

## 【개별 사업 분석】

### 1

####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위반행위 적발 강화 필요

##### 가. 현 황

-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으로 2021년도 예산안 21억 3,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지급 건수를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한 신고·지급 건수는 저조한 상황으로, 기타 유형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 실적을 제고할 필요
- 홍보수단 및 예산이 한정되는 만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34~138.

### 2

#### 통계·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가. 현 황

- 통계·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공정위 관련 통계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2021년도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40억원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원

##### 나. 분석의견

-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전작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스템의 기능개선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능·서비스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39~144.

3

공정거래지원 사업 관련 고려사항

가. 현황

- 공정거래지원 사업은 직원교육을 수행하고, 정책·사건처리결과 등을 기업,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을 수행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0억 100만원

나. 분석의견

- 공정거래 전문교육 중 일부 교육과정을 외부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적합한 기관 등을 선정할 필요
- 서울사무소 지역사업자 교육은 2020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이나, 2020년 8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올해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충실한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45~148.

## V

## 금융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 1

## 효과적인 뉴딜펀드 조성 및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를 통해 뉴딜 분야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뉴딜 펀드를 조성할 계획
  - 동 사업은 2021년에 신규로 6,000억원이 반영

## 나. 분석의견

- 정책형 뉴딜펀드와 함께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뉴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두 펀드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
-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대상을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폭 넓게 설정할 계획이나 현재 모태펀드 내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뉴딜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두 정책펀드간 투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
- 정책형 뉴딜펀드는 공공부문이 우선 위험손실부담시 기본 10%에서 개별 펀드별로 투자위험도에 따라 최대 35%까지 확대할 예정이나, 기존 투자위험도가 높은 정책펀드들의 경우도 우선 위험부담 수준이 10%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58~168.

## 【개별 사업 분석】

### 1

#### 투자실적을 고려한 출자예산 조정 가능성 논의 필요

#### 1-1. 증권시장안정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실적 부진에 따른 출자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소요되는 자본금을 출자할 예정
  - 2021년 예산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1,358억원을 출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1,833억 3,000만원을 출자할 예정

##### 나. 분석의견

-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부진한 투자실적에 비추어 볼 때, 출자에 따른 BIS비율 하락을 보전하는 예산을 일부만을 집행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

#### 1-2. 산업은행 BIS비율 수준을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정부의 2020년 2차·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하락하는 산업은행의 BIS비율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1,4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

##### 나. 분석의견

- 기존의 2차·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산업은행에 출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산업은행의 2020년 3분기 BIS 비율은 정부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출자로 인해 2020년 2분기 대비 0.57%p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69~180.

## 2

## 공공부문의 출자비중 축소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및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임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0억원이 증액된 2,500억원

## 나. 분석의견

- 2020년 소재·부품·장비 혁신모험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예상보다 민간자금의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혁신모험펀드의 공공부문의 출자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81~183.

## 3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집행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가. 현 황

-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해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4,600만원이 감액된 6억 400만원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2020년말까지 예산의 20%정도에 불과한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업무처리 인력을 보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84~186.

4

효과적인 코넥스 신규상장 기업 지원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의 상장·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억 3,5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지원기업수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87~189.

5

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논의 필요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 사업은 재무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수기술 및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결합한 미래성장성 중심의 기업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억 9,500만원

나. 분석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다른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기관간 기술평가의 대상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90~193.

## 6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축소 조정 필요

##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대출상품) 운영시 신보가 일부보증을 지원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것
  - 동 사업은 2021년에 신규로 3,701억원이 반영

## 나. 분석의견

- 현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공급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보증 1년차 부실률이 연평균 부실률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공급 지연에 따라 감소하는 대위변제 계획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94~197.

## 7

##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노력 필요

## 가. 현 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담보설정비용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설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52억 8,100만원이 감소된 17억 4,700만원

## 나. 분석의견

- 주택금융공사가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수급권 강화, 담보주택 활용가능성 제고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근저당권 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98~201.

8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사업은 피보증인(주채무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신보가 보증인으로 피보증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
  - 동 사업의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11억원이 감소된 3,192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총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위변제금 지출을 전년대비 축소할 계획이나 동 계획은 최근 농수산업 분야의 창업지원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정책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202~205.

## V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별 사업 분석】

#### 1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사업 예산안 재검토 필요

##### 1-1.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 양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재검토 필요

###### 가. 현 황

-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양성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 양성 교육 운영에 2억원,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 국가자격 및 지정제도 연구·시행지원에 1억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2019년·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출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2021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의 적정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고, DPO 제도 도입 관련 매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1-2.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전문교육 운영의 적정 예산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2억 2,500만원,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전문교육 운영에 3억 7,5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교육 운영 예산의 무리한 집행을 위해 교재 개발이 줄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행하고, 교육 운영 예산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강자를 모집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216~230.



## 제4장

## 기획재정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 1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분석

## 1-1.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정보 공개 필요 등

## 가. 현 황

- 2020년 본예산 예비비는 3.4조원이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3차례 추경예산을 통해 5.61조원으로 증액, 이후 2021년도 예산안에는 5.4조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1년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 3.8조원 중 2020년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소요는 예비비가 아닌 일반 예산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차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2020년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한 예비비 집행내역 공개 필요

## 1-2.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일부 항목의 면밀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예산안 총칙 제12조은 목적예비비(3.8조원)의 지출목적으로 ①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② 구조조정 지역·업종 재정지원 등을 규정

## 나. 분석의견

- ‘구조조정 지역·업종 재정지원’ 목적은 위기발생 후 약 2년 반이 경과하였고 3년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내용도 구체화되었으므로 가급적 예비비 편성 지양
-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목적은 근거 법률 개정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6년부터 편성되었으나 근거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2년째 관련 일반예산을 편성 중이므로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 지양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23.

2

국유재산관리 제도 개선사항 제언

2-1.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세입예산간 정합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예산안 제출시 국회 제출 하며,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결산보고서 제출시 그 첨부서류로서 국회 제출

나. 분석의견

- 2021년도 예산안의 토지매각대(72-721)·건물매각대(71-711) 비목의 예산액과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치 간 괴리 다수
- 중·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안 중 국유재산 관리·처분 관련 비목의 수입예산액과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의 계획규모 간에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2-2. 국유재산특례지출 신설 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가. 현 황

-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에게 금전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용료등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무상양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 분석의견

-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근거를 명시한 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법률명과 조항을 포함시켜야 효력 인정
- 그러나 개별 법률이 아닌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4~35.

## 3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개선 필요

## 3-1. 청·관사 취득사업 계획액 편성시 집행가능성 검토 강화 필요

## 가. 현 황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청·관사 취득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재산 중 청·관사 등을 신축·매입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별 ‘공용청사 취득’ 프로그램 또는 ‘통합 청관사’ 프로그램에 편성

## 나. 분석의견

- 2015~2019회계연도간 청·관사 취득사업의 평균집행률은 71.1%인데 이는 정부 총지출 기준 평균집행률 96.2%에 △25.1%p가 미달하는 수치
-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관사 취득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계획안 편성시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3-2.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의 재검토 필요

## 가. 현 황

- 2021년도 예산총칙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총 2,000억원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나. 분석의견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 신설된 기금으로서, 신설 직후인 2012년 예산총칙부터 매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을 설정
-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등의 규모도 충분하므로 예산총칙상 일시차입등 한도를 계속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36~42.

4

정부출자수입 관리 강화 필요

4-1. 정부배당대상기관 배당규모 결정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중기목표 등 고려 필요

가. 현 황

- ‘정부출자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수입은 2020년 기준 1조 4,040억원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 정부출자수입 총계의 83.8%에 해당

나. 분석의견

- 2019~2020년 정부배당대상기업 평균배당성향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며 목표치에 미달. 이는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배당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
- 배당금 조정 등 우회적인 지원방식을 최소화하고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당초 제시한 중기목표 등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원칙대로 징수한 후 이를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

4-2.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수입 예산 계상의 원칙 준수 필요

가. 현 황

- 2021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중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입 예산은 4개 부처 7개 회계·기금·계정에 분산 편성중

나. 분석의견

-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부터 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수입예산안을 편성
- 일부 부처는 최근 결산평균 등 위와 무관한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43~52.

## 5 조세지출 증가추세 관리 필요

### 가. 현 황

-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한 각종 재정지원”을 의미

### 나. 분석의견

-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을 법정 상한을 매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나, 해당 세제지원분을 차감하고 2020~2021년 국세감면율을 산정하여도 법정 상한을 각각 1.0%p 이상 초과
- 이에 정부는 최근의 조세지출 증가 중 코로나19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3~57.

## 6 외화표시 외평채 원화 환산액의 정확도 제고 필요

### 가. 현 황

- 2021년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표시 외평채 신규발행 15억 달러(1조 8,255억원) 규모를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1년 외국환평형기금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외평채 수입은 외화로 조달되므로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실제 수입 규모는 변동되지 않으나, 기금운용계획 회계 상 원화기준 수입 계상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계획 편성 환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8~62.

7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2021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 계획안은 1조 3,131억 9,600만원 규모

나. 분석의견

- 2021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현지 사무소의 현장 중심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EDCF 본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집행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63~67.

8

공공자금관리기금 회계·기금 예수금 관리 필요

가. 현 황

-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 예수금(공자기금 수입)은 17조 6,270억원이 계획되었으며 기금 예수원금상환(공자기금 지출)은 20조 9,604억 7,600만원이 계획됨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수금(공자기금 수입)은 8조 4,191억 3,300만원이 계획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공자기금 지출)은 9조 7,667억 6,900만원이 계획

나. 분석의견

- 2021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공자기금 신규예수보다 예수상환이 높아 이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기금 등은 이에 대한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적정하게 공자기금에 예수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68~73.

## 【개별 사업 분석】

### 1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원칙 정립 필요 등

##### 가. 현 황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은 국가경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8억 9,8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최근 정책환경 급변을 이유로 그동안 수립한 4차 중장기 경제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작업을 중단할 예정인데, 약 3년간 투입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발표하거나 그동안의 작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정부는 향후 중장기 경제전략의 수립주기·기간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제4차 중장기 경제전략과 같은 지연 사례를 예방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4~77.

### 2

####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2-1.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가. 현 황

-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이자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0억원이 증가된 608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세입·세출 예산 외로 2021년도 일시차입금등의 이자상환에 집행할 예정인 2020년도 하반기 국고금 운용수익금은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부는 2020년 이후 세입여건 악화로 이 사업의 예산도 실제 집행이 재개되고 있으므로 2021년도 일시차입금등 이자상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

## 2-2. 재정증권 발행 대비 일시차입의 비중 최소화 필요

### 가. 현 황

- 「국고금 관리법」에 따르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입·세출의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 재정증권 발행, 국고금 상호예탁 등 활용

### 나. 분석의견

- 「국고금 관리법」은 2016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수단 중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 2017~2018년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총규모 중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5.7%로서 2013~2016년 평균인 44.3%를 크게 상회
- 국고금 운용 과정에서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정증권 발행 대비 한국은행 일시차입 비중을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8~84.

## 3

##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분석

### 가. 현 황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은 복권기금 재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11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61억 5,9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1년도 계획안의 전출금 중 상당규모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실제 사업이 아닌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될 예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시 이를 전출받는 기금의 재정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5~88.

## 4

##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세외수입 중 다양한 연체료·반환금 등을 편성. 또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는 국고금관리카드의 인센티브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내역으로 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 200만원이 감소된 116억 3,0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정부는 202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고금관리카드인센티브 비율이 사용실적의 1.0%에서 0.7%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2021년도 사용실적 전망액(6,991억원)의 0.7%만 예산안에 반영
- 그러나 동 시행령은 빨라도 2021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서 인센티브율 인하도 4월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실적 전망액 중 1/4분기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인센티브율을 적용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9~91.

## 5

##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 보완방안

## 가. 현 황

- 재정집행관리는 재정집행 실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본경비성 예산을 편성.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2억 7,8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최근 조기집행 목표의 초과달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부는 이러한 목표 초과달성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
-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와 같은 의무지출 등 재정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의 구성을 일부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2~98.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용역보고서 공개시기 조정 필요

가. 현 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본경비성 예산이 편성.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억 3,200만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본 보고서와 별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내 분과별로 관련 재정분야에 대한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이후 공개
- 분야별 보고서는 해당 분야의 정책환경 분석부터 중기에 걸친 개선방안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공개 시기를 일부 조기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9~102.

7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현 황

-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 계획안은 21조 1,100억 9,600만원으로 계획됨
  - 2014~2020년 동안 국고채 이자상환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규모는 0.7조원~1.9조원 수준이며, 2014~2019년 동안 불용 규모는 0.5~1.5조원 수준에 이름

나. 분석의견

- 2020년 국고채 이자상환의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정부안의 국고채 이자상환 편성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03~108.

## II

## 국세청

## 【개별 사업 분석】

## 1

## 근로장려세제의 결정통지서 발송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가. 현 황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은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을 위해 신청안내문, 결정통지서 등을 제작·발송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홍보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600만원

## 나. 분석의견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계좌 개설 신청을 한 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송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자들의 계좌 개설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17~120.

## 2

## 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 법률의 연계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국세행정전산화 사업은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998억 1,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징수의 근거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 이므로 가상자산거래 징수 시스템 구축 예산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1~123.

### 3

#### 국세통계센터 이용 공공기관 확대 노력 필요 등

##### 가. 현 황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세통계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동 시스템의 내·외부 사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억 5,800만원이 감액된 17억 2,6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세청은 서울에 국세통계센터를 추가로 설립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과 국세통계 기초자료 이용에 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4~127.

### 4

#### 감정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성과 모니터링 필요

##### 가. 현 황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억 6,300만원이 증액된 51억 2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증가비율 및 세수확대 등의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8~131.

## 5

##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 혜택 홍보 강화 필요

## 가. 현 황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00만원 증액된 9억 2,0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세청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 설치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는데 동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세금포인트몰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32~135.

## 6

## 세정홍보 사업 예산의 통합 필요

## 가. 현 황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는 징세법무국 조직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3억 6,4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세청은 세정홍보 예산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과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에 분산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의 세정홍보 예산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으로 이관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36~138.

### III

## 관세청

### 【주요 현안 분석】

#### 1

#### 관세 행정과 관련된 분석

##### 1-1. 관세 부과와 적정성 및 타당성 제고

###### 가. 현 황

- 2019년 관세불복 현황을 살펴보면, 인용금액은 전년 대비 2,548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4,530억 4,600만원을 기록하였고, 인용률은 40.7%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 나. 분석의견

- 관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이 높은 상황으로 적정하고 합법적인 관세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

##### 1-2.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능력 제고 필요 등

###### 가. 현 황

- 2020년 7월말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송패소율은 62%로 국내기업 패소율인 31%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경우 과세가격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다국적기업의 비협조 등으로 과세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관세부과 및 소송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나. 분석의견

-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순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관세조사 단계에서도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1-3. 재조사 결정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노력 필요

#### 가. 현 황

- 재조사 결정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기존처분을 취소·경정 등의 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하며, 「관세법」은 그 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나. 분석의견

- 2019년 지연 처리된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295일로 법령상 결정기간 규정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납세자의 권익구제 및 추가적인 환급가산금 지출 방지를 위하여 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1-4.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 가. 현 황

-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은 관세조사권 등을 견제하고,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3억 8,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납세자보호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할 필요
-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겸임하고 있고, 관련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추어 조속히 임명을 진행하고 정원을 반영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44~161.

2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통관 역량 강화 필요

2-1. 특송물류센터의 자동화 처리비율 제고 필요

가. 현 황

-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은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는 인천 특송물류센터의 운영·유지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55억 7,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특송화물의 증가에 따라 통관소요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송물류센터 자동화 처리비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특송물류센터 통관소요시간: ('17년)244분 → ('18년)282분 → ('19년)293분
  - 특송물류센터 자동화처리비율: ('17년)62% → ('18년)63% → ('19년)59%

2-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의 면밀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및 장비도입 사업은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세관 통합검사장을 신축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예산으로 57억 9,800만원, 장비도입 예산으로 17억 3,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차례에 걸쳐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18개월 연장될 계획으로, 증가하는 통관물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신축사업 및 장비도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
  -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으나, 공사부지 변경 등으로 건축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3년 6월까지로 연장될 계획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62~172.

## 3

## 관세국경에서의 밀수감시·단속 역량 강화 관련

## 3-1. 밀수 단속을 위한 감시 장비 도입·운영 관련

## 가. 현 황

- 조사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은 세관이 보유한 감시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219억 4,800만원이 편성,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조사감시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217억 6,7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관세청은 신규로 3D AI X-Ray 검색기 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기존의 2D X-Ray 일부를 3D X-Ray로 점차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시범 운용성과를 토대로 향후 배치·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
- 최근 5년간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발생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장애복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3-2.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amp;D) 사업 관련

## 가. 현 황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은 관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5억원(과기부·관세청 50%씩 매칭)이며, 2021년도 30억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SMART CCTV 기술은 개인식별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바, 사전에 이와 관련된 대치를 철저히 할 필요
- 복합 X-Ray 검색 기술은 H/W 개선 사업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73~184.

## 【개별 사업 분석】

### 1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분석

##### 1-1.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사업의 단계적 확대 필요

###### 가. 현 황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휴대품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확대를 위하여 2021년도 16억 7,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의 이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사업 확대에 앞서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
  - 2019년 4분기 기준 승무원 이용률은 25.2%, 여행자 이용률은 0.08%

##### 1-2. 휴대용 화물투시기 및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관련 개선 필요사항

###### 가. 현 황

- 관세청은 휴대용 화물투시기 및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2021년도 10억 9,9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휴대용 화물투시기는 2020년 2차례 유찰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휴대용방사능 측정기는 검사건수를 고려하여 세관별 배치대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방사능 전담검사 직원이 없는 상황으로, 방사능 검사·경보 건수가 많은 일부 세관의 경우 방사능 전담검사 직원을 충원하거나 원안위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85~193.

## IV

## 조달청

## 【주요 현안 분석】

## 1

##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가. 현 황

- 조달청은 민간에서 만든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9년부터 공공혁신조달사업(테스트베드)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의 지연요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필요
  - 조속히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04~214.

## 2

## 면밀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설계 필요

## 가. 현 황

- 2002년 개통 이후 18년간 사용해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전면개편하기 위해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조달청은 나라장터 시스템 개편과정에서 정보시스템종합계획(ISMP) 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방향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

-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체계 적용에 대해 우려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
-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자체조달 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15~220.

### 3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력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은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공조달 전시회, 벤더매칭 행사 등 국내외 행사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온라인 행사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 준비할 필요
- 조달청은 K-방역 물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시 직접진출 지원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21~225.

## 【개별 사업 분석】

### 1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사업 진행절차 조속 완료 필요

#### 가. 현 황

- 조달청은 노후화된 부산 금곡비축기지의 활용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매각을 추진

#### 나. 분석의견

- 향후 조달청은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절차 및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매각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26~228.

### 2 마스크 비축물자 관리 필요

#### 가. 현 황

- 마스크 비축 보관시설 임대료 사업은 코로나19 비상위기 대응을 위해 구매한 비축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사업으로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 조달청은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 감염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29~231.

## V

## 통계청

### 【주요 현안 분석】

#### 1

#### 경제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가. 현 황

- 통계청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와 분포, 고용·매출·비용 등 경영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며, 2021년 3차 경제총조사 실시 예정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 등에 따른 대면조사가 쉽지 않은 점 및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조사 등 전자조사를 병행 추진할 필요하며, 2020년에는 ‘전수·표본조사’를 병행하므로 표본조사에 따른 오차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38~246.

#### 2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내실화 필요

##### 가. 현 황

-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통계작성 지정기관 중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 또는 관리하는 통계작성기관이 공통적·표준적으로 활용하도록 통계청에서 구축한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관리체계인 나라통계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

##### 나. 분석의견

- 통계청은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시 이용률이 낮은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이용 확대를 위해 범용 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47~253.

## 【개별 사업 분석】

### 1

#### 통계데이터센터 비대면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통계청은 통계자료의 데이터 공유와 연계 융합,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

##### 나. 분석의견

-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통계데이터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54~257.

### 2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자체 통계 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신규통계 개발 시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부실통계가 작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각 부처 등 통계작성 기관 소관 통계를 수입대체경비를 운용하여 대행 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인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2021년 예산 편성 시 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 결과가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및 기타잡수입(통계생산대행) 예산안은 8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4억 4,800만원을 증액시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58~259.



## 제5장

## 교육위원회



## I

## 교육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지방교육정책 지원 사업의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등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현 황

- 지방교육정책 지원 사업은 공·사립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은 58조 764억원 규모

## 나. 분석의견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교육정책 관련 신규사업 추진 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등에 기초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자료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5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단순화되었으나, 2017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 도입,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사업 구조가 복잡화
  - 또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의무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와 지방비(시·도교육청) 재원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 그리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예산안에서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
  - 이는 지방교육재정 과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등에 기초하여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12~18.

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코로나19 및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우선순위 검토 등

가. 현 황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학교를 공간혁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결합한 미래형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2020. 7. 14.)에 포함된 과제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868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시간 감소 및 수업 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수업 중심의 시급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의 현장 중심 대규모 교실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단의 반복으로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수업 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에는 가정에서의 비대면 원격수업 내실화 방안,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등교수업이 가능한 과밀학급 해소방안 등 학생의 수업시간 확보 및 수업질 제고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대규모 재정소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국가재정법 등에서 사전 이행 절차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7조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등을 반영한 예산안 국회 제출 필요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국비 5.6조원, 지방비 13.0조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약 18.5조원 소요되는 대규모 중기(2021~2025년) 사업이며, 전체 물량의 25%는 BTL로 추진하고 BTL 정부지급금이 2042년까지 발생
- 유사한 내용의 기존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한 정교한 사업설계가 미흡하다는 점, 과거 초중등 교육시설 개선 사업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적정 규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19~30.

## 【개별 사업 분석】

### 1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가. 현 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30억원이 증액된 1,71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0년 사업규모가 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시범사업 예산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성과 확인 필요
  - 지방비 투자심사 미완료 등으로 2020년 10월 현재 시범사업 예산 1,540억원 중 304억원 집행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31~35.

### 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은 유치원 교육비 전액을 교육세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은 어린이집 보육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2021년도 예산안은 각각 1조 6,120억원, 1조 9,408억원)

##### 나. 분석의견

- 2021년 예산에서 2018년에 실제로 발생한 교육세 불용액 216억원과 국고 불용액 803억원을 각각 수입으로 계상 필요
  - 2019년 집행잔액(894억원)을 2021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상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36~40.

3

EBS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현 황

-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AI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세부사업), EBS 활용 콘텐츠 제작(내역사업)의 2개 사업이 한국방송공사(EBS)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각각 92억원, 359억원 규모

나. 분석의견

- AI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과 EBS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의 성과가 EBS에 귀속되므로 부대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용도로 활용 필요
  - AI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과 EBS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의 예산안 중 간접비, 인건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41~45.

4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의 대면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은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미래교육 혁신 기반 구축, 에듀테크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8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에도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대면서비스가 요구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에듀테크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위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사의 미래교육 체험, 교수·학습 모델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46~50.

## 5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협력 필요

## 가. 현 황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은 디지털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특화분야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공유하여 수준별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신규, 내역)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1,048억원

## 나. 분석의견

- 고용노동부 소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이 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교육부는 신기술분야 인력수요전망, 훈련내용 및 수준 설정 등에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51~55.

## 6

## 사학혁신 지원 사업 출연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 등

## 가. 현 황

-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사학의 민주성·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법인운영 개선을 통한 대학 발전의 선순환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타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신규)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53억원

## 나. 분석의견

-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한국사학진흥재단 출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사학이 스스로 수립한 공공성 확보 계획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행하기 쉬운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학혁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56~60.

7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

가. 현 황

-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은 학생용 태블릿 PC를 보급(400교 대상 8만대) 하여,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e-book, PDF 등)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28억원 규모

나. 분석의견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의 경우 2020년 선도학교 선정 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선도학교의 교수·학습 유형 개발은 2021년에 추진될 예정 이므로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교수·학습 모델 개발·보급의 성과 확인 필요
  - 2020년 405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414학교만이 지원하여 97.8%가 선정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61~64.

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학생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및 학습부진 조 기 예방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진단 제도 및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센터의 업무,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기초학력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있으나 국가-사도-학교 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65~67.

## 9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등과 중복 우려

## 가. 현 황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1,030억원

## 나. 분석의견

- 통합된 교육활동지원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다른 측면이 있어 교육급여 항목이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및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의 항목과 중복 우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68~71.

## 10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의 집행 관리 필요 등

## 가. 현 황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직업계고 학생(3학년)과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3학년)이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30억원 증액한 1,330억원 규모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 및 고용여건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단가 인상(400 → 500만원)이 취업 유인 강화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72~76.



## 제6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현안 분석】

## 1 인공위성·달 탐사 분야 R&amp;D사업 예산안의 현황 및 문제점

## 1-1. 달 탐사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 가. 현 황

- 달 탐사 사업은 550kg급 달 탐사선 제작 및 발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6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달 탐사 사업은 실집행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

## 1-2.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 예산안 및 3호 개발 일정의 면밀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은 산업체 주도의 중형위성(500kg급)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4호 위성 125억 9,000만원과 3호 위성 95억 6,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4호 위성개발 사업은 사업 착수 이후 연구기관 선정 및 발사용역 계약 등이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3호 위성은 발사체(누리호) 일정 지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발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22~35.

2

바이오의료 분야 R&D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기존사업 연계·활용 방안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신약개발 단계 중 후보물질 도출~임상3상까지를 지원하여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R&D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150억 4,800만원을 편성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1~2030년, 총사업비는 2조 1,758억원 규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

나. 분석의견

-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선행사업(범부처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타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신약개발 과제와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약개발 단계별 연구 성과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2-2.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은 질환의 기초 기전·탐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법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단계 연계와 실용화를 지원하는 R&D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18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평가 결과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연계·협력 방안 미흡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3.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규모 적정검 검토 및 수요기관을 고려한 기술개발 추진 필요

#### 가. 현 황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분야별 핵심·공백기술을 개발하여 감염병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R&D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102억원을 편성
  - 확산예측기술, 진단기술, 치료제 개발기술, 백신 개발기술 4개 분야에 4년 동안 국고 487억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과제에 기업이 참여할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사업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신·변종 감염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당국 등 수요기관의 의견 수렴과 연구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기술개발 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

### 2-4.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 황

-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은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에측진단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7억 5,700만원 증액한 87억 7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2020년 사업 착수 이후 사업단 출범, 과제공고 및 선정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1년 실제 집행가능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안의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36~56.

## 【개별 사업 분석】

1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현 황

- 동 사업은 동북아 대기질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5억원 증액된 10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현상규명 국제공동연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2020년 사업단장 선정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1년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57~61.

2

### 수소 분야 R&D 사업 간 중복 최소화 및 연계 추진 필요

#### 가. 현 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안에는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2021년 예산안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141억원,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33억원

#### 나. 분석의견

- 두 사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원분야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수소 원천연구 성과가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2~67.

## 3

**일몰관리혁신으로 지정된 STEAM연구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가. 현 황**

- STEAM연구 사업은 과학 및 ICT 등의 융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된 216억 3,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2020년 일몰관리혁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신규내역과 타 사업을 통해 추진하던 계속과제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분야 연구공백의 방지’라는 일몰관리혁신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당초 STEAM연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세기획을 면밀히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8~72.

## 4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집행 내용과 상이한 예산안 편성 개선 필요 등****가. 현 황**

- 동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9억 2,500만원 증액된 1,148억 6,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도 예산안에 2020년도 집행내용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물량과 단가의 잦은 조정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20년 예산의 상당부분을 4분기에 선정·집행할 예정으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내역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3~80.

5

**이공계스마트인재양성지원 사업의 기존사업 연계성 강화 및 콘텐츠 활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이공계스마트인재양성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IT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습과 현장 프로젝트 수행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STAR-MOOC 등 공유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1~84.

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 기존사업 및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성과 점검 후 지원 검토 필요**

**가. 현 황**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 공공기관(45개)을 대상으로 시범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41억 5,8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2019년부터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혁신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 검증 후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5~92.

## 7

###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체계를 구체화 할 필요

#### 가. 현 황

- 동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부처 협력을 통한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R&D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35억원이 신규로 편성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

#### 나. 분석의견

-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 및 의사결정 체계, 예산의 집행방식이나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3~96.

## 8

###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예산안의 감액 조정 필요

#### 가. 현 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중 2020년 9월말 기준 총협약기간 내에서 과제중단 또는 연구비 집행 중지 중인 2개 과제에 2021년 예산안 3억 2,900만원 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

#### 나. 분석의견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과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2021년 예산안에는 이미 중단되거나 연구비 집행이 중지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액 조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7~99.

9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의 기금수입을 고려한 세출사업 편성 필요

가. 현 황

-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의 수입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자체수입의 대부분(2021년 97.4%)을 차지
  - 2021년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의 세출사업 계획안은 전년대비 28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128억 5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부담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특히, 2020~2021년 착수한 신규사업의 연차소요 및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총사업비 확대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0~106.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적정수준 조정 필요

가. 현 황

-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위원회 활동과 지원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7,600만원 증액한 41억 4,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예산이 실제 임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고, 지급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7~111.

## 11

##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7억 5,000만원 감액한 721억 5,000만원 편성
-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데이터 구매·가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9억 9,100만원 증액한 1,229억 7,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별로 데이터 등록 및 활용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2~118.

## 12

##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 수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 교육콘텐츠에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31억 7,0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별도의 신청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부과금 조치가 실시 중이므로, 해당 조치의 연장 실시여부를 감안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9~122.

13

지하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사업의 면밀한 ISP 수립 필요

가. 현 황

- 지하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사업은 시설물 노후화로 데이터 축적이 미비한 지하공동구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원 증액한 80억 5,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2021년 ISP 수립후 본사업과 잘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23~125.

14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개선 필요

가. 현 황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디지털배움터를 설치·운영하고 강사와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교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2억 3,600만원 증액한 805억 5,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21년에는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교육내용 중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의 이용자 보호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은 타 부처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26~130.

## 15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기존 미디어센터 지원 사업과 차별화 필요****가. 현 황**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1인 미디어 산업의 인프라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신규로 55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일부 스마트미디어센터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센터에서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1~133.

## 16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가. 현 황**

-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운용·관리 등 기금 운용업무와 기금사업 관리·평가·성과관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19억 4,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외업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4~136.

17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74억 3,700만원 감액한 2,029억 5,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상황 악화로 최근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예산안에 편성한 문제점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7~140.

## II

## 방송통신위원회

## 【개별 사업 분석】

## 1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 동 사업은 터널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1,000만원 증액된 8억 8,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 이후 실제 개선작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52~158.

## 2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동 사업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에 관한 법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11억 7,1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위반사례 적발 및 처분 건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59~162.

3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강화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유아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 2021년 계획안은 4억원으로 신규 편성됨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추진하는 미디어 교육과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63~168.

###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별 사업 분석】

1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업 세부계획 및 추진체계 고도화 필요 등

##### 가. 현 황

- 동 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 및 핵안보·핵비확산 체계 고도화를 위한 규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311억원 편성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년(2021~2026년), 총사업비 1,813억원 규모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R&D 과제의 성과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기획 및 선정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분야 연구저변이나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R&D과제 선정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외부 산·학·연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 신규과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위원 후보단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78~187.

2

**한울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수행주체  
명확화 이후 추진 필요**

**가. 현 황**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은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울주 센터 건설비 등 48억 1,400만원과 한울권 센터 기본설계비 등 4억원이 편성됨

**나. 분석의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관리 업무를 위탁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울권 신축 사업은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88~193.

3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의 수요발굴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원자력안전규제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강의 개설과 교육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2개 대학 신규 추가를 위해 전년대비 3억 4,600만원 증액된 13억 4,6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2020년 신청대학 수를 고려할 때 수요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94~197.

## 제7장

## 외교통일위원회



## I

## 외교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신규 국제행사 사업의 문제점

## 1-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와 P4G 정상회의 예비계획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사업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34억 1,200만원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및 국제사회 논의 주도를 위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58억 8,600만원

## 나. 분석의견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코로나19상황 대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탄력적으로 임하여 2021년 예산안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1-2.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행사대행 경비 예산안에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외교부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행사대행 예산을 2021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2020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비비 미배정

## 나. 분석의견

- 행사대행 예산을 조속히 산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사대행 예산이 2021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1-3. 한-유엔 관계 30주년 기념 세미나 세부계획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사업은 2021년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성과를 평가·홍보하고 유엔 외교의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8억 7,000만원

#### 나. 분석의견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이후 연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한-유엔 관계 30주년 기념 세미나 세부계획을 예산안에 맞게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에 임할 필요

### 1-4. 고용부담금(320-09목)은 일용임금(110-04목)과 별도로 편성할 필요

#### 가. 현 황

-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사업은 2021년 11월경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5억원

#### 나. 분석의견

-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 사업예산의 일용임금(110-04목)에 고용부담금(320-09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

### 1-5. 직접 수행 가능한 행사예산 별도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쿠바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는 쿠바 한인이민 100주년(2021년)을 맞아 한인 독립운동 청년원정대 파견 등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3억 5,000만원

#### 나. 분석의견

- 쿠바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 전액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직접 수행 가능한 행사 예산과 용역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23.

2

구)프랑스문화원 조속한 매각으로 예산 절감 등 필요

가. 현 황

- 구)프랑스문화원 매각 사업은 2019년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을 파리코리아센터로 이전한 후 기존 프랑스문화원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5억 5,400만원

나. 분석의견

- 강제집행 대상이 될 우려를 해소하고 예산을 점감할 수 있도록 구)프랑스문화원을 조속히 매각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4~26.

3

통일성있게 자문, 컨설팅 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가. 현 황

- 외교부의 2021년도 자문, 컨설팅 관련 예산안은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47억 5,3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동일 성격의 자문, 컨설팅 관련 예산들이 서로 다른 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7~29.

## 【개별 사업 분석】

### 1

#### 민간경상보조 증액 부적정

##### 가. 현 황

-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억 3,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6,500만원
  - 동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9,000만원

##### 나. 분석의견

- 2021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규모는 이관된 민간경상보조 5억원을 감안하면 증액된 것이므로 외교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30~32.

### 2

#### 신남방 보건협력 강화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간 차별화 필요

##### 가. 현 황

-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 정책홍보, 교류행사 등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9,100만원이 증액된 27억 9,900만원

##### 나. 분석의견

- 신남방 보건협력 강화 사업은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과 사업목적 등에서 유사하므로 차별점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33~36.

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응시자격에 전역예정자 포함 필요

가. 현 황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은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로 1~2년간 파견근무하게 하여 국제기구에 인적기여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기구에 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70억 200만원

나. 분석의견

- 국제기구초급전문가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 응시자격(병역)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되어 있는데 전역예정자도 포함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37~38.

4

국민외교센터 운영 예산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할 필요

가. 현 황

-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 사업은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외교역량 결집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원

나. 분석의견

- 국민외교센터 운영 예산은 국민외교센터 내부 인테리어 개선·보완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39~40.

## 5

## 파견직원 임차료, 임차보증금 등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할 필요

## 가. 현 황

- 협력사업 지원(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 운영, ODA 홍보 및 사업평가, ODA 연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억 7,500만원이 증액된 642억 7,6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무총리실 파견 직원에 대한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을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경상비로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43~44.

## 6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아제르바이잔(ODA) 예산안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아제르바이잔(ODA) 사업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3,300만원이 증액된 33억 5,900만원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상황,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분쟁상황 등이 계속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45~46.

## II

## 통일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남북협력기금 주요 증액사업 분석

##### 1-1.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 등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은 전년 대비 61억 5,000만원 증액된 1,779억원,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전년 대비 59억 4,300만원 증액된 180억 2,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은 불투명한 사업추진 여건, 포괄적 용도의 예비적 재원을 운용하는 사업 편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증액 편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시급성과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 등 치수 관련 사업과 조사 사업 재원을 반영하되, 민간항행 및 사업인프라 조성 재원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2. 보건의료협력 및 축산방역협력 사업 계획안의 문제점

###### 가. 현 황

- 보건의료협력 사업은 전년 대비 370억원 증액된 954억 5,900만원, 축산방역협력 사업은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내역사업에 신규 사업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며, 25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증액 재원은 코로나19 방역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 경비를 재산정하여 규모 조정 필요

- 보건의료협력 및 축산방역협력 사업의 재원 증액의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개별 지원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게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1-3.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 사업 추진계획 점검 필요

#### 가. 현 황

-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 사업은 전년 대비 41억 400만원이 증액된 475억 1,4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 1단계 사업은 기결정된 노선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공사 착수 등 사업 재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므로 통일부의 사업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재원의 반영 여부와 규모 결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58~75.

2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6,600만원 증액된 139억 1,100만원 편성
  -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도라산역 맞이방 전시장 조성비 등 32억 7,700만원 신규 편성, DMZ 남북공동 종합조사 사업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한 조사 비용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DMZ 관련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 방식 지양 필요
-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21년에 2020년 1차 연도 사업인 전시공간 조성을 포함하여 기획전시 등 다수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구 출경동 기획전시 등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 DMZ 남북공동 종합조사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조사 비용은 경제협력기반 조성 사업의 취지와 성격, 구체적인 사업 소요 및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계획액 반영 여부 심의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76~85.

## 【개별 사업 분석】

### 1

#### 통일+센터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3,000만원 증액된 33억 8,300만원 편성
  - 호남통일+센터 신축 공사를 위한 소요 재원 26억 7,500만원(지자체자본보조: 330-03목)과 표준모델·제도화 연구를 위한 소요 재원 1억 2,000만원(정책연구비: 260-02목)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통일+센터는 통일 관련 신규 지원기관(시설)으로서 불분명한 정체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86~90.

### 2

#### 특정 목적 연구사업의 통합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은 전년도에 별도의 사업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해외통일통합사례 연구를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 통합하여 편성

##### 나. 분석의견

-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의 특정 목적 연구 사업인 해외통일통합사례 연구를 포괄적 연구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미약해 보이므로 향후 해외통일통합사례 연구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일부의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1~94.

3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추진계획 검토 필요

가. 현 황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예산안 1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은 4박 5일, 13박 14일 기간의 숙박형 행사로서, 일반 국민의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선 행사 코스별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사업 수요 등 추진 상황을 보아 보완해 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5~97.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정비 필요

가. 현 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동 재단의 사업계획서 상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 부조제도로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을 위한 기준 정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8~100.

## 5

##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가. 현 황

-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3억원 감액된 210억 3,000만원 편성
  -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내역사업의 대면상봉 회수를 2020년 8회에서 4회로 축소

## 나. 분석의견

- 통일부는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인도주의적 성격과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 현실적인 시급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통하여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북한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01~103.

###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개별 사업 분석】

#### 1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제작 비용 등 비목에 맞게 편성할 필요

##### 가. 현 황

-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자문의원 통일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억 800만원

##### 나. 분석의견

-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예산은 블로그 및 SNS 제작, 지역협의회 활동스케치 등으로 일반수용비(210-01목)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10~112.

#### 2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와 해외 우리고장 평화플랜 일정 연계 개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발견·체감할 수 있는 평화과제를 발굴하여 지역별 평화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2억 5,000만원

##### 나. 분석의견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와 해외 우리고장 평화플랜 일정 연계 실시로 국외업무여비(220-02목)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13~114.

## 제8장

## 국방위원회



## I

## 국방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군 공항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시행 관련 예산 분석

## 1-1.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개선 사항

## 가. 현 황

- 대구·광주·수원에 위치한 3곳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율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 1-2.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재개 관련 고려사항

## 가. 현 황

- 국방부는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전면 보류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에 기존 군 공항 부지 옆에 연약지반공사를 실시하고자 125억원을 편성함

## 나. 분석의견

- 금년 예산으로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를 위한 연약지반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연약지반공사는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후 경과에 따라 탄약고 건립 및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탄약고 최종 이전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약지반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1-3.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 조정방안 검토 필요

#### 가. 현 황

-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계획임

#### 나. 분석의견

- 군 소음 보상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속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금 지급과 이자부담 축소를 위하여 2021년도에 대형화기사격장 잔여 물량 전체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31~142.

## 2

## 군 경계 강화 관련 예산 분석

## 2-1. 경계 과학화(CCTV)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 현 황

- 경계 과학화를 위한 감시장비 획득 사업에 전년 대비 1,911억 2,700만원 (1,455.8%) 증액된 2,04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울타라·경계초소 등 물리적 경계시설을 설치·보수하는 경계시설2) 사업에 전년 대비 1,158억 4,100만원 (503.2%) 증액된 1,388억 6,300만원이 편성됨

## 나. 분석의견

- 해안 경계력 CCTV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AI 융합 해안경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촬영 데이터를 조속히 제공하는 등 해안경계력 CCTV가 경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주둔지 경계력 CCTV 사업의 경우 국방부의 성능 기준 정립 후 각 군별로 조달이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CCTV 구매요구서를 금년 내 확정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경계작전에서 CCTV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CCTV의 성능 고도화 및 설치대수 증가로 인해 장기적인 유지보수 예산 소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는 향후 체계적으로 CCTV를 관리할 필요

## 2-2. 경계시설 사업의 대폭 증액을 고려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현 황

- 국방부는 2021년도 경계시설 사업에서 훼손되거나 노후한 유행철조망을 보강하고 조도가 높은 LED등으로 경계등을 교체하는 한편 자재와 규모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울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158억 4,100만원(503.2%) 증액된 1,388억 6,300만원을 편성함

### 나. 분석의견

- 경계시설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시설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배정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43~153.

## 3

## 군 인건비 사업 예산 분석

## 3-1. 당초 계획과 다른 병 봉급 인상 문제

## 가. 현 황

- 병 인건비 사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61억 800만원이 증액(6.5%)된 2조 2,32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병 봉급을 2020년도 대비 12.5% 인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서 병 봉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병 봉급을 격년으로 인상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다른 것임

## 3-2. 부서관 정원 확대를 고려한 운영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가. 현 황

- 부서관 인건비는 부서관의 봉급과 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에 부서관 정원 2,315명 증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55억 700만원(6.5%)이 증액된 6조 11억 6,200만원을 편성함

## 나. 분석의견

- 부서관 정원이 확대되는 만큼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서관 계급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임용연령 상한 완화 및 여군 비중 확대 등 부서관 운영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3-3. 군무원 및 민간인력 증원 시 장애인고용 촉진 노력 필요

#### 가. 현 황

-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민간인력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전년대비 4,700만원이 증액(8.9%)된 5억 7,100만원을 편성함

####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규모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54~164.

## 【개별 사업 분석】

### 1

#### 수소차량의 군 활용 적합성 검증 필요 등

##### 가. 현 황

- 국방부는 상용차량 획득 사업의 2021년 예산안에 수소버스 15대, 수소 SUV 27대 등 총 42대의 수소차량 구매를 위하여 131억 9,0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수소버스가 기존의 상용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2021년도 말 성능이 개선된 광역형 수소버스가 신규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필요
- 기 운영중인 수소SUV의 운행 실적이 미흡하므로, 친환경 차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운행빈도 및 거리 등 수요를 반영하여 수소SUV를 배치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65~169.

### 2

#### 병사 군 단체보험 사업 계획 미비 문제

##### 가. 현 황

- 병사 군 단체보험 사업은 병사의 민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실손보험료 가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134억 4,700만원임

##### 나. 분석의견

- 가입 대상의 범위, 보험의 형태와 보장 수준, 병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예산안 산출 시 보험료 및 가입전환률 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 규모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와 관련하여 군 의무정책 차원에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70~174.

3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6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육군 부대개편 6차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 계획에 따라 2021년 착수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임

**나. 분석의견**

- 육군 부대개편 6차 사업은 과거 육군 부대개편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첫 해에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75~178.

4

**교육용 탄약 예산 이관을 고려한 확보율 및 지원율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가. 현 황**

- 국방부는 단순 교육목적용 탄약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용 탄약에 대하여 2025년까지 연차별로 신규 소요를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국방부의 교육용탄약 예산 규모는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는 전체 교육용 탄약 예산 5,591억 5,000만원 중 29.7%인 1,663억 4,700만원을 국방부가 편성할 계획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기 계약 소요 및 단순교육목적용 탄약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용 탄약 예산을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나, 교육용 탄약의 확보율 및 지원율에 대한 성과관리는 동 사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교육용 탄약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성과를 관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79~181.

## 5

## 추경 감액 시설사업에 대한 연부액 과다 계상 문제

## 가. 현 황

- 2021년도 군 시설사업의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2020년도 추경에서 감액된 시설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 연부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한 사례가 나타남

##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2020년 추경으로 감액된 시설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2021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연부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이 연차별 연부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 규모를 고려한 집행가능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연부율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82~184.

## 6

## 1군지사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속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필요

## 가. 현 황

- 2020년도 8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99억 2,000만원 중 집행액이 8,800만원(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현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임

## 나. 분석의견

- 1군지사 이전사업은 2010년 이후 이전부지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총사업비 조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85~187.

7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2021년도 과태료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7억 9,100만원(0.7%) 증가한 6,996억 700만원임

나. 분석의견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운용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예비역의 현역부대 복무에 대한 근거를 「병역법」에 마련할 필요
- 동원훈련 보상비는 최저임금 수준 및 병 봉급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88~192.

8

해군 잠수함 승조원 유출 과다 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 잠수함 승조원의 연도별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유출률이 59%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144명의 승조원이 양성되었으나 61명의 승조원이 유출<sup>1)</sup>되어 유출률은 42%임

나. 분석의견

- 작전기간 과다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률이 높은 상황이나, 전력 유지 및 안전 운용을 위하여 숙련도가 높은 승조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 등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3~195.

1) 전역/승조자격 해제 및 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

## 9

##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대비한 재원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배정액이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협정인 제10차 협정에 따른 예산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합의액보다 예산편성액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사업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전용이나 향후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미지급분 증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등 재원활용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6~198.

## 10

## 국방분야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인사혁신처 이관 필요

## 가. 현 황

- 정부 전체 회계별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목적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기금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방부·방위사업청을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에서 통합하여 편성·집행

## 나. 분석의견

- 일반회계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회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이 편성·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9~202.

II

방위사업청

( 비공개 )

## III

## 병무청

## 【개별 사업 분석】

1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상시·균등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제공노력 필요 등

## 가. 현 황

-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현역병 모집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전공경력에 기초한 군복무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군복무 중 직무수행경력이 전역 후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8,200만원 증액된 24억 1,400만원

## 나. 분석의견

- 병무청은 2021년에 3개 권역(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상시·균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체험형 장비 중 전차 시뮬레이터나 드론VR 등은 특정 특기에만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체험이므로, 생활관보병·포병 체험VR과 같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효용이 될 만한 체험형 장비 모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66~271.

2

대체역 심사 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가. 현 황

- 대체역 심사 사업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제5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역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된 28억 9,400만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대체역 편입심사 처리율’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지표로 보이므로,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72~274.

3

사회복무요원 군 이러닝 학위강좌 수강료 지원 관련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대학을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 해당 대학의 군 이러닝을 활용한 학점 취득 시 필요한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을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
  - 2021년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예산안은 7,300만원

나. 분석의견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군 이러닝 학위강좌 수강료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수강신청 인원 및 학위강좌 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75~277.

## 제9장

## 행정안전위원회



## I

## 행정안전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 1-1.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 적정규모 검토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가. 현 황

-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은 행정·공공기관(730여개)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관리, 실측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8,660여개를 운영하는 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된 신규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는 1,116억 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추진방식과 적정규모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출연기관이 사업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관리비를 공제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일자리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 시 업체에 과도한 관리비가 제공되지 않도록 단가 산정기준을 재검토, 개선할 필요
  - 행정·공공기관 대상 사전조사와 실수요 파악에 근거하여 적정규모 편성 필요

## 1-2.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의 구조 및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은 청년 1,02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2개월) 및 행정·공공기관 인턴십(6개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인력을 양성하고 공공기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려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163억원

## 나. 분석의견

- 타 부처의 교육훈련 사업과 연계하는 등 일정수준 이상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게 실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별 수요조사와 데이터 일자리 사업 청년인턴십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편성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8~24.

## 2

## 지역사랑상품권 면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한 적정 발행규모 검토 필요 등

## 가. 현 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522억 4,400만원

## 나. 분석의견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근거한 적정 발행규모 검토 등
  - 최근 3년 간 발행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1,000억원→ 15조원)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여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한 사업 추진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의의를 고려하여 국가재정 투입의 적정규모와 기간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현 발행지원 방식은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국비 지원을 받는 구조이므로 발행규모 대응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발행에 필요한 재정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25~33.

## 【개별 사업 분석】

### 1

####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의 개선과제

##### 1-1.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부세 산정 방식·인센티브 체계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최근 3년 간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여금은 32~35조원 수준이며, 2019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67.2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2.1조원 규모
  - 행정안전부는 행태적 요인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축소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수요자체노력에 ‘예산집행노력’ 항목 신설(2020년도), 2021년부터 반영 예정

###### 나. 분석의견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태적 유인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설계를 변경할 필요

##### 1-2.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개선과제

###### 가. 현 황

- 최근 3년 간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여금은 32~35조원 수준이며, 2019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67.2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2.1조원 규모

###### 나. 분석의견

- 수요 자체노력 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는 동 분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영 지표는 인건비 절감 지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정책 수단(특별교부세 활용 등)으로 해당 지표의 목적 달성 필요

### 1-3. 지방교부세 교부시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지방교부세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보장하고자 지방교부세가 분기별로 고르게 교부되도록 규정
  - 실제 행정안전부는 매년 보통교부세를 월 1~2회, 부동산교부세를 연 2회, 소방안전교부세를 연 4회에 나누어 교부

#### 나. 분석의견

- 교부세의 교부시기가 법률에서 정해진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교부시기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 필요

### 1-4.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하는 재원
  - 동 교부세의 2021년 예산안은 1,377억 6,9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취지와 의의를 고려하여 이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교부세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고 상품권 발행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 편중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34~51.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면밀한 실소요 계상에 근거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휰스, 방지턱, 횡단보도, 신호기,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953억 2,500만원

나. 분석의견

- 실소요액을 면밀하게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합동점검단 및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역별 특성과 시설현황에 대응하는 장비·시설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52~57.

3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부처협력 사업으로 추진필요 등

가. 현 황

-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은 신종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예측 및 차단 기술개발, 첨단기술을 활용한 격리대상자 관리 및 치료시설 운영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49억원

나. 분석의견

- 기초데이터 확보부터 실증, 현장적용의 전 단계별로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다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이므로 부처협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
- ‘신종감염병 해외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 타 부처 연구개발 과제와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58~62.

## 4

##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개별비축창고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필요

## 가. 현 황

- 재난에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동원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비용 147억 5,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약 197종의 자원 중 거점센터·비축창고에서 통합관리 할 내역 기준 마련 등 활용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현행화 미흡, 자원 성능부족 및 노후화, 재난유형별 소요자원의 객관적 정보부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병행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63~66.

## 5

##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사업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집중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센터 및 카페 등 소통공간, 체육·문화·편의시설 등의 조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포인프라 조성·확충사업 신규편성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20억원

## 나. 분석의견

- 기존 지역사회 활성화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지역별 소통공간’ 등과 지방자치단체별 커뮤니티센터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67~70.

6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사업 국가망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사업은 10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망에 28GHz의 5G를 도입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ISP를 구축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205억원

나. 분석의견

- 정부 내에서도 전국망 주파수대역(3.5GHz/28GHz)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보안이 우선순위인 국가망에 대한 28GHz 주파수대역 5G 통신망 도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71~73.

7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의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여, 지역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 계층 등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442억 1,000만원

나. 분석의견

- 지역방역일자리는 기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의 생산적 일자리 제고계획 취지와 달리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신규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74~78.

## 8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사업 단말기 보급계획 보완 필요

## 가. 현 황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은 소방, 경찰, 군 등 8대 분야 333개 재난대응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자가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운영비 1,035억 8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2021년 3월 완료될 예정이나 재난대응기관의 단말기 확보가 미흡하므로, 기관별 단말기 적정공급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재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79~82.

## 9

##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일경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유형(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을 신규로 편성
  - 2021년 신규유형인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은 783억 6,700만원

## 나. 분석의견

- 지역 포스트코로나대응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추진체계 상 필요시 기존 일자리사업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므로 기존 사업의 세부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83~86.

10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개소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은 집중호우 시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112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은 개소별 위험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사업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소 간 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87~90.

11

**풍수해보험 적정가입률 확보를 위한 유인재설계 및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 풍수해보험지원 사업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91억 5,100만원

**나. 분석의견**

- 풍수해보험은 임의보험의 한계와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제도설계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의 유인체계 재설계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91~96.

## 12

##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가. 현 황

- 노후 유도선현대화 사업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2023.2.4.기준) 유선·도선의 다량 폐선이 예상됨에 따라 선박 대체건조에 따른 민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분에 대해 이차를 보전해주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2억 5,000만원

## 나. 분석의견

- 노후유도선 현대화 사업은 당해연도 업체의 경영난 악화 등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하여 상당규모의 불용이 예상되고, 2021년도에도 사업여건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액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97~100.

## II

## 인사혁신처

### 【주요 현안 분석】

#### 1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 가. 현 황

- 인사혁신처의 교육프로그램은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이러닝센터, 공무원인재개발,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
  - 관련 사업들의 2021년 예산안 총액은 229억 8,700만원

##### 나. 분석의견

- 중장기적으로 행정환경과 교육여건의 변화 및 AI 학습플랫폼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의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10~113.

## 【개별 사업 분석】

1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현 황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은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65억 5,2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은 이용자의 실수요, 콘텐츠 품질보장 및 안정적 서버운영의 가능성과 소요예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AI의 학습 편향성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14~118.

2

### 공무원 연금대부사업 적정이율 검토 및 관련규정 정비 필요

#### 가. 현 황

- 공무원 연금대부사업은 공무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기금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추진하는 기금 사업
  -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공무원연금대부사업은 사업목적과 시중은행 대출이율을 고려하여 연금대부 대출이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규정 정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19~122.

III

경찰청

【주요 현안 분석】

1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 관련 고려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를 고려한 협조체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업무 소관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인단속장비를 무상대부받아 관리·운영

나. 분석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의 규모와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치 위치 선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

1-2. 무인단속장비 운영규모 확대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2021년도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1,039억 6,300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222억원(27.2%)이 증액 편성

나. 분석의견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운영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관리·운영 주체로서 연차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보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31~136.

## 【개별 사업 분석】

### 1 과태료 수납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가. 현 황

- 2021년도 과태료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7억 9,100만원(0.7%) 증가한 6,996억 700만원

####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도 무인단속장치 확대 설치를 감안하여 단속건수 증가를 예상하고 우편료를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 편성하였으나, 과태료 과목에는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과소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37~140.

### 2 비대면연수 확대 및 국외출장 탄력적 운용 필요 등

#### 가. 현 황

- 동 사업은 ODA사업으로서, 각 내역사업에는 수원국 실무급 또는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경찰청·국과수의 전문가 파견 및 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포함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베트남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초청 연수 중 일부는 비대면연수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출장 예산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편성된 공사비가 이월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41~144.

3

경찰대학 증축사업 집행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 2019년 3월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에서야 설계가 완료됨. 이에 따라 2019년도 설계비 중 5억 5,400만원이 2020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 41억 600만원은 10월 현재 전액 미집행인 상황

나. 분석의견

- 경찰대학 증축 사업은 설계가 지연되어 2020년 10월 현재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공사 계약도 연도 말 체결할 계획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1년도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45~147.

4

뺑소니 신고포상금 사업 일원화 필요

가. 현 황

-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 소관 세부사업인 교통안전활동 사업에 ‘뺑소니 신고포상금’ 내역사업을 편성하여 포상금을 지급

나. 분석의견

- 뺑소니 신고포상금 지급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사업은 경찰청 사업에 대한 보충적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실질행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48~150.

## 5

##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청사 방호 계획 수립 필요

## 가. 현 황

- 정부는 군 현역입영대상 확충을 위해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의무경찰(이하 “의경”이라 함)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경을 감축하여 2023년 6월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
  - 2021년 예산안에는 경찰청 및 지방청 방호를 위하여 공무원 168명에 대한 신규 채용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으나, 255개 경찰관서의 경우 방호인력에 대한 인건비 신규 반영 내역은 없는 상황

## 나. 분석의견

- 의경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여 출입통제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도 의경 감축 규모를 감안할 때 경찰청사 방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방호인력 수급 방안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51~153.

## 6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차질없는 헬기 보험계약 체결 필요

## 가. 현 황

- 헬기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헬기 보험료는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5,100만원(300%)이 증액된 48억 6,8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2021년도 4개 부처 합동으로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 이므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헬기 운용을 도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54~156.

## 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1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데이터개방 포털시스템 별도 운영 필요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선거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사업을 신규편성
  - 동 사업의 2021년의 예산안은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운영비용 4억 6,100만원

#### 나. 분석의견

- 국가선거정보 개방포털시스템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통합·연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62~166.

## 【개별 사업 분석】

1

###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선거정보시스템 관리경비는 관련 정보화사업으로 이관 필요

#### 가. 현 황

- 대통령 선거관리 사업은 2022년 3월 시행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선거 경비 일부를 계상한 172억 400만원 편성
  - 동 사업예산 중 선거정보시스템 전산운영비용으로 26억 7,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대통령선거관리의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부내역은 대통령선거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 중 이므로 해당 사업으로 이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67~170.

2

### (재외선거관리 사업) 홍보효과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 홍보예산 편성내역 재검토 필요

#### 가. 현 황

-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준비 및 재외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 국제공항·항공기 시설물 등을 통한 재외선거 제도·홍보예산으로 16억 600만원 편성
  - 2021년 예산안은 홍보수단별로 국제공항 광고 및 항공기 광고 4억원, 언론매체 5억 1,100만원, 인터넷이용홍보 3억 1,200만원 등 편성

#### 나. 분석의견

- 재외유권자의 홍보활동 평가결과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제공항·항공기 이용 홍보예산 증액의 적정성과 기타 매체별 홍보예산 편성 비율 재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71~173.

3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외국 선거·정치제도연구사업의 해외연구관 제도 지속필요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사업은 국내·외 선거정치제도 연구 및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내역사업으로 해외연구관 운영, 외국 선거제도 및 선거법 연구, 외국 선거정치제도 자료수집, 외국 선거정치기관 교류사업 예산으로 구성
  -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1억 4,600만원

나. 분석의견

- 해외연구관 운영사업은 연구결과물이 직원연구관 운영 및 연구용역 사업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고, 공모절차 없이 위촉하면서 장기 재위촉률이 높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재외국민의 의견을 발굴한다는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필요성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74~178.

4

(위법행위 예방활동)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예산의 통합 편성·관리 필요

가. 현 황

-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예방·안내 활동 및 조사를 통해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예방·단속활동을 위한 경비로 구성
  -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143억 7,900만원

나. 분석의견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은 지원단의 업무범위와 역할이 동일함에도 선거관리와 위법행위예방활동사업에 별도 편성하고 있으므로, 통합 편성·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79~182.

## V

## 소방청

## 【주요 현안 분석】

## 1

## 지자체 소방장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 1-1. 지방자치단체 장비보강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및 자원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소형 사다리차 확충 사업 및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차량을 보강하기 위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소형 사다리차 확충 사업 57억원, 산불전문진화차 확충 사업 37억 5,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지자체 장비보강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전국 소방기관의 장비예산 재원이 가급적 단일한 재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기금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

## 1-2. 소형 사다리차의 경쟁체계 조성 및 안정적인 보급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소형 사다리차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형 사다리차를 보강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57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최근 유사 제원의 소형 사다리차는 단일 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및 특장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업체 간 경쟁체계 조성 및 안정적인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

### 1-3. 산불전문 진화차의 조달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 진화차를 보강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37억 5,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산불전문 진화차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조달가능성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선금만 반영하는 한편, 2023년까지의 연차별 확보분량을 2024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동 차량의 높은 구매·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유량을 검토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방지 대안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89~198.

## 【개별 사업 분석】

### 1

#### 소방헬기 통합정비 및 지휘 사업계획 보완 필요

##### 가. 현 황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7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실현 가능성 및 안정적 사업일정 관리를 위해 통합 항공정비대 구축 로드맵 보완을 검토할 필요
- 소방헬기의 통합정비 및 지휘통제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지자체 협의, 전국 단위의 소방헬기 배치 계획 등 소방헬기 통합관리·운용에 관한 사전준비 수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99~203.

### 2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 내실화 필요

##### 가. 현 황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은 소방청 관리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분석·연구하여 소방정책을 수립하기 신규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10억 1,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일반 연구용역 사업과 비교할 때,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검토를 통해 빅데이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204~206.



## 제10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문화·체육·관광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 예산안 분석

## 1-1. 할인쿠폰 사업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도입한 숙박 쿠폰, 체육 쿠폰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하여 확대추진 한다는 계획인바, 숙박 쿠폰은 전년대비 142억원 증액된 432억원을 편성하고, 체육 쿠폰은 전년대비 58억원 증액된 180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0년 추경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할인쿠폰 사업이 재개될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추후에라도 할인쿠폰 사업의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할 필요

## 1-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등

## 가. 현 황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 12~49세)을 대상으로 월 8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5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32억 3,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예년에 비해 미사용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사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강구 필요

### 1-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 대비 25억원 증액, 전년 수정계획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11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2020.8.30.)으로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추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미사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27.

## 2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 2-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필요

## 가. 현 황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기관의 실무경험 축적기회 및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9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고용충격 대응 차원에서 올해보다 연수단원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20년 280명→'21년 545명)한다는 계획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도 예산과 참여자 수 대폭 확대에 상응하여 정규직 전환 성과를 높이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2-2. 일자리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통기록유산의 보존 및 국역, DB 구축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국의 국학 관련 근대 기록유산 조사·수집을 통해 중·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전통문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전통문화 분야 청년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창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위 사업들은 일자리사업으로 보임에도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28~38.

### 3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구조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가. 현 황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계획안을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의 감소를 반영하여 법정부담금은 전년대비 22.2% 감소한 5,347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전년대비 30.4%를 증액하여 3,00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급감함에 따라 관광기금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39~44.

### 4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에 두 개의 신규 '세부사업'에 대하여만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거쳤는데,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지원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5년 간 100억원 이상사업 포함)임에도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내역사업'을 발견할 수 있음

##### 나. 분석의견

-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 대상을 국고지원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100억원 이상 포함)인 세부사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내역사업까지도 적극 확대하여 무분별한 보조사업의 예산요구를 차단하고 신중하게 보조사업을 신설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5~48.

## 【개별 사업 분석】

### 1

####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실적행를 제고 노력 필요

##### 가. 현 황

-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역사의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4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적행 실적이 부진하고, 2020년에도 실적행이 부진하여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9~54.

### 2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분석

##### 2-1.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확대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 논의 필요

##### 가. 현 황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은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에 전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중 공모를 통해 25개관을 선정하여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올해 추진하는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확대추진과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 2-2.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의 단계적 확대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82억원을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2021년과 2022년에 동일하게 80개씩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목표개소 수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신규사업 1년차에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5~62.

## 3

##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가. 현 황

-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사업은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려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17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사업은 3년 간 총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지 검토하고, 동 사업예산을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3~65.

## 4

##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실행률 제고 노력 필요

## 가. 현 황

-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4억원이 증액된 184억원 편성되었는데, 1차 문화도시의 2년차 지원금 105억원과 2차 문화도시의 1년차 지원금 75억원 등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실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올해 실행 지연상황과 지자체별 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6~70.

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분석

5-1. K-컬처 페스티벌,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온라인 개최 가능성에 대비한 사업계획 마련 및 올해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 필요

가. 현 황

- ‘K-컬처 페스티벌’ 사업과 ‘모꼬지 코리아’ 사업은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모꼬지 코리아)하고, 한류축제를 활성화(K-컬처 페스티벌)하여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려는 사업
  - K-컬처 페스티벌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고, 모꼬지 코리아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1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도 K-컬처 페스티벌과 모꼬지 코리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변경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효과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바,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온라인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

5-2.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추진 시 세심한 계획 마련과 추진체계 확립 필요

가. 현 황

-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한류 확산 국가의 신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음악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문화산업 교류를 증진하려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15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내용의 범위와 자부담률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 주도의 한류확산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71~79.

## 6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분석

## 6-1.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 논의 필요

## 가. 현 황

-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은 한류콘텐츠를 실감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공간을 해외에 조성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4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0년 신규로 추진되는 동 사업이 현재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6-2.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관광거점이자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VR·AR게임, K-pop 공연체험,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제작하여 구현하려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0억원이 감액된 16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0년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의 추진경과를 보면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추경에서 예산의 상당액이 감액되는 등 면밀하지 못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0~86.

7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제작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제작 지원 사업은 온라인 K-Pop 공연 제작·중계 전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온라인 K-Pop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29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온라인 K팝 공연 전문 스튜디오 조성에 200억원과 온라인 K팝 공연 제작 지원에 90억원으로 구성

나. 분석의견

-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온라인 공연장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의 온라인 공연장 활용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7~90.

8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은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의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7억 2,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 예산에 새롭게 반영된 ‘범국가적 핵심과제 집중 홍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는 홍보사업을 파악한 뒤 집중홍보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중심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91~93.

## 9

##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사업은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의 협력을 지원하고 방한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을 통해 지방방문을 활성화하려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2억원이 증액된 47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내년에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는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94~98.

## 10

##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예산의 감액조정 필요

## 가. 현 황

- 2020년 제3회 추경 당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51개소를 친환경 시설로 재구조화할 경우 총사업비를 826억원으로 산정하고, 연차별 투입계획을 '20년 393억원, '21년 216억원, '22년 217억원으로 제시
  - 2021년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시설 재구조화 예산안은 당초 연차별 투입계획 상의 216억원보다 많은 393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0년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년 2차년도 사업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원래의 연차별 투입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99~102.

## II

## 문화재청

### 【개별 사업 분석】

#### 1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실집행 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도 지정지구내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의 신·개축 및 가로경관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73.1%)됨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실집행률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4~116.

#### 2

#### 광화문 월대 등 복원 사업의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 가. 현 황

-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경복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도로이설, 역사광장 조성 등)를 추진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원 감액된 27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2019년 중단 이후 최근 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인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여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7~120.

## 3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비귀속된 발굴유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유물 수장고 및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69억 3,0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페터널을 문화재 수장고로 활용하는 사실상 첫 사례인데, 세 곳의 건설공사를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이 추진일정과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1~124.

## 4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 가. 현 황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평상시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재난 시 실시간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는 14억 8,7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드론 스테이션 기술 도입은 공공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문화재청은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드론 운용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정비 등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5~128.

5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주제로 공연, 체험, 전시 등 국내외 방문객 대상 축전,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320-02목)으로 추진하는 ‘세계유산축전’과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330-01목)으로 추진하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나뉨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변경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유치하기 어려워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비대면 프로그램 기획 등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9~132.

## 제11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I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소비활성화 관련 예산안 분석

## 1-1.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은 코로나19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현 황

-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외식활성화캠페인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1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670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내내역사업은 2020년 대비 사업물량을 확대하였으므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감염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1-2.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의 시행경과 및 성과 등을 반영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가. 현 황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은 농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롭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경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 사업의 추진경과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1-3.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개선 필요

#### 가. 현 황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시범사업

#### 나. 분석의견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개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6~25.

## 2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계획안 분석

## 2-1.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선택형직불제 활성화 필요

## 가. 현 황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2019년까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밭농업직불제 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던 농업직불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

## 나. 분석의견

- 공익직불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택형직불제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된 재배면적 조정의무 구체화 필요

## 2-2. 친환경축산을 증진하기 위한 축산직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가. 현 황

- 공익형직불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나. 분석의견

-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대상 농가가 105호에 불과하며, 2021년 예산안도 37개 농가에 집행할 것을 계획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 축산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6~35.

3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 분석

3-1.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의 특수대학원 설립 일정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

나. 분석의견

- 사업이 착수한 해에는 특수대학원의 설립 및 신입생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실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교육훈련 사업은 특수대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기한을 고려하지 않고, 항목별 예산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결과 출연금 항목 간 집행 실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3-2.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사업단 설립을 통한 사업관리 철저

가. 현 황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은 스마트팜 관련 중·장기산업기술개발을 위한 2021년 신규 사업

나. 분석의견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단의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36~44.

## 【개별 사업 분석】

### 1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규모 조정 필요

#### 가. 현 황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동자원화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800만원이 감액된 106억 9,200만원

#### 나. 분석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2021년도 계획안에 2개소분의 2년차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자는 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45~47.

###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사업의 계획 수립 철저

#### 가. 현 황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사업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사업
  -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25억 5,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 편성 절차를 준수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48~53.

### 3

#### 정부양곡매입비의 체계적인 매입단가 산출 필요

##### 가. 현 황

-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사업은 공공비축양곡, APTERR 이행용 양곡의 비축을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1억 5,000만원 증액된 8,467억 3,3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쌀값변동대응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쌀값의 추이를 반영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를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54~57.

### 4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장비가동률 제고 필요

##### 가. 현 황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억 9,600만원이 증액된 453억 2,0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2022년까지 410억원의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31억원의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장비가동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활용실적 제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58~62.

## 5

##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현 황

-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은 노동집약적·관행농법(경험)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데이터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고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8억 8,000만원 증액된 147억 2,0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사업추진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3~68.

## 6

##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가축·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억원 증액된 285억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은 실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9~71.

7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은 대출금 상환의 안정성 제고 필요

가. 현황

- 산지유통종합자금의 내역사업인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은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449억 4,8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은 대출금 상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 및 사업추진체계 내실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2~73.

8

에코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은 기존 사업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황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에코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생균제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9억 9,200만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무상으로 생균제를 보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설계 및 추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4~77.

## 9

##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의 ISP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 가. 현 황

- 농촌용수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질 자동측정을 통해 수질 감시, 분석 및 예측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155억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은 예산안 산출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ISP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ISP 시행경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8~80.

## 10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현 황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사업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9억 400만원이 증액된 120억 3,5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의 조성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의 성과지표 정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81~86.

11

유휴농지자원조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휴농지자원조사 사업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신규 귀농·청년 창업농 농지 수요 등을 목적으로 농지 확보방안 수립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2021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어 10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유휴농지자원조사 사업은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내역사업을 통해 파악한 사유지를 유휴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은행 사업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87~90.

12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200억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 예산안이 편성된 15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신규지구인 반면,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1~94.

## 13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예산액 적정규모 조정 필요

## 가. 현 황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은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가축 구제역·AI 등의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등을 매몰한 매몰지를 옮기거나 소각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보통의 토지로 복원함으로써 침출수 유출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
  -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4,700만원이 감액된 82억 9,900만원

## 나. 분석의견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한 사업량의 연내 소화가 불투명한 만큼, 2021년도 예산액의 적정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5~99.

## II

## 해양수산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사업 관련 분석

##### 1-1.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설비를 설치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출금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3,8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출규모, 대출평잔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 1-2. 친환경 관공선 건조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0.1.1.)으로 공공분야에서 신규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 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친환경선박 15척 건조를 위한 930억 1,5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친환경관공선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하이브리드방식의 친환경 관공선 착공이 2021년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순찰선 4척 건조와 관련하여 설계비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16~128.

## 2

## 수산공익직불제 분석

## 가. 현 황

-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86억 6,700만원 증액된 514억 7,9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1년 신규 도입된 경영이양 직불 등 3개 직불제도의 경우 지급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
-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의 경우 친환경축산직불 등 일부 직불제의 경우 사업 대상 농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적정한 유인구조를 설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9~134.

## 【개별 사업 분석】

### 1

####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필요

##### 가. 현 황

- 산지위생안전 시스템 구축은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 및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온유통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장비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4억 6,700만원 증액된 49억 5,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과다 우려로 사업 공모 신청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산지유통시설지원 세부사업의 청정위판모델 구축 내역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어 사업간 통합·조정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35~139.

### 2

####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은 생분해성어구, 친환경부표 등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연안지역 방치 폐각을 자원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7억 6,500만원이 증액된 262억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규모를 반영할 필요
-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되어있는 친환경부표 보급 계획 수는 최근 5년간 보급지원한 친환경부표 수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보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40~144.

## 3

##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안전대책 마련 및 e-Nav 선박단말기 적기 보급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 사업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e-Nav) 및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 136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
- e-Nav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LTE-M을 이용한 첨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인 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단말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2,100만원이 감액된 32억 8,8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PS-LTE 방식 등이 동일 주파수 대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전파간섭이 우려된 바 있으므로, 기지국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
- 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은 LTE-M 기지국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LTE-M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므로 단말기가 적기에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45~149.

4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개선 필요

가. 현 황

-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5억 100만원 증액된 5,219억 4,9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일부 사업대상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사업계획상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촌뉴딜 300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지역별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할 필요
-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지원 개소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50~155.

## 5

### 항만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은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 필요

#### 가. 현 황

- 항만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위험화물을 자동으로 검색·탐지하는 컨테이너 통합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 4,0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항만에서 실제 컨테이너 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관세청과의 협이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내실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되지 못할 우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56~160.

## 6

###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및 IoT 장비 보급간 상호연계 필요성

#### 가. 현 황

-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컨테이너를 개발,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신규로 15억 100만원이 편성
- 물류 IoT 장비 보급 및 활용지원 사업은 화물의 실시간 위치·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테이너 부착형 센서 모듈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신규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 나. 분석의견

- 컨테이너 부착형 IoT 장비 보급을 2021년 신규로 실시하면서, 이를 대체할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기존 IoT와 스마트 컨테이너 간 호환이 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61~163.

7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은 시행경과 등을 반영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410억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의 시행경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홍보 등에 있어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64~168.

## III

## 농촌진흥청

## 【개별 사업 분석】

## 1

##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의 자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 황

-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림 관련 탑재체를 개발(4호)하기 위한 사업

## 나. 분석의견

- 농촌진흥청은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의 사업자연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80~182.

## 2

##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역할 분담 검토 필요

## 가. 현 황

-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농림위성을 활용한 영상 수집 및 생산,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24억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위성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83~186.

3

**스마트온실의 건축일정을 고려한 사막형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 사막형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은 UAE 현지에 건설되는 스마트온실에서 작물생산성을 실증하는 등 사막형 스마트팜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40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사막형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온실의 건축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온실의 건축 일정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87~190.

4

**농림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은 다부처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 부처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림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은 농업 관련 치유요소를 활용하여 헬스케어를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농림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과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필요
-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91~195.

## 5

## 북부원예출장소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 가. 현 황

- 북부원예출장소 구축 사업은 원예특용작물의 기후변화(이상 기상) 및 북부지역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연구 수행을 위하여 북부원예출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0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8억 5,2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북부원예출장소구축 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가 동시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96~200.

## IV

## 산림청

### 【주요 현안 분석】

#### 1

####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효과성 규명 필요

#####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모니터링 결과 고려 필요

###### 가. 현 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주거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8억 4,400만원이 증액된 706억 7,200만원

###### 나. 분석의견

- 산림청은 동 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할 필요

#####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실외·옥상정원 및 실내정원 등 소규모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

###### 나. 분석의견

-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그 사업의 주요내용이 실내외 정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의 정원조성관리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1-3.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현 황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5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도로를 제거하거나 좁히고 보행로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12~220.

## 【개별 사업 분석】

### 1

#### 변상금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 징수조치 실행 필요

##### 가. 현 황

-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림의 무단점유, 무단벌목, 산불피해원인자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입
  - 산림청은 2016년부터 2014년 수납액 22억 8,400만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예산을 매년 동일하게 편성

##### 나. 분석의견

- 변상금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대규모 불납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미비하므로, 산림청은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채권압류 등 적극적 징수조치를 실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21~223.

### 2

####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의 성과검증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휴공간(3m×3m 내외)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같은 52억 4,000만원

##### 나. 분석의견

-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었고 실집행이 부진한 만큼, 성과평가 및 사업 진척도 등 사업성고가 확인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24~227.

## 3

## 스마트 헬스케어(R&amp;D) 사업의 타부처와 유기적 연계 필요

## 가. 현 황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 사업은 산림 자원 내 주요 치유 인자를 활용하여 치유환경 재연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52억 8,4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해양수산부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28~230.

V

해양경찰청

【개별 사업 분석】

1

무인헬기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필요

가. 현 황

- 무인헬기 사업은 해상임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장비를 장착한 무인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며, 무인항공기 운용 사업은 무인헬기의 항공보험 가입, 검사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각각 2021년도 예산안에 20억원, 3억 4,6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아직 무인헬기 조종인력과 운용경험 등이 부족하므로, 무인헬기 운용 및 인력양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39~242.

2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 적정 예산규모로 조정 필요

가. 현 황

-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도입으로 노후 유도선의 운항이 금지됨에 따라 노후 유도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자에게 건조자금 용자액에 대한 대출이자율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억 2,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유도선사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수요가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규모로 조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43~245.

## 3

##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 일대에 정비창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94억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132억 4,900만원

## 나. 분석의견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정비창의 규모가 축소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해양교통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계획 변경소요가 있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46~249.



## 제12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I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1-1.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중장기적 효과 제고 필요

## 가. 현 황

- 한국판 뉴딜 사업 전체 예산안 21조 3,047억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2조 3,068억원(10.8%)
  - 일반사업 9,237억원(40.0%), R&D사업 7,121억원(30.9%), 금융지원사업 6,610억원(28.7%)

## 나. 분석의견

- 한국판 뉴딜 R&D 지원이 기업의 사업화 및 신규투자로 연결되어 재정투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사업별 성과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 한국판 뉴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수요 및 민간기업의 역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진될 필요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산업단지 태양광용자 수요 면밀한 파악 필요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연구중단에 따른 연구비 매몰 방지 필요
- 재정투자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단기 일자리를 넘어 민간수요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수요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전선로 지중화지원 사업의 민간투자 촉진 가능성 검토 필요

## 1-2. 사업계획 보완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 사업효과와 불확실성이나 집행실적 부진 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 보완 필요

### 나. 분석의견

- 과거 유사 사업에서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시범사업 활용실적 부족 개선 필요
  -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의 과거 에너지자립섬 성과 부족 문제 반영 개선 필요
- 2020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지연 등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
  -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 사업은 2020년 9월 기준 실집행률 5.7%
  -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2020년 예산 146억원 중 2020년 8월 기준 240만원 집행

## 1-3. 그린 뉴딜 분야 보급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 가. 현 황

-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보급 사업의 연계 필요

### 나. 분석의견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정부 R&D 사업 성과를 활용한 설비보급 확대 필요
- 환경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지원 사업은 보급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이 상이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향후 기술개발의 결과가 보급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할 우려
  - 클린팩토리기술개발 내역사업과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의 연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29.

## 2

##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1.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 간 차별성 확보 필요 등

## 가. 현 황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해소 및 미래시장 선점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38억 8,600만원 증액된 8,866억 3,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내역사업 간 지원품목 중복을 최소화하여 사업별 지원대상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
- 핵심관리품목을 기존 100개 품목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통한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품목 간 지원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할 필요

## 2-2.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사업의 DB활용도 제고 및 민간분야와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가. 현 황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투자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투자 정보조사와 기술투자 시 필요한 기술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13억 9,8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DB공개 대상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해외기업 기술검증은 시장에서 민간전문기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기관과 동 사업의 지원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

## 2-3. 철강산업 재도약기술개발 사업의 장비운영비 조정 필요 등

### 가. 현 황

- 중소 철강회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철강 가공기술, 철강부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지원 장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166억 9,0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실증지원을 위한 장비구축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나 장비운영 재료비와 인건비가 12개월분 계상되어 있어 장비구축 일정에 맞추어 장비운영비 일부 조정 필요
- 친환경 자원순환 부문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검토 부족 및 사업화 난관이 예상되어 민간 기업의 참여가 부족할 우려가 제기되었으므로 사업 수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0~44.

## 【개별 사업 분석】

### 1

#### 전선로지중화지원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운영기준 개선 필요 등

##### 가. 현 황

-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선을 지중화하기 위한 자치단체보조 사업이며, 2021년도 계획안은 200억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안전확보가 시급한 지원대상이 선정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필요
- 그린뉴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온실가스저감·재난안전 대응 등의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45~51.

### 2

####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의 과거 성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명확화 필요

##### 가. 현 황

- 고압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AMI를 보급하여 수요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도 계획안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304억 2,500만원 증액된 1,586억 2,5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AMI보급 시범사업에서 AMI 활용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저탄소 사회 구현 측면에서 사업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52~56.

3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의 소형도서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실효성 점검 필요

가. 현 황

- 전기 미공급 도서·벽지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결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6억 400만원 증액된 1,372억 9,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을 통한 소형도서의 에너지자립화는 에너지자립섬 등 기존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성과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5년간 총사업비 1,30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57~62.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수요를 고려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비를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054억 6,000만원 증액된 5,740억원 편성
  -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 예산 2,0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용자는 2021년 예산에 비해 용자 수요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자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63~67.

## 5

## 녹색혁신금융 사업의 녹색보증 실효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비를 융자·보증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505억원 증액된 87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녹색보증 사업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은행의 위험부담률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68~71.

## 6

##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국내유전탐사 자원조달 불투명 등

##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30억 9,500만원 증액한 465억 7,8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6-1광구 중동부 탐사 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과 정부출자금, 민간투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나, 사업비 마련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 6-1광구 중동부 탐사 사업은 2020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되었으므로 동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보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72~76.

7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준비 필요

가. 현 황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에게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3,00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포항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포항시 재산피해액의 2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이와 연계한 시행령 개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77~81.

8

신산업진출 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명확화 및 사업재편에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신산업 진출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 지원 목적의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10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명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이후 승인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지속할 경우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증 필요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일부는 정부 R&D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재편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지원기업별 연구비 지원 한도 설정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82~89.

## 9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의 국토부와 연계 강화 필요 등

## 가. 현 황

- Level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및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200억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Level 4 단계의 자율주행차량은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의 타 자율주행기술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 데이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90~97.

## 10

##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의 후속사업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거나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5,000만원 증액된 156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할 본 사업의 선행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본 사업이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1차 탈락 이후 2차 조사예정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98~101.

11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 사업의 후속 사업 연계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대학연구소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원 증액된 65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한 핵심원천기술의 산업계 공급을 위한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성과 활용 방안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 사업 재기획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연구비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02~105.

12

중견기업상생혁신 사업의 상생목적 부합 지원대상 선정 필요

가. 현 황

- 중견·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 300만원 증액된 46억 9,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일 기업그룹에 속한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한 과제를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 상생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있었으므로 향후 상생목적에 적합한 지원대상이 선별되도록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06~107.

## 13

전략제품창출 글로벌K-팹리스육성 기술개발 사업의 차별화된  
지원대상 선정 필요

## 가. 현 황

-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60억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매출액이 3년간 평균 200억원 이상인 팹리스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나, 이들 기업에게 다양한 정부 R&D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기업에게 정부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
- 자유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업별 자체 R&D투자여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08~113.

## 14

## 파워반도체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의 출연 근거 보완 필요

## 가. 현 황

- SiC 기반의 파워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40억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웨이퍼양산 목적이 포함된 시설장비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양산시설의 경우 출연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14~117.

15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준비 미흡

가. 현 황

- 기존 주력산업 분야와 AI 기술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5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세부 사업기획을 완료하지 않고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상세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18~119.

16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의 건물DB 간 연계강화 및 수요확인 필요

가. 현 황

- 영세 중소기업장의 의무진단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 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3,600만원 증액된 145억 7,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의무진단 건물과 노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 구축 효과를 제고할 필요
- 추경예산을 통한 건물 에너지진단 신청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건물 에너지진단 수요를 제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20~123.

## 17

##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수소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임대 지원하고, 수소거래소 구축 및 수소유통감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소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35억 9,6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수소거래소 구축은 수소 공급 및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을 통한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거래소 운영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 튜브트레일러 지원은 제한된 물량으로 특정 수소충전소 등을 임대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
- 수소유통감시센터 운영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성을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24~128.

## 18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의 시스템 연계강화 및 국비보조를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송·배전망에 이미 접속된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도 계획안은 60억원을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가 전력거래소,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의 시스템별 획득된 발전 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전달장치를 보조하는 사업을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29~134.

19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 중 CO2 포집·활용 기술 개발 사업의  
재기회에 따른 사업지연

가. 현 황

- 가스발전 및 가스보일러 사용 확대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저비용 CO2 포집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9,000만원 증가한 56억 5,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과제 선정 지연에 따라 2020년 10월 현재 신규과제 선정 공고 중에 있으므로 2021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2021년 예산안은 2020년에 선정된 2개 과제에 대한 2차년도 11개월분의 연구비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35~138.

20

클라우드기반 디지털엔지니어링 통합빅데이터구축 사업의 ISP  
미수립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엔지니어링 기업의 데이터 디지털화와 엔지니어링 SW사용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8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없이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므로, 다른 정보화 사업 등과 사업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39~141.

## 21

**무역보험기금의 사고율 추이 및 보험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가. 현 황**

-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일 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이며,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31억원 감소한 4,0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무역보험의 코로나19로 인한 사고율 변동 추이와 보험금 지급에 따른 기금배수 변동 및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역보험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42~148.

## 22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엑스포 효과 감소를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 검토 필요****가. 현 황**

- 두바이엑스포 참가에 따른 한국관 건축·전시·운영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5,800만원 감소한 124억 4,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바이엑스포 참가인원 감소 및 투자효과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과 투자효과를 고려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 두바이엑스포 참가지원 총사업비는 엑스포 개최일이 당초 2020년 10월에서 2021년 10월로 1년간 연기되며 총사업비가 사업착수 당시 419억 5,200만원에서 471억 200만원으로 증가 예상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49~151.

## II

##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문제점

##### 1-1.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가. 현 황

-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9,000억원 정 부출자하여 총 1조 8,80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

###### 나. 분석의견

- 현재 조성·운용 중인 자펀드의 투자여력, 2021년도 회수재원의 예상규모, 투자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금융위원회의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여력과 2021년 신규 조성되는 뉴딜펀드의 결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2. 신규 조성 및 운용 자펀드의 적절성 검토

###### 가. 현 황

- 자펀드 유형 중 버팀목펀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

###### 나. 분석의견

- 버팀목펀드는 기존 자펀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투자대상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펀드구조를 설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64~173.

## 2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문제점

## 2-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에게 스마트공장의 신규 구축과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4,152억 2,400만원

## 나. 분석의견

-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저해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2-2.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부품 교체,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44억 1,0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사후관리 비용지원 이후 스마트공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4~181.

3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신규 R&D사업 편성 부적절

가. 현 황

-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신규 R&D사업은 일반회계 6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1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총 499억 5,600만원이 편성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90억원
  -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장비전문 인력 등의 R&D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85억 9,000만원

나. 분석의견

- 단기적 사업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거나 유사 R&D사업의 반복적 편성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을 거쳐 추진할 필요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2019.11)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단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
  -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사업은 선행사업인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사업 종료 이후 2년간의 단기 유사사업들을 반복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저해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82~187.

## 【개별 사업 분석】

### 1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안 조정 검토

##### 가. 현 황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원격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2,880억원

##### 나. 분석의견

- 단기간에 계획수량만큼 사업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특히 서비스 분야별 공급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연차별 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 물량 및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88~194.

### 2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 가. 현 황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 상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에 22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당초 사업목표와 달리 신기술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상관없이 상용화된 기술 보급 위주로 추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기술 적용 사업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95~200.

3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문제점

3-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시장 진출교육과 컨설팅, 온라인 채널 입점 지원, 가치샵시다 플랫폼 및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733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축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가치샵시다)’의 소상공인 입점업체 및 매출액 성과가 저조하고, 민간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되므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
- ‘소상공인 전담셀러’ 사업은 소상공인의 참여가 목표 대비 저조하고, 판매품 목별 전담셀러 풀(pool)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3-2.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 시범사업 성과 확인 후 본사업 추진여부 등 결정 필요

가. 현 황

-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은 중소슈퍼의 무인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67억원

나. 분석의견

- 2020년 시범사업 추진 중으로 아직 사업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과 확인한 후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사업 전환 시 조속히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수요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3-3. 혁신형 소상공인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및 홍보비 적정성 검토

#### 가. 현 황

- 혁신형 소상공인 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27억원

#### 나. 분석의견

- 소상공인에게 성공한 CEO가 직접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성공CEO 풀이 부족하므로 사업물량을 확대하기 전에 성공CEO 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예산에 비해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홍보비 적정성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01~212.

4

규제자유특구사업 문제점

4-1. 중장기 계획 수립 부재 및 재정사업 효율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으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지정된 특구에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 2021년도 예산안은 5개 세부사업에 총 1,444억 9,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중장기 계획 수립 없이 추진되어 연차별 사업목표, 추진전략, 재정소요계획 등이 미흡하므로, 조속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추가 특구 지정에 따라 매년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총사업비, 국고지원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4-2. 규제자유특구사업 목적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가. 현 황

- 2021년도 예산총칙안 제12조에 따른 목적예비비 규정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목적예비비 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분석의견

-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이미 2019년부터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써 예비비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예비비를 배정하는 경우 R&D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검토 등이 생략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우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4-3. 규제자유특구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성과 저조 우려

#### 가. 현 황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평균 4~5년이고,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R&D·비R&D사업의 국고 지원기간은 2년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R&D사업 2020년 8월 기준 연구기관 실집행률 22.5%
  -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정보화사업 내역사업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모두 지연
  -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R&D사업 일부 특구에서 연구장비·시설 구축 지연

#### 나. 분석의견

-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R&D·비R&D 사업들의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2년간 지원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
- 특구별로 실집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지연으로 사업기간 내 성과창출 어려운 특구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및 연차별 예산안 재배분 등 사업계획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13~228.

5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한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AI활용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134억 2,500만원

나. 분석의견

-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할 중소 제조기업의 선정기준 및 지원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29~232.

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계획 미흡

가. 현 황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은 노후 일반산단이나 공업지역 등 낙후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스마트 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4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주요 사업지역에 대한 파악 부족, 수요조사 미 실시, 선정기준 구체화 미비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선행할 필요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유사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간 연계·통합을 통한 효율화 방안 등 사업효과 제고방안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33~237.

## 7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점포경영 체험실습 및 창업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189억 5,000만원

## 나. 분석의견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가운데 체험점포 구축·운영은 최초 체험점포 구축비, 연간 운영비 및 연평균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38~241.

## 8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사업 성과점검 후 예산지원 필요성 검토 및 법적 근거 없는 출연 문제

## 가. 현 황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사업은 지정된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구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14억 1,600만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되어 우선구매 지원대상이 되고, 유사제도들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혁신구매목표제의 성과를 점검한 후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방식 변경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42~249.

9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등

가. 현 황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R&D, 컨설팅, 시장판로 개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27억 2,5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세부 바우처 유형인 도약지원과 스케일업의 선정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바우처 지원방식의 사업성과에 대해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50~253.

10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가. 현 황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원 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재보증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2,368억 8,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부출연금 예산안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보증공급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54~257.

## 11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중복보증 검토

##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 출연,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하는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각각 4,000억원, 4,30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보증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활용하는 미래성장성평가를 운영할 계획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 관리 및 업무범위 차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58~260.

## 12

##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수요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1,063억 6,100만원

## 나. 분석의견

-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유형은 지원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수요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61~264.

### III

## 특허청

### 【개별 사업 분석】

#### 1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적정 예산안 규모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가. 현 황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금융권에서 IP담보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해당 담보IP를 매입·활용함으로써 금융권의 회수리스크 경감 및 IP담보 대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92억 6,500만원

##### 나. 분석의견

- IP담보 대출의 부실을 추이, 2020년도 실집행액 저조에 따른 이월예산의 규모, 담보IP 매입 손실보전을 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안 규모 검토 필요 및 향후 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74~279.

#### 2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은 40대 이상 퇴직인력의 기술전문성 및 창업 아이디어와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연계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17억원 신규 편성

##### 나. 분석의견

- 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발굴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80~283.

### 3 모태조합 출자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200억원

#### 나. 분석의견

-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어 연내 IP 투자시장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의 효과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활한 자펀드 결성을 통한 적기 투자를 위해 사업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84~286.

### 4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유사사업과의 연계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23억 6,200만원

#### 나. 분석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부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간 연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기술유출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체계 구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87~290.



## 제13장

## 보건복지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 1

## 생계급여 사업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생계급여 사업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4조 6,078억 6,400만원 편성
- 2017년 11월부터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
  - 2021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중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추가로 약 18.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

## 나. 분석의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가구는 2020년 1월 기준 76,351가구나 실제 수급가구 수는 135,586가구로 59,235가구의 차이가 발생
  - 예상가구 수가 실제 수급가구 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상 가구의 추계 시점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자료상의 2015년 기준 비수급빈곤층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수급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의 변동에 기인한 예상 수급자 추계의 부정확성 등에 기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긴급 복지 대상가구 증가 등 생계급여 수급 가구 확대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대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2~14.

2

의료급여 재정지출 관리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 의료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7조 6,804억 6,100만원 편성
-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은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 모델 개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15억 3,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최근 5년간(2015~2019년) 의료급여 재정 규모는 2015년 6조 787억원에서 2019년 8조 4,931억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8%이며, 2021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의료급여의 지출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10조 1,460억원으로 예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의료급여 재정 지출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과 관련한 사례관리 강화, 공급기관 관리 강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사업 수행에 있어 지원 단가를 사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단가를 편성하고,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지역의 의료·돌봄 서비스 활용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5~20.

## 3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 가. 현 황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및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국내 유망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자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
  - 20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 예산안은 각각 627억원, 687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1~25.

## 【개별 사업 분석】

### 1

####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실시 등을 통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가. 현 황

-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14조 9,634억 6,800만원 편성
-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였고, 2020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전체수급자인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나. 분석의견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3,482명에서 2020년 6월 5,551,471명으로 1,197,989명이 증가하였고,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지출 규모도 국비 기준으로 2014년 5.1조원에서 2020년 13.2조원으로 8.1조원이 증가
- 2020년 2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2020년에는 8개 시·군·구에 145억 1,8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2021년에는 7개 시·군·구에 139억 4,300만원을 편성
- 고령인구의 증가 및 노인 빈곤율의 심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초연금 금액의 타당성,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6~30.

## 2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활동지원기관 관리 강화 필요

## 가. 현 황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바우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4,990억 9,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활동지원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시에만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어 활동지원기관의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사후조치는 미미한 수준
-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사업관리의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31~34.

## 3

## 자활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가. 현 황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촉진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5,956억 3,4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포괄적인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 외에 자활 사업 참여자의 소득증가, 삶의 질적 변화 측정 지표 등 사업의 성과지표를 다양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35~37.

4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부처 협업사업  
특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초등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학교 내 돌봄교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안은 22억 9,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다수의 행정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 범위 및 재원 부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38~45.

5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유형별 관리 필요**

**가. 현 황**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으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608억 8,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어린이집 확충 방식 중 지방비 부담이 많은 신축 방식보다 매입 유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축 유형별 실제 착수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소요기간이 상이하여 유형별 관리가 필요
- 어린이집 신축 방식에 대하여 유형별 단가산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46~50.

## 6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활동의 통합적 운영 필요

## 가. 현 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대국민 정책홍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인식 전환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14억 8,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사업은 홍보의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여 콘텐츠 공유·공동제작 등으로 상호협력 및 통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51~53.

## 7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연계기관과의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개별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723억 8,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연계 기관 수 164개, 연계 복지서비스 수 2,691개 등으로 연계 기관과의 운영비 분담 검토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운영 계획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54~57.

8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사업은 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한 기금운용 인력 풀(Pool) 확대와 기금운용 인력의 유지 방안을 제고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13억 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강사 섭외 등이 용이한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신규 우수 기금 운용 직원을 충원하여 교육대상자 풀을 확대하는 등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58~60.

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수혜율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바우처 방식)하여 저소득층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183억 3,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지원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61~64.

## 10 가정양육수당 단가의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6세 영유아(만 86개월 미만)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7,607억 7,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 이후 동일하여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단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65~67.

## 11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부적절

### 가. 현 황

-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복지, 건강, 주거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52억 2,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사업 예산에 편성하거나 별도 내역으로 편성하여 예산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2021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의 수행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8억 2,140만원)를 별도 사업인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에 편성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68~71.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각각 2억 3,000만원, 3억 2,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72~76.

1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운영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가. 현 황

- EMR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0년 6월 1일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6억 5,3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의원급 1,660개소에 대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에 대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아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동 사업을 통해 인증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77~81.

## 14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인력의 실습 기반 및 국가시험 실기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내외 보건의료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연수센터(의료기술시험연수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46억 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가 2021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비는 실제 공사 착수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설계 완료 이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82~85.

## 15

##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의 국산화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감염병 체외진단에 활용되는 진단장비, 검체채취키트, 진단키트 핵심소재의 국산화 및 전반적인 성능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65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20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지연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안에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12개월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86~88.

16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운영 사업의 신규 추진 시기 적절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운영 사업은 한국 화장품 산업을 대표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체험·소개할 수 있는 뷰티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2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주요 대상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감하였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 사업에 투입할 예산의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시기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89~92.

17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매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87억 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20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지연되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도 예산안에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12개월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93~95.

## 18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일관성 없는 산출의 부적절성

## 가. 현 황

-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 지원 사업은 기증활성화 및 유가족 예우를 위해 뇌사자로서 장기 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34억 9,7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근거를 살펴보면, 뇌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지원금, 유급휴가 보상금 등 각 항목별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예산이 엄밀하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96~100.

## 19

## 유치기관 관리 사업의 차질없는 지방이양 필요 및 관련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유치기관 관리 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 유치실적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4억 8,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는 유치기관 관리·감독 관련 사무의 2021년 지방이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01~105.

20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가. 현 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필요한 치료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확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들의 2021년도 예산안은 각각 126억 3,600만원, 45억 9,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자살 예방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동 사업 수행 시 개소수 확대뿐 아니라 내원 자살시도자의 사업 참여 동의율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을 통한 2020년 인력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목표치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2021년에도 107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므로 인력확충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06~111.

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유아흡연예방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유아흡연예방사업은 유아 대상 흡연위해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24억 5,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유아흡연예방사업은 교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18,000명 증가한 3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12~115.

## 22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국고보조율의 지역보건법 제24조 준수 필요

## 가. 현 황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20억 7,1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생활SOC 복합 시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75%인데, 이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비용의 보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16~119.

## 23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비목 편성 필요

## 가. 현 황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지역사회의 보건·건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3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에서 매년 다수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20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나 해당 예산이 전액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변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20~122.

24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가. 현 황

-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소아전문응급센터 또는 소아전용응급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42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운영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23~128.

2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안의 사업비 구성 변경 필요

가. 현 황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발표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300억 9,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 예산안의 사업비 구성을 변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29~133.

## 26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

#### 가. 현 황

-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국가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을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3,477억 8,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예측이 매년 부정확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 편성 내역에도 보건소 이용률이 과다예측되어 있으므로 실제 이용률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34~138.

## 27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 설비를 갖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33억 4,3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연내 확충을 가정하고 편성하였으나, 연내 확충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39~142.

## II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별 사업 분석】

####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규모 확대 및 통합 운영 방안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6억 1,700만원이 증액된 548억 6,7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앞서, 급식소 지원 수요에 따른 규모 확대, 통합 운영 등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52~155.

#### 2 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HACCP 적용 준비 필요

##### 가. 현 황

-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적용 사업은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 HACCP 기준을 적용·관리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수출국과 긴밀한 협의 유지,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교육, 설명회 등으로 동사업이 법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에 HACCP 기준 적용 근거 마련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56~159.

## 3

##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준비 철저 필요

## 3-1.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등 대비 필요

## 가. 현 황

-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컨설팅, 국제포럼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9,800만원이 증액된 71억 6,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사업 주체 변경(생물의약품연구센터→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으로 인하여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필요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사업의 별도 세부사업 편성 검토 필요

## 3-2.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제도·규제 등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18억 5,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의 기술 개발 등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 기업의 제품화 지원 등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과 행정적·제도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60~170.

4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사업 집행 관리 등 철저 필요

가. 현 황

-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사업은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제주도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식재·표준품 연구실적 등이 취약한 아열대성 생약 자원의 과학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생약자원의 확보·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1억 9,300만원 증액된 156억 3,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동 사업은 2018년 사업 추진 이후 연례적으로 이월이 많고 집행 저조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71~173.

## 제14장

## 환경노동위원회



## I

## 환경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 가. 현 황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176억 5,800만원 대비 1,224억 2,500만원 (38.5%) 증액된 4,400억 8,3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그린뉴딜 사업의 주요 과제로서 재정투입 규모 및 보급계획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환경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부지선정 및 확보 제약, 관련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문제는 충전인프라 환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
- 환경부 및 관계부처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평가·인증제도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충전소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2020년 8월말 기준 환경부의 예산으로 설치된 26기의 수소충전소 중 17기에서 누적 총 66건의 설비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설비 고장 건수 또한 증가 추세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2~22.

2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가. 현황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수도물 공급 전 과정을 감시·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809억 2,500만원(66.6%) 증액된 4,525억 5,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수도물 유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수도물 유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연, 단계별 사업비 확정 지연으로 각 지자체별 인프라 구축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집행 차질 발생
  - 지자체 대상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추진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 방안 강구 필요
-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시범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 내역사업을 확대 시행할 경우, 사업의 대상, 범위 및 국고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환경부는 상수도 공급체계가 열악한 급수취약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ICT 기반 용수공급시스템 도입 시범사업(2021~2022년) 추진 계획
  - 급수취약지역의 수질개선 효과 및 물복지 개선효과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3~31.

## 【개별 사업 분석】

### 1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공장이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 및 생산 효율·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공정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101억원 대비 202억원(200.0%) 증액된 303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제조공장 모델이 정립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지원대상 선정과정, 설비 설치 등 실제 사업 추진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32~37.

### 2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의 LPG차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21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 150억원 대비 150억원(100.0%) 증액된 30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개선시키고, 사업대상자의 LPG차 전환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38~43.

3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 지원 확대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사업은 청정대기·자원순환·물산업 등 환경산업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 대비 1,110억 7,800만원(55.5%) 증액된 3,110억 7,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지원 분야 중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44~49.

4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및 민간 비용분담 강화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 재활용품 비축사업은 재활용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적체될 우려가 있는 폐비닐, 폐지, 유리병 등 재활용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비축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21년 예산안에는 2020년 추경예산 94억원 대비 166억 4,700만원(177.1%) 증액된 260억 4,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신규 추진 중인 재활용품 비축기지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비축기지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재활용시장의 안정화라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재활용품 비축사업 등 공공비축을 통해 혜택을 입는 민간부문의 재원 부담을 통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50~57.

## 5

##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은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
  - 2021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000만원(△ 24.2%) 감액된 15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기초적인 사업구상을 바탕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후, 예비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증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58~63.

## 6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대 노력 필요

## 가. 현 황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되었던 기존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체계의 통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통합 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 2021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216억 5,400만원 대비 70억 1,100만원 (32.4%) 증액된 286억 6,5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매년 적용대상 업종 및 허가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 제도가 안정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 등 측정분석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4~69.

7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완료 필요**

**가. 현 황**

-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사업은 펌프·밸브·유량계·수도미터 등 유체 기자재의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다양한 성능시험을 지원하는 인·검증 수행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의 유체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8,300만원(355.2%) 증액된 72억 8,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0~73.

8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 규모 제시 필요 등**

**가. 현 황**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21개 대표 국립공원의 보호·보전,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생활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21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추경예산 1,418억 9,900만원 대비 873억 8,500만원 (61.6%) 증액된 2,292억 8,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타당성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 규모 등 제시 필요
- 기존의 국립공원 시설 사업과 2020년 신규 추진 중인 내역사업들 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4~80.

## 9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한 수요 확보 필요

## 가. 현 황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7억 7,000만원(86.5%) 증액된 469억 3,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충분한 수요 확보 등 집행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81~85.

## 10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가. 현 황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생태계 훼손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지원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단절된 전국의 생태축과 생태계를 연결·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21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7,500만원(68.0%) 증액된 211억 7,8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행률을 제고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86~90.

1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억원(41.2%) 감액된 3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의 집행가능성 및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91~99.

## II

## 고용노동부

## 【주요 현안 분석】

## 1

##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분석

## 1-1.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 지원인원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가. 현 황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목표 지원인원은 총 59만명(I 유형 40만명, II유형 19만명)
  - 저소득층 29만명, 청년 23만명, 중장년층 2만명 및 저소득층 비경활인구 5만명

## 나. 분석의견

- 2021년 목표 지원인원(59만명)이 유사 사업의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목표 지원인원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1-2. 일경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가. 현 황

- 2021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도입(체험형 2.3만명, 인턴형 0.6만명)

## 나. 분석의견

- 저소득층 등 참여자가 양질의 인턴 사업장에 알선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계획 마련 필요(현 계획상 인턴 사업장 취업시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 수 등 투입지표 외에 일경험 지원 사업 수행의 효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현 계획상 성과지표는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수)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13~124.

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2-1. 구직급여 지출 증가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수지 관리 필요

가. 현 황

- 2021년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192억원 흑자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경우 재정수지는 2조 3,744억원 적자

나. 분석의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지출 확대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출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재정수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함으로써 고용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여력 개선 필요
  - 2021년 구직급여 지출이 2020년 당초 계획 대비 19.3% 증가하였고, 2021년 이후 특고 고용보험 확대시 2022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하여 2025년 수지 적자 발생 예상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을 개선하는 등 구직급여 효율화 노력 필요
  - 2017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하락

2-2. 사업 편성 기준 수립 등 근본적인 노력을 통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2021년 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는 3,852억원 적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금을 제외한 경우 재정수지는 9,572억원 적자

나. 분석의견

- 특정 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편성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노력을 통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25~140.

## 【개별 사업 분석】

### 1

### 청년디지털일자리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IT 활용가능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건비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단년도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나 2021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2021년도 예산안 4,676억원 편성(5만명 지원 목표)

#### 나. 분석의견

- 월 지원금 등 지원수준이 타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원요건으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채용 후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 지원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1~144.

## 2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설계 필요 등

## 가. 현황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 2,145억 400만원 편성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내역사업은 디지털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도입되어 현재 시범사업 수행 중이며, 2021년도 예산안 1,390억 3,200만원 편성(1.7만명 지원 목표)
  - ‘생계비 지원’ 내역사업은 저소득 실업자가 장기 직업훈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한시 사업으로 신규 도입되어 2021년도 예산안 75억원 편성(2,500명에 대하여 50만원 × 6개월 지원)

## 나. 분석의견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경우 시범사업에 비해 목표 지원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 훈련참여자에 대한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말 3,600명 지원을 목표로 62개 과정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 본사업의 목표 지원인원은 17,015명으로 지원 인원 대폭 증가
- 생계비 지원 사업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 허용 여부,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본격 시행) I 유형 참여자(저소득층 25만명 등)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은 장기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2천만원 한도, 연 1%)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5~150.

## 3

## 법률 개정 추이를 반영한 두루누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 심사 필요

## 가. 현 황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8,103억 4,700만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 594억 4,300만원 편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90일) 기간에 대한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 2021년도 예산안은 2,907억 3,200만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9명에 대한 예산액 85억 6,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출산전후급여 예산안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과 연동되는 것이므로, 상기 법률안에 대한 개정 심사 추이 및 개정 과정상 논의를 고려하여 예산안 검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1~154.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1년도 예산안 312억 2,600만원 편성(목표 지원인원 5,000명)

나. 분석의견

-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 지원인원에 미달하고, 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배분인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5~157.

5

신규 사업인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 지원 등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신규 도입
  - 2021년도 예산안 52억 9,000만원 편성(목표 지원 기업 500개소)

나. 분석의견

-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 수요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021년 시범 운영되는 전문 컨설팅이 기본 컨설팅과 차별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8~163.

## 6

## 고용창출장려금 각 유형별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 가. 현 황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2021년도 예산안 1,860억 4,7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지원 유형 중 고용촉진장려금 및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유형에 대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장년고용지원 유형은 과거 집행 실적 등 고려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4~170.

## 7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수요 적극 발굴 필요 등

## 가. 현 황

-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함
  - 2021년도 예산안 1,270억 9,2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상승('19년 90.2%) 등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신규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가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요 적극 발굴 필요
- 정보화 사업 진행시 이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절차를 거치는 등 정보화 사업 추진시 예산안 편성상 사전절차 준수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71~176.

8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및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의  
연내 집행가능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가. 현 황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유형은 산업별 협회·단체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며, 2021년도 예산안 76억 9,600만원 편성(2,700명)
  -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 유형은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훈련을 지원하며, 2021년도 예산안 69억 300만원 편성(1,800명)

나. 분석의견

-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및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훈련수요 변화 가능성 및 2020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77~180.

9

폴리텍 신증년 특화과정 및 하이테크 과정 취업률 개선 필요

가. 현 황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은 폴리텍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교육 훈련 수행
  - 신증년 특화과정은 40대 이상 신증년 실업자에 대하여 고숙련화 및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숙련 일자리로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과정(2021년 900명 훈련 목표)
  - 하이테크 과정은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 대하여 10~12개월의 고급 직업훈련(NCS 3~5단계)을 통한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과정(2021년 1,095명 훈련 목표)

나. 분석의견

- 2018년 신규 도입된 신증년 특화과정 및 하이테크과정은 교육 내실화 통해 취업률 개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1~184.

## 10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가. 현 황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은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취업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118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 필요
  - 현재 성과지표는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의 취업률임(2019년 30.8%)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5~187.

## 11

## 신규 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점진적 사업규모 확대 고려 필요

## 가. 현 황

-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의 교체, 위험공정·장비의 교체·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신규 사업임
  - 2023년까지 위험기계·기구 총 12,277개 및 뿌리산업 사업장 3,210개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 3,634억원 편성(~2023년 지원 목표의 40% 수준)

## 나. 분석의견

- 신규 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023년까지 장기적 계획 하에서 수행되는 사업인 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 물량 증대 방안 고려 필요
  - 교체 대상 사업장의 수요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표 교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23년 100% 기준으로 '21~'23년 각각 40%, 30%, 30%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분배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8~190.

### III

## 기상청

### 【주요 현안 분석】

#### 1

#### 기상예보 및 태풍예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 1-1. 기상예보 관련 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가. 현 황

- 기상청은 기상예보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 82억 1,300만원 대비 11억 600만원 (13.5%) 증액된 93억 1,900만원 편성
  - 국가태풍센터 운영,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정보화),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항공항행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나. 분석의견

- 기상예보 관련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강수유무 정확도는 산출방식 상 지표 값이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수맞힘률(POD)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 개선 여부 및 개선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2. 태풍예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 개선 노력 필요

###### 가. 현 황

-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은 태풍재해 대응 강화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고품질의 태풍 예보·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본 예산 8억 7,400만원 대비 1억 6,200만원(18.5%) 증액된 10억 3,6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태풍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태풍예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99~205.

## 【개별 사업 분석】

### 1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 가. 현 황

-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은 지상·고층기상관측장비의 첨단화, 장비교체 및 확충을 통해 관측공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기상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63억 9,600만원 대비 13억 9,700만원(8.5%)이 증액된 177억 9,3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관측환경 개선 사업대상인 5등급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정교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06~209.

### 2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통한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등

#### 가. 현 황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기상·지진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센터와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준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8,800만원(520.4%) 증액된 67억 8,1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18.4)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형식승인 업무가 수행될 예정이므로, 형식승인으로 수납되는 수수료에 대한 세입예산 계상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10~216.

3

기상용슈퍼컴퓨터의 추가적인 도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가. 현 황

-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사업은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슈퍼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전기, 기계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156억 5,900만원 대비 133억 2,600만원(85.1%) 증액된 289억 8,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17~220.

## 제15장

## 국토교통위원회



## 【주요 현안 분석】

## 1

## 주거복지로드맵 연차별 공급계획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층별로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90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건설형·매입형·임차형 등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연간 공급목표를 설정함

## 나. 분석의견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21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총 7만호이나,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예정물량 중 일부 단지는 2022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공급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4~17.

2

공공임대주택 중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분석

2-1.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적정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유형의 하나인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출용자) 사업 계획 안에 편성된 공급계획 물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8,700호→15,000호)

나. 분석의견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목표 물량이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으나, 동 유형에 대한 신혼부부의 입주 수요가 저조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있는 타 유형으로 전환하는 등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2. 다가구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유형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유형의 하나인 공공리모델링(출용자) 사업은 매입한 기존주택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과정을 거쳐 청년(리모델링I, 리모델링II),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공공리모델링 사업여건의 개선 등을 토대로 입주자 선호에 부합하는 매입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공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신규 추진된 리모델링II 유형은 종전의「공공주택 특별법」상 매입대상이 '기존주택'으로 한정되어 당초 취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매입이 제약됨
  - 고령자리모델링 유형은 고령자 특성에 따른 전용면적 증가 및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단가로 인해 매입가능 물량이 부족하고, 원룸형 구조의 좁은 면적이 고령자의 선호와 부합되지 않아 장기공실이 발생함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8~27.

## 3

##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분석

## 3-1. 준공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2억 8,700만원 증액된 9,179억 6,400만원이 편성됨
  - 2021년도 준공예정사업은 58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준공예정사업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집행예정금액 및 집행잔액예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사업비 전액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2021년도에 준공 예정인 일부 도시재생사업지의 경우 연례적 집행부진 등으로 인하여 잔여사업비 대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업지에 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 3-2.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 수요예측 적정성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현 황

-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은 쇠퇴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리츠, 민간 등 사업시행자에게 기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025억원 증액된 2,234억 5,0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계획안 대비 실제 융자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향이 있으므로, 2021년 계획안에 편성된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획대로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필요

### 3-3. 도시재생지원(출자)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도시재생지원(출자) 사업은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리츠 등 사업시행자에게 기금출자를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300억원 증액된 1,58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계획된 신규사업의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도시재생모태펀드 자펀드 조성 및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 공모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8~45.

## 4

## 신공항 건설 사업관리 철저 필요

## 4-1.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른 집행 필요

## 가. 현 황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영남지역의 늘어나는 장래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이 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억 6,500만원 증액된 282억 6,5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증위원회의 검증 종료 후, 검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4-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강화 필요 등

## 가. 현 황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증대, LCC(low-cost carrier)의 성장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공항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7억 1,000만원 증액된 473억 3,0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간 이견 등으로 인해 고시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쟁점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등 갈등관리 강화 필요

#### 4-3.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정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한 사업추진 필요

##### 가. 현 황

-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전북권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새만금 개발촉진 등을 위해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원 증가한 120억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각 공정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46~59.

## 5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거점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 나. 분석의견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자체세입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입·세출의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0~63.

## 6

## 국토교통연구기획(R&amp;D)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 가. 현 황

- 국토교통연구기획(R&D) 사업은 국토교통분야의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R&D 사업의 추진 타당성, 연구목적, 연구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기획을 수행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국토교통연구기획(R&D) 사업의 경우 신규 기획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에 편성된 출연금이 사실상 차년도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연도가 일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4~66.

## 【개별 사업 분석】

### 1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정부출자수입 감액조정 필요

##### 가. 현 황

- 정부출자수입(도시)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사업 출자금액에 대한 지분회수 및 배당수익에 대한 수입과목
  - 2021년 동 과목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억 9,500만원이 증액된 54억 500만원이 편성

##### 나. 분석의견

- 도시계정으로 출자한 5개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매입 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출자금액에 대한 지분회수 및 배당수익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정부출자수입을 적정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7~70.

### 2

#### 주택성능보강 집행가능성 재검토 필요

##### 가. 현 황

-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주택성능보강 사업대상인 화재취약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성능보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례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71~73.

## 3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차질없는 준비 필요 등

## 가. 현 황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 법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

## 나. 분석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 변경 및 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분쟁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건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던 임대차분쟁조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으로 다원화된 만큼 국민들이 이용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업무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의 회계처리방안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
- 동 사업은 현재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74~83.

4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가. 현 황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사업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역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주거지원 기능 등을 갖춘 종합벤처시설인 ‘혁신성장센터’ 건설을 위하여 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사업의 예산안 편성시 ‘조성원가’를 적용하였으나, 근거법령은 동 사업을 위한 보조대상을 ‘용지매입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할 필요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절차를 고려하여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4~88.

5

확대추진 계획인 수소도시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수소도시 지원 사업은 수소 활용기술 및 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소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수소도시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설계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증기간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9~92.

## 6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가. 현 황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 사업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연계협업과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규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연계협업과제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3~96.

## 7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현 황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및 환기시스템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나. 분석의견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 각 지역별·시설별 수요정도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업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7~103.

8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등

가. 현 황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물류센터의 첨단설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하여 이차보전(2%)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대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이나, 현재 인증기준이나 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중이므로, 조속하게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수요, 대출실행시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4~109.

9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사업은 디지털 물류기술을 활용한 신물류서비스의 도입 및 실증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내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의 사업관리·운영 등을 담당할 기관의 지정방식 및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0~114.

## 10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필요

## 가. 현 황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아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을 구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천안물류센터 설계 과정에서 동 센터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5~118.

## 11

##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가. 현 황

-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거점에 수소화물차용 대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친환경 수소에너지 기반의 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화물차용 대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환경부 및 물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9~122.

12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사업은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 전용검사소를 구축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사업

나. 분석의견

-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을 위한 부지선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3~127.

13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 효과 제고방안 모색 필요

13-1. 군경 버스운전 자격취득 지원사업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군경 버스운전 자격취득 지원 내역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버스운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군경 운전인력의 버스운전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군경 버스운전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버스운전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동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율 제고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

### 13-2. 버스운전인력 견습비용 지원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현 황

- 버스운전인력 견습비용 지원 내역사업은 신규인력이 정규채용되기 전까지 실시하는 견습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버스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버스운전인력 견습비용 지원을 통한 버스운전인력의 고용유인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견습비용 지급기준 및 견습비용 지원업체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8~134.

## 14

###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예산배분비율 조정 필요

#### 가. 현 황

-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보조사업

#### 나. 분석의견

-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복합사업은 생활SOC 건설 공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1차년도에는 공사비 등 예산집행 소요가 적은 만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연차별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35~137.

15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주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위사업

나. 분석의견

- 신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전액 편성되어 있으나, 연례적으로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021년 계속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등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38~142.

16

한국형 UAM 그랜드챌린지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한국형 UAM 그랜드챌린지 사업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운항기준 수립의 핵심기반 확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UAM 실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1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UAM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정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또는 드론시험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43~147.

## 17

## ISP 용역 중인 국제항공 노선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예산의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 AI기반 국제항공 노선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항공노선에 대한 실시간 분석으로 특정 노선·시간·항공사의 노선운영 및 수요·공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나. 분석의견

- AI기반 국제항공 노선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0년 8월 말 현재 ISP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비를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ISP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을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48~150.

## 18

##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현 황

-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의 보급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

## 나. 분석의견

-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빈번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1~155.

19

일반국도 건설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가. 현 황

- 일반국도 건설 사업은 「도로법」 제10조제2호의 일반국도를 건설하는 단위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14억 8,000만원 증가한 1조 3,649억 8,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연례적으로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국도 건설 사업 중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2021년 계속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등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6~162.

20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은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교통혼잡·사고·물류비용 절감과 교통안전성·편의성 향상 등의 사회적 편익 창출 및 자율차 상용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2021년도에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인 국도 C-ITS 구축사업 및 지자체 C-ITS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63~167.

## 21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필요 등

## 가. 현 황

-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 건설 사업은 현 관제센터(서울)의 노후화 및 용량 포화에 대비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우발사태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

## 나. 분석의견

-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68~170.

## 22

##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필요

## 가. 현 황

-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은 동해선 미연결구간 확충을 통해 동해안권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철도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사업

## 나. 분석의견

-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이므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71~173.

23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 개선필요

가. 현 황

-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국민 교통비를 절감하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대상지역 확대에 맞추어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모바일 앱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동 사업목표가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성과지표를 추가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74~178.

24

뺑소니 신고포상금 집행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신고포상금 사업은 뺑소니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뺑소니사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보장사업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 뺑소니 신고포상금 사업은 경찰청의 교통안전활동 사업에 대한 보충적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사업 관리 및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일원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79~182.

##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개별 사업 분석】

#### 1 지방행정시설 이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가. 현 황

- 지방행정시설 건립 사업은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등 4개의 지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7억 1,700만원 증액된 160억 7,4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창의진로교육원 등 지방행정시설은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매각 또는 양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93~194.

#### 2 공무원 단기숙소 운영의 지속 여부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청사 이전 지원 사업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 기관의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5억 6,900만원을 편성

##### 나. 분석의견

- 단기숙소 운영은 세종시 지역 숙박시설 확보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95~196.

### III

## 새만금개발청

### 【개별 사업 분석】

#### 1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사업 방식 면밀한 검토 필요

##### 가. 현 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사업은 새만금 노출부지와 매립현장에서 강풍을 타고 물려오는 모래날림 피해로부터 새만금 배후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숲을 조성하는 2021년도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37억 5,800만원

##### 나. 분석의견

- 해송 식재비용 등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황사, 해풍, 모래날림, 염분으로부터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주택과 생업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04~207.

#### 2

####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철저

##### 가. 현 황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새만금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7억만원

##### 나. 분석의견

- 교육장비 도입 및 교육센터 주관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매년 300명씩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08~211.

## 3

##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연구결과물 활용 필요

## 가. 현 황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간의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18억만원

## 나. 분석의견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그 동안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12~217.

## 4

## 뉴스스크랩 경비의 비목 변경 필요

## 가. 현 황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정·운영하는 2곳의 뉴스 유통대행사 중에서 매년 1곳을 선정해 뉴스스크랩 용역을 위탁하고 있으며, 기본경비에 매년 동일하게 일반수용비(210-01목) 2,2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

## 나. 분석의견

- 기본경비의 뉴스스크랩 위탁용역비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로 계상할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18~219.



## 제16장

## 여성가족위원회



## I

## 여성가족부

## 【개별 사업 분석】

## 1

## 여성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가. 현 황

-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창업 등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2억 5,200만원이 증액된 677억 5,1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새일인턴 취업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요건의 효용성 검토, 고용유지현황의 장기적·지속적 관리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의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85~192.

## 2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운용 방안 개선 필요

## 가. 현 황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출연·지원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9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 지원 인력 충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상시 상담 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 인력 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빈번한 인력 교체로 효율성·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93~197.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364억 8,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행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사업 취지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점검 필요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98~201.

4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가. 현 황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0억 6,700만원이 증액된 456억 1,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1년 신규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및 지방비 재원 확보, 사전 절차 확인·이행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할 필요
  - 동 사업은 2019년 실집행률 18.7%, 2020년 실집행률 12.5%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많고 집행 저조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02~205.

## 5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돌봄공동체 지원 예산 분리 편성 필요

## 가. 현 황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돌봄 품앗이 구성 등 그룹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2억 1,200만원이 증액된 92억 3,800만원 편성

## 나. 분석의견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과 돌봄공동체 지원 예산을 분리하여 별도 편성 필요
  -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돌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부모 외의 지역 주민이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를 구성·참여하는 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돌봄공동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바가 없고, 사업 취지, 참여자, 운영 방식 등이 상이함.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예산 투입 효과 등 점검이 어려워 국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과정에서 비효율 초래가 우려됨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06~208.



## 집 필

**총괄** |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태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석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윤여문 홍선기 진달래 이강구  
안병후 윤성식 김은영 김유진  
이광근 이미선 고준혁 남희  
이은미 권순진 김성은 김정선  
김윤수 최경덕 정성영 정현하  
김수진 민성철 박은형 심성택  
오덕근 안태훈 변재연 이병철  
김손연 손동희 최준호 전수연  
김태은 박지성 김우림 김선영  
백경엽 문지은 이주호 이택균  
어예원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송은혜 자료분석지원요원

##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발간일 2020년 11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일권  
편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 케이에스센세이션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372-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